

20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6년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 2026. 4.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2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802호

| 목차 |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 1. 그간의 정책성과 3
- 2.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7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29

- 1. 법무부 일반현황 31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4

III. 세부 추진계획 45

- 전략목표 I.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47
- 전략목표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16
- 전략목표 III.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187
- 전략목표 IV.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243

IV. 환류 등 관련계획 297

-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299
- 2.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301
- 3.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302

【붙임】 305

- 1. 성과지표 현황 307
-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335

| 세부추진계획 관리과제별 목차 |

I.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47

1.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53
①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I -1-①)	57
②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 및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I -1-②)	62
③ 공정선거를 해치는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I -1-③)	65
④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I -1-④)	69
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I -1-⑤)	72
⑥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I -1-⑥)	76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79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I -2-①)	86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 이해도 제고(I -2-②)	91
③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I -2-③)	94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I -2-④)	97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I -2-⑤)	101
⑥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I -2-⑥)	104
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I -2-⑦)	108
⑧ 대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질서·법교육 프로그램 운영(I -2-⑧)	112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16

1. 인권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권가치를 실현한다 121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Ⅱ-1-①) 124

②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Ⅱ-1-②) 128

③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Ⅱ-1-③) 132

④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Ⅱ-1-④) 136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141

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사업 추진(Ⅱ-2-①) 147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Ⅱ-2-②) 151

③ 교정 접견 서비스 활성화(Ⅱ-2-③) 155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Ⅱ-2-④) 160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Ⅱ-2-⑤) 165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Ⅱ-2-⑥) 169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Ⅱ-2-⑦) 175

⑧ 재범 방지를 위한 수용자 맞춤형 심리치료 체계 강화(Ⅱ-2-⑧) 178

⑨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문성 강화(Ⅱ-2-⑨) 182

III.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187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192

① 미래변영 및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민법」 전면 개정 등 추진(Ⅲ-1-①) 198

②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Ⅲ-1-②) 202

③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Ⅲ-1-③) 206

④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Ⅲ-1-④) 209

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Ⅲ-1-⑤)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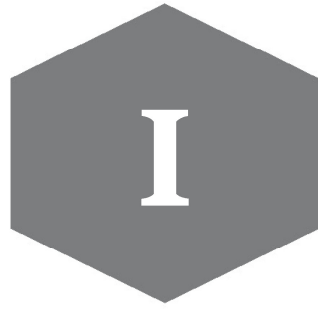
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사법」 개정(Ⅲ-1-⑥) 217

⑦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Ⅲ-1-⑦) 222

2. 국제법무 대응 시스템 강화로 국익을 수호한다	226
①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Ⅲ-2-①)	229
②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처·기업 등 국제법률지원 체계 구축 (Ⅲ-2-②)	234
③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제도개선(Ⅲ-2-③)	239

IV.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243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247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Ⅳ-1-①)	251
② 국가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 (Ⅳ-1-②)	254
③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Ⅳ-1-③)	257
④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Ⅳ-1-④)	261
⑤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Ⅳ-1-⑤)	265
⑥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Ⅳ-1-⑥)	269
2. 국격에 걸맞은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273
①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Ⅳ-2-①)	277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Ⅳ-2-②)	281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Ⅳ-2-③)	285
④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Ⅳ-2-④)	289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Ⅳ-2-⑤)	293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보이스피싱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의 피해재산 필요적 몰수·추징 등 규정 도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물가안정 침해 사범 집중 수사 등을 통한 민생침해 경제사범 엄단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 가동하는 등 주요 마약류 발송 현지에서 발송책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및 치료·재활·홍보·예방 등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 분야에 대해 엄단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추진 및 중대재해 사건 엄정 대응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위 법률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 요청('25. 8월)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안) 등 상세 의견 3회 제출('25. 9월~12월), '26. 1월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설정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해 대검찰청을 통해 중대 산업재해 사건 신속·엄정 수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25. 9월)

※ 중대재해사건 기소 건수 : '24년 41건 → '25년 97건

○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

-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형사사범 공조망 확충**

*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유럽연합 형사사범협력기구(Eurojust)와 정보공유·형사협력 등을 내용으로 업무협약 체결('25. 4월)

** 현재 범죄인인도조약 82개국, 형사사범공조조약 80개국, 수형자이송조약 76개국 체결

-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 면담 및 화상회의 등으로, 피해자 104명 상대로 투자 리딩 사기를 한 부부 범죄인 2명을 캄보디아에서 송환('26. 1월)하는 등 범죄인인도 실적 향상

※ '25년 범죄인인도 송환대상국 33개국, 송환 274명(전년 대비 송환 인원 94명 증가)

- 현지 출장 조사, 해외 IP 정보 회신,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요청, 피해자 부검결과·의료기록 요청,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외국에 있는 증거 수집을 위하여 다수의 형사사범공조

※ '25년 형사사범공조요청 총 1,305건(한국→외국 1,092건 / 외국→한국 213건)

○ 법률 개정 및 국제협력으로 범죄수익환수 철저

-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사기 범죄로 취득한 범죄피해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행기간에 취득한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추정('26. 6월 시행)

- 금융정보분석원(FIU),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아·태지역 범죄 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등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확대 강화

○ 부패대응 공백방지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범체계 구축

- 공중협박죄·공공장소흡기소지죄 신설, 사기죄 법정형 상향,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형법」 및 피해자의 증거보전서류,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등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 신분위장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시설지정 등을 포함한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확대하는 「특정강력범죄법」 등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형사사범체계 구축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 구축

○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1:1 전자감독 강화, 재범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심리치료·디지털분석 등 다양한 감독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

※ 성폭력 동종재범률 제도 도입 전 대비 1/20 수준으로 감소(14.1%→0.72%, '25년 기준)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시행 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 결과, 현재까지 보복범죄 피해사례 없음

○ 범죄예방정책국 주요 정책 홍보를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

-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 주요 정책을 유튜브, 숏폼 등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강화
- 프로야구 단체 관람,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관심 제고

○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기능 강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및 '딥페이크 전문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마약·도박예방 VR 교육 콘텐츠 도입 등 교육 전문성 확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비행예방 교육부 협력사업 추진, 경찰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활성화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개입 강화

○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학생 선호도를 반영한 직업교육 개편, 출원 후 학업 유지를 위한 교과교육 내실화, 도박·마약류 범죄예방 및 청소년 중독 문제 해소 노력, 인성교육 및 특별체험활동 강화 등 소년원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내실화

※ 장기 직업훈련과정 12종, 단기 직업훈련과정 9종, 체험형 직업교육과정 19종 → 총 40종으로 개편

※ 3개 기관(서울·전주·안양소년원) 총 5명 교사 파견(체육 3, 과학 2)

- 안산(여)소년분류심사원 신설('26년 개청 예정), 대전소년원 리모델링(중부권 여성소년원)·안양소년원 신축을 위한 예산 반영('26년 기본설계 예정) 등 만성적 과밀수용 상황 해결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추진
- ※ '25년 최대 수용률 : 안양소년원 188% 청주소녀원 169%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79%

○ 치료환경 개선 및 의료인력 충원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ISP(정보화 전략 계획) 실시('25. 5.)와 AI 기반 발달장애 피치료감호자 맞춤형 치료 환경 구축('25. 12.)
- 정신과 의사 충원율이 전년 대비 20.7%p 상승(45.3%→66%)하였으며,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 법정기준(60명)을 충족하였고, 의사 7명 보수를 인상(200~350%)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 '마약류사범 사범-치료-재활-연계모델' 운영,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마련시행, '약물분석실'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을 통해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안정적으로 관리
- ※ 고위험 대상자 재범률 : '23년 5.2% → '24년 5.0% → '25년 5.1%(목표치 대비 0.05%↓)

○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의 사회복귀 적응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 기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생활관을 4개 기관에서 전국 2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심리상담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집중사례 관리팀(26개팀, 86명)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2)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 인권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권가치를 실현한다

○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옹호 정책 총괄

-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 방안 마련('25. 8. 29., 관계부처 합동) 및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년~'27년) '24년도 이행실적 점검*

* 총 271개 과제 중 완료 12개, 추진중 258개, 지연 1개

○ 국제 인권기준과 국내 인권정책의 연계성 제고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25. 4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 국가보고서('25. 5월)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조치 보고서 제출('25. 7월), 법무부-인권위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25. 9월)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 사각지대 발굴·해소

- 정기실태조사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5년 35개 기관 실시

※ 개선조치 170건, 설문조사 2,954명, 직접면담 623명

- 인권실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 '화상조사시스템' 등을 활용한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및 구제

-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 및 구제를 위해 화상조사시스템 확대 구축

※ 구축현황 : '21년(57개소)→'22년(63개소)→'23년(69개소)→'24년(71개소)→'25년(73개소)

○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사건 예방

- 직렬별 인권감수성훈련, 검사 및 검찰수사관 대상 1:1 맞춤형교육, 내부 인권강사 역량강화 교육, 신입 인권강사 추가 양성교육, 외부 인권강사에 의한 기관방문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실시로 인권의식 함양

※ 교육실시 현황 : '21년(46회)→'22년(79회)→'23년(77회)→'24년(88회)→'25년(104회)

○ 피해 발생 초기부터 사회 복귀까지 회복의 전 단계에서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기반 조성

- (경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25. 3.), ▲유족구조금 피해자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 이상 보장(+22.1억), ▲구조금 분할지급제 도입('25.3.),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 안정비(+3.9억)를 신설하는 등 범죄피해자 생계안정을 위한 실질적 회복 지원 강화
- (법률)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의 수사·재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전담진술조력 서비스 강화(+0.8억), ▲여러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 구축(+19억),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인권주간 지정 등 피해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 (심리) ▲트라우마 치료 전문 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운영시간을 야간과 주말 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365스마일' 도입(+10.4억), 살인 유가족 기반 자조모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도입(+3.9억) 등 맞춤형 밀착 심리 지원을 실시하여 강력범죄 피해자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25년 817명 수료), 「아동학대 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신규 양성 및 교육 실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피해자 국선변호사 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연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및 보수교육 진행, 검찰청해바라기센터 등 시설 내부 민원실에 제도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강화에 기여

□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축 사업 추진

-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준공('25. 12월), 울산구치소('25. 8월), 진주교도소('25. 7월)·군산교도소('25. 9월)·순천교도소('25. 11월), 논산지소('25. 10월) 수용동 증축 등 신규 수용공간 확보를 통한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

○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맞춰 다양한 홍보 방식을 발굴·추진하여 교정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채널을 통한 적극홍보('24년 43,986명 → '25년 48,652명), 교정본부 '인스타그램 SNS 플랫폼' 구축('25. 4월), 인기연예인 명예교도관 위촉('25. 10월), 정책 및 교도관 처우개선 관련 주요 언론사 기획 취재(7건), 보도·설명자료 배포 다수

○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운영

- 변호인의 접견제도 개선 요청에 따른 업무상 효율성 개선 및 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등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1일 변호인 접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구치소 1개 호실 시범운영 실시('25. 10월 ~ '26. 4월, 6개월 간)
 - ※ ('25. 12월.기준) 등록 건수 : 136건 / 실시 현황 : 202건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재범고위험군 대상 '한국 수형자에 다면적 평가 시스템' 및 '교정처우를 위한 한국판 성범죄자 평가도구' 시행,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층 면접 확대를 통해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 완화
 - ※ 심층면접 ('21년 252명 → '25년 573명)

○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및 '사천희망센터' 신설을 통한 모범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력 향상
 - ※ 홍천희망센터('25. 2. 27.), 사천희망센터('25. 12. 8.) 신설
- 산업변화에 따른 취업 유망직종 직업훈련 신설 및 고급과정 확대 등을 통하여 출소 후 수용자 취업역량 강화
 - ※ 원주(교)등 2개 기관 반도체설비보전 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 과정 신설

○ 교정·교화 프로그램 활성화

- 피해자 공감교육 대상자 확대, 맞춤형 체육교육 실시 등 수형자 학과교육 강화와 함께, 가족관계프로그램 활성화, 보라미봉사단 사회봉사 확대 등 사회적 처우 다양화·활성화를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

※ 교정본부-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업무협약('25. 10. 2)

※ 보라미 봉사단 수해복구 활동 (전국 54개 기관 모범수형자 2,847명)

○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 정신질환자 집중 치료를 위한 민간전문가(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공직 파견 및 원격진료 환경 개선

※ 서울대병원 업무협약 체결 및 동부구치소 전문의 파견('25. 5월)

※ 원격의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여성 전용 원격의료실 3개 기관 신설('25. 9월)

○ 범죄유형별 특성 개선을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범죄유형별 가상현실(VR) 및 고위험 딥페이크 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범죄유형별 특성과 범죄유발요인 분석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수용자 심리상담 체계 개편을 통한 상담의 실효성 강화
- 긴급심리지원 고도화 등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마약사범 치료·재활 활성화

- 마약류사범 대상 전담교정시설 및 중독재활수용동 운영을 통해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내 재활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중독재활체계 구축

※ '25년 기준,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교정시설 5개 기관 운영

- 중독단계 수준별로 1:1 개입하는 개별메타인지 상담 및 자기주도적 중독재활 패턴을 체화하는 셀프케어 프로그램 도입 등 맞춤형 재활 실시

(3)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 전면 개정 추진

- 첫 번째 과제로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사법(私法) 관계의 기본이 되는 계약법 규정들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5. 12. 18. 국회 제출
- '24. 9월부터 '25. 9월까지 계약법 후속 과제로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저당권·유치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 예비초안 마련 '26. 2월 현재 검토위원회에서 검토 진행 중

○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 및 신뢰성 제고

- 전자공증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하고 신규 지정공증인 19인을 임명하는 등 전자공증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공증실무협의회' 및 '공증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공증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학계·실무계,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전국 공증사무소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공증인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4명의 공증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등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지속적인 환수소송 제기 및 소송지원활동을 통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국고손실 환수송무팀'(15. 9월 출범)을 컨트롤타워로 유관기관 및 검찰청·수행청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 상대 부패·비리, 공공조달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국고 손실에 대해 적극적·체계적 환수 소송 제기 및 수행
- '15년 이후 환수소송 757건(소가 약 6,678억 원) 제기 및 약 407억 원 환수 완료

○ 소송 장기화 방지를 위한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 송무교육 및 송무지도점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 행정소송 주요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한 송무 역량 강화
- 소송총괄관 회의 등 외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송무 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적극적 소송지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 방지 및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 하는 등 국민 권리 구제에 기여

○ 남북관계 개선 대비 법률업무 강화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남북관계 개선 관련 법적 쟁점 연구 등 남북관계 복원을 대비한 법제 기반 연구
- 통일법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변호사 및 예비 법률가 등 법조인 대상으로 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과정 개설·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인권교육 실시 및 법률상담, 지원변호인 등을 통한 법률지원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 지원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상사법」 개정

- 「상법」 1차 개정(25. 7월 공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하여 이사의 책임 강화 및 주주총회 내실화
- 「상법」 2차 개정(25. 9월 공포)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
- 파산채무자의 영업용 필수재산 파산재단 면제 근거 마련 및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지속 추진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우수한 법조인 선발 체계 구축

- 제14회 변호사시험 및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의 성공적 실시, '24년 첫 도입된 CBT 시험 방식의 정착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통해 법조인 선발 시험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

※ 수기시험 응시자 '24년 26명, '25년 8명('26년 출원자는 4명)으로 99% 이상의 수험생이 CBT 방식을 선택하여 실질적으로 제도 정착 단계

□ 국제법무 대응 시스템 강화로 국익 수호

○ 국제규범 성안·도입 추진 및 개발도상국 전수로 글로벌 스탠더드 형성 주도

- 법무 관련 주요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국제규범 성안 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성안 결과의 국내 도입 추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유럽평의회 인공지능위원회(Coe CAI), 국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OECD GPAI) 등

- 국제 중재·조정 활성화, 국제 공·사법 관련 전문 학술지 정기적 발간 등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으로서 아동반환을 지원하고 강제집행 제도개선 추진하여 장기 집행실패 사건의 집행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우리의 선진화된 법제 및 법제 정비 노하우를 전수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지원

○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국제법률분쟁 적극 대응,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 국민 권익과 국부 유출이 문제되는 주요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관리하며 정부 차원의 일관적 대응체계 확립 및 국부유출 방지 기여
 - ※ '25. 1월 구글·메타 등 개인정보 무단수집 관련 소가 합계 1100억 원 상당의 과징금 취소소송 1심 전부승소
-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법률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법률자문, 국가별 법제분석 자료 배포(UAE 일본, 브라질), 해외규제 동향분석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 무료 법률자문(407건), 국외 법률설명회(5회), 최신 주요 '해외규제 모니터링' 자료 발간(4회)

○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 소가 약 6.9조원의 론스타 ISDS에서 13년 간 취소절차까지 간 끝에 정부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낸 최초 ISDS 사건임('25. 11. 18. 선고)
 - * '12. 11월 ISDS 제기, 최초 청구액 약 6.9조 원

○ ISDS 제도 개선

-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기구 회의 참석 및 발표, 정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ISDS 제도 및 중재규칙 개선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제사회 논의에 기여함
 - * '25년 UNCITRAL 제50, 51, 52차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 회의 의제 관련 검토의견 4회 및 정부 의견서 3회 제출, ADR Conference 참석 및 ISDS 제도개선 발표(1회)

(4)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구현

○ 국익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25. 2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편의 방안 마련('25. 8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25. 8월), 크루즈 자동심사대 최초 도입('25. 12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확대(4개국 → 18개국)

○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

-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개선('25. 연중),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확대('25. 4월), 「K-STAR 비자트랙」 추진('25. 12월)
- 계절근로 프로그램 전문기관 지정·운영 추진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25. 연중),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39→90개)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25. 9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대응방안 마련('25. 12월)

○ 상시 단속을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보호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 체계 가동을 통해 역대 최대 단속 실적 달성(48,458명),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24년 39만→'25년 35만)
- 보호기간 상한 도입 및 외국인 보호위원회 설치 등 보호 업무체계 개편('25. 6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구제 방안 마련('25. 9월, 11월) 등

○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행('25. 1월), 개인 맞춤형 비자·체류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25. 5월),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 대상을 기존 제1금융권(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증권, 신용카드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25. 5월)
- 전국 22개 소속기관 노후네트워크(L2 보안스위치 223대, 광모듈 92대) 정비사업(1차) 완료('25. 11월), 지능형 출입국 이민행정 대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예산(4.4억) 확보('25. 12월), 출입국기록 등 이민행정 정보연계 이용기관 확대(49개→55개, '25. 12월)

○ 외국인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이민정책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

- 출입국 현장투어('25년 총 17회, 226명 참여), 소식지(공존) 제작, 정책 고객(7천여명) 대상 메일링 서비스 등 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
- 내국인 중심의 소통 외에도 외신기자 간담회·현장방문, 외국어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이민정책 인지도 제고

○ 이민정책에 대한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여 반이민정서 완화

-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신속히 설명자료를 배포(14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정보로 인한 반이민정서 완화

□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체계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업종별 인력수급을 분석해 '25년도 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 공표('25.1월), 지역 제조업에서 요구하는 한국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유학생을 양성하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사업 공모('25.12월)

○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법령 제·개정

- 강제퇴거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25.3월), 계절근로제도 전문기관 운영 근거 마련('25.7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25.11월) 등

○ 국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국적 정책 추진

- 정책수요자의 국적업무 이해 증진을 위해 현지 국적설명회 개최('25.11월, 캐나다, 중국), 귀화 면접심사 제도 운용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면접심사에 참여하도록 개선('25.9월), 귀화 민간 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25.11월)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확대

-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범죄예방 교육 추가, 교육시간 확대(3H→5H, '25. 2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에 노동인권·가스안전 교육 추가('25. 10월)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 지원 강화

-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17개→23개, '25. 7월), 무국적 동포 대상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단순노무 취업활동 허용('25. 7월),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의원 입법안 법사위 상정('25. 8월)

○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 난민 종합통계* 공개('25. 2월), 난민심사 화상면접 운영기관 확대(8개→13개, '25. 4월),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을 훈령으로 상향('25. 5월)

* 연도·국적·체류자격별 난민신청현황 및 국적별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 현황, 난민 신청 심사 소요기간 등 난민신청 및 심사 관련 종합통계

-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제외 대상', '우선 순위' 항목 추가 등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25. 8월), 재정착난민(21가구 56명) 수용, 재정착난민 사업 시행 10주년 기념행사 개최('25. 12월), 난민전문통역인 299명 위촉('25. 1월, 12월)

○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절차 제도개선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위원회 서면회의 도입·개최 횟수 확대 등 난민위원회 운영의 신속성·효율성 제고('25. 4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동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5. 7. 12.)
- 이의신청 절차 안내 다국어 문자 알림 확대(6→21개 외국어, '25. 9월),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 시스템 1차년도 사업 완료('25. 12월)

2.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범행 단계에 따라 체계적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거점국에 검찰수사관 추가 파견 등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전방위적 대응을 지속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강화된 권고형량 상향 등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마약류 범죄 대응,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급사범 수사 강화

○ 공정선거를 해치는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선거 되도록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관권·금권선거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AI 활용 허위사실공포 등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지정하여 신속·엄정 대응

○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 및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26. 4. 27.~'27. 4. 26.)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
- 중대 산업재해 사고 엄정 수사를 통해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중대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근절 노력

-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집중 송환을 추진하고, 해외 공조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형사사법공조망 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 진행
-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 독립몰수제 도입, 피해자 환부 가능 대상 범죄 확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재산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
 - 법무부 내 범죄수익환수 전담 조직 신설, 해외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공조 전담인력 증원, 주요 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추가 신설 등 범죄수익환수 조직 강화
-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
 -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배임죄 개선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을 위한 「형법」 개정 지원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및 「수사절차법」 제정 등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지원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 구축

-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밀착 감독 강화를 위한 1:1 전자감독 확대, 재범위험요인별 관리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정책 추진
 -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제공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정보가 전달되는 ‘잠정 조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현
-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 주요 정책과제를 SNS와 유튜브, 숏폼·기획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하여 전달력과 확산력을 강화하고, 홍보 우수기관·직원 선정, 홍보 워크숍 개최 등 홍보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전문교육 및 맞춤형 연계 확대를 통한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소년수강·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비행예방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통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강화
- 지자체·심리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 초기 비행단계에서의 위험요인 개입을 위한 사후연계 확대

○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소년원 수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예산 정상 집행 추진, 보호소년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 확대 운영·직업교육 진로지도 강화 등 소년원 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 원격의료제도* 도입, 마약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 소년원 정신건강·중독예방 치료 개입 강화

* 소년원과 외부 의료기관 간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년원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 처우 개선('26년 2개 소년원 시범 실시 → '27년 확대 실시 추진)

○ 맞춤형 의료 처우 및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실효성 제고

- 여성 피치료감호병동 추가 운영 및 여성 정신감정 재시행, AI 기반 피치료감호자 행동분석시스템 확대 구축,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1단계) 구축, 의료인력 채용방식 다양화 및 처우개선을 통한 충원 추진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마약류사범 약물검사 강화 및 치료·재활 병행을 통한 재범 방지 추진, 조현병·양극성정동장애 등 고위험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치료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
-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사범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 및 피해자 보호 추진

○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보호수용 시설 확충 및 사회정착 지원 확대

- 고위험군 출소자(전자감독 대상자) 인원 지속 증가^[1]에 따라 관리 강화와 사회정착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관 1인실 전환 및 전담 시설 신설 추진^[2]

[1] 누적 인원 : '23년 45명 → '24년 112명 → '25년 191명

[2] 4개소 리모델링('26년 ~ '27년 인천·대구 / '28년 ~ '29년 창원·광주), 1개소 신설(포항)

- 집중사례관리팀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기별 사례회의 실시, 공단 내부 T/F 구성을 통한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매뉴얼 제작

(2)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 인권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권가치를 실현한다

○ 국가 인권정책 총괄 기능 강화

- 국제인권기준과 범정부적·통합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을 통해 국제인권기준과 국내 인권정책의 연계성 제고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

○ 신속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을 통한 국민 인권 보호

- 수용자 간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집중 점검, 민영교도소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기존 노후화된 화상조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순차적 추가 설치, 법무연수원 인권교육 출강 확대 추진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여 연계기관 간 보유 정보·자료가 공유되고, 범죄피해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하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

- 여러 기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AI로 최적의 서비스를 매칭·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운영
- 산불·호우 등 재난, 전세 사기, 여객기 사고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합동지원단 구성, 경제·심리·법률적 지원 지속 실시

○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아동학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사건관리회의 확대 노력, 「아동학대처벌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보호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 운영과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연구용역 등 추진

□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한 인권 존중의 가치 실현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사업 추진

-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축 사업과 병행, 민간투자사업방식(BTL)을 도입하여 교정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고, 공모제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유치 희망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정시설 과밀·노후화를 해소 및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

-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발굴 등을 통해 주요 교정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법조기자단 교정시설 참관 및 현장 체험을 통한 객관적 보도환경 조성, 전 소속기관(55개) 인스타그램 개설 추진을 통한 홍보 저변 확대,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한 전문가 집단(학계, 법률, 지역인사 등)과의 소통강화

○ 접견 서비스 확대 및 보안성 강화

-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변호인이 PC,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 단계적 확대 (서울구치소 등 12개 기관 29개 호실)

- 수사 및 공판 확대를 위해 공무상 접견실 증설*

* 광주(교) 3개 호실 증설 및 수원(구), 군산(교) 13개 호실 개선

-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견 참여 방지 등 보안성 강화를 위한 성문인증시스템 도입

○ 재범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다양한 조건부 가석방 제도 활성화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범죄예방 통합체계를 강화하고, 수형자 특성에 맞는 사회 내 치료·원호를 위한 다양한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확대하여 수형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

○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력, 신기술·유망직종* 관련 직업훈련과정 발굴과 취업 취약계층 수형자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다양화

* 간병인, 스마트팜 직업훈련 과정

** 정신질환자(동료지원인) 직업훈련 과정

- 수형자의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희망센터 활성화 및 외부통근 등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통한 공익적 성격의 교도작업 지속적 창출

○ 교정·교화 프로그램 활성화

- 디지털 윤리 및 인성교육 체계 구축,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재범 예방 방지 및 건전한 수형자 사회복귀 기여

○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위한 의료인력 및 환경 개선

-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 적극 채용, 원격의료 진료과목 확대 등 의료처우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의무관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치료·처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

○ 재범역률 감소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범죄유형별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신질환자 자가증상관리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소년수형자 가족기반 심리치료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도입, 범죄유형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문성 강화

- 교정시설 내 전담 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대상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가상현실(VR)·뇌파측정기를 활용한 과학적 프로그램 도입 등 중독재활 전문성 강화

(3)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 전면 개정 추진

- 「계약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 민법개정위원회의 「담보법」 개정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후 단계적으로 입법 추진
- 「담보법」 후속 과제로 소멸시효, 등기의 공신력, 취득시효 등 「권리변동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마련 예정

○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 및 신뢰성 제고

- 공증제도 개선 및 전자공증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과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적정 공증사무를 감독·시정하여 공증사무 신뢰성을 제고

○ 지속적인 환수소송 제기 및 소송지원활동을 통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판결 확정 후 실제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지원 및 감독을 확대하여 소송 수행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지속 예정
- 국고손실 환수소송 홍보 활성화를 통해 '부패·비리 불공정행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 확산 노력

○ 소송 장기화 방지를 위한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 송무교육 및 송무지도점검 실시, 행정소송 주요 사례집 발간, 소송총괄관 회의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을 통한 송무 역량 강화
- 실질적 소송지휘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 남북관계 개선 대비 법률업무 강화

-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법률기반 선제적 구축, 대화·협력 재개 시 법적 자문 강화, 남북교류·협력 공감대 확산, 통일법제 전문인력 양성
-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률·인권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변호인 통한 맞춤형 법률지원 체계 강화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상사법 개정

-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상사법 개정 추진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및 전자주주총회 제도 신설 등 개정 「상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 추진

○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추진 등 시험제도 내실화

- 시험 운영의 안정성 강화 및 CBT 방식 도입에 따른 시험관리시스템의 중장기적 개선 추진,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공공성 개선방안 마련

□ 국제법무 대응 시스템 강화로 국익 수호

○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 참여 및 관련 국내법규 정비로 논의 선도

- AI 등 최신규범 성안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 추진하여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법제 선진화

○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 내 법치주의 확립 지원

-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 법제정비 5개년 계획(‘26년~’30년) 시행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와 협력하여 캄보디아 상사법원 설립 기본법 및 상사소송법 제정 지원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을 앞두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입법안 제정 TF 구성부터 입법안 작성까지의 노하우 전수 등 캄보디아의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지원

- 국제분쟁 예방·대응 역량 고도화 및 범정부 국제법률 지원체계 구축
 - KOTRA 등 정부부처와 연계한 ISDS 조기 모니터링 체계 수립, ISDS 발생 위험분야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진행,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및 배포를 통한 ISDS 예방 시스템 구축
 - 국제분쟁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 확보 등 국제법률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국제소송 대응역량 관련 연구용역 진행을 통한 ISDS 예방의 제도적·정책적 보완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효과적·체계적 대응
 -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인 총 8건*의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해 국가 재정의 유출 방지에 기여 및 국익 수호
 - * 중재의향서 사건 포함
 -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ISDS 대응 규범을 법률로 격상하여, ISDS 사건에 대해 범정부적인 협업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 추진
- 국제투자분쟁 제도개선 관련 국제규범 성안 주도 및 국제공조 강화
 - ISDS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공식회의 참석 및 국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 표명
 - 룬스타 전부승소 쾌거로 대한민국 정부의 ISDS 대응모델이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을 활용, 중재선진국 ISDS 대응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K-ISDS 대응 모델 홍보 및 국가 위상 제고

(4)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구현

○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실현

- AI 기반 국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전략계획(ISP) 예산 신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확대(현 18개 국가에 EU 등 주요 국가 추가) 등 미래지향적 국경관리 체계 구축

○ 국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의 취업 범위 확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역가점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 임금체불 고용주 초청 제한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 제도 정비, K-컬처 확산 지원을 위해 한식조리연수생(D-45) 비자 요건 완화 등 비자 제도개선 추진

○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및 보호환경 개선 노력 지속

-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적발 등 기획조사 강화, 단속 관련 매뉴얼 개정 등 단속 시 인권 침해 요소 최소화 방안 마련, 보호일시해제 규정 정비 등을 통한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강화 및 강제퇴거 집행 효율화 방안* 마련 추진

* '26년 '출국거부 등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집행력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예정

○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 외국인등록증 가독성 제고 및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증 표기 항목 정비(등록번호·성명 항목 표기 생략, 글자 수 확대 등)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제67호) 개정 추진
- AI기반 다국어 챗봇 도입, 전자민원창구 일원화 등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포털(하이코리아, 비자포털, 사회통합정보망)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및 본사업 예산 확보 추진, 서울청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 추진

- 홍보 채널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를 통한 이민정책 접근성·체감도 향상
 - 동영상(숏폼)·카드뉴스·인포그래픽 등 정책수요자에게 수용성이 높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존 누리집 외에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채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배포

□ 국력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이민자와 공존하는 협력 기반의 이민정책 추진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제도 시행 등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우수인재 유치·양성 강화, 관계부처·지자체·민간·학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및 추진
-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적정책 추진
 - 국적심사의 통일성 확보 및 신속 심사를 위한 국적심사 전담기구(국적심사원) 신설 추진, 국적 신청의 대행 허용 등을 통해 외국 우수 인재 확보
-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역량 강화
 -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근로자의 의무적 조기적응프로그램(산업안전, 근로계약, 임금체불 대응방법 등을 외국인 모국어로 제공) 이수 등 외국인 인권침해 사전 예방
 - 이주배경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사회통합교육을 운영하는 등 정책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 운영 추진
-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난민정책 추진
 - 난민면접조서 표준화 등 심사적체 해소방안 마련, 난민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 정비,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개선, 난민자문단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학생난민 장학생 선발을 통한 ‘학생난민 프로그램’ 정규화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효율성 강화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개편 등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 제고,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기회 확대를 통한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AI 기반 국가정황정보 분석자료 제공 등 DB 고도화를 통한 심의 효율성 제고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법무부 일반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법무부 일반현황

(1) 조 직

○ 본부 : 2실 4국 2본부 10관 58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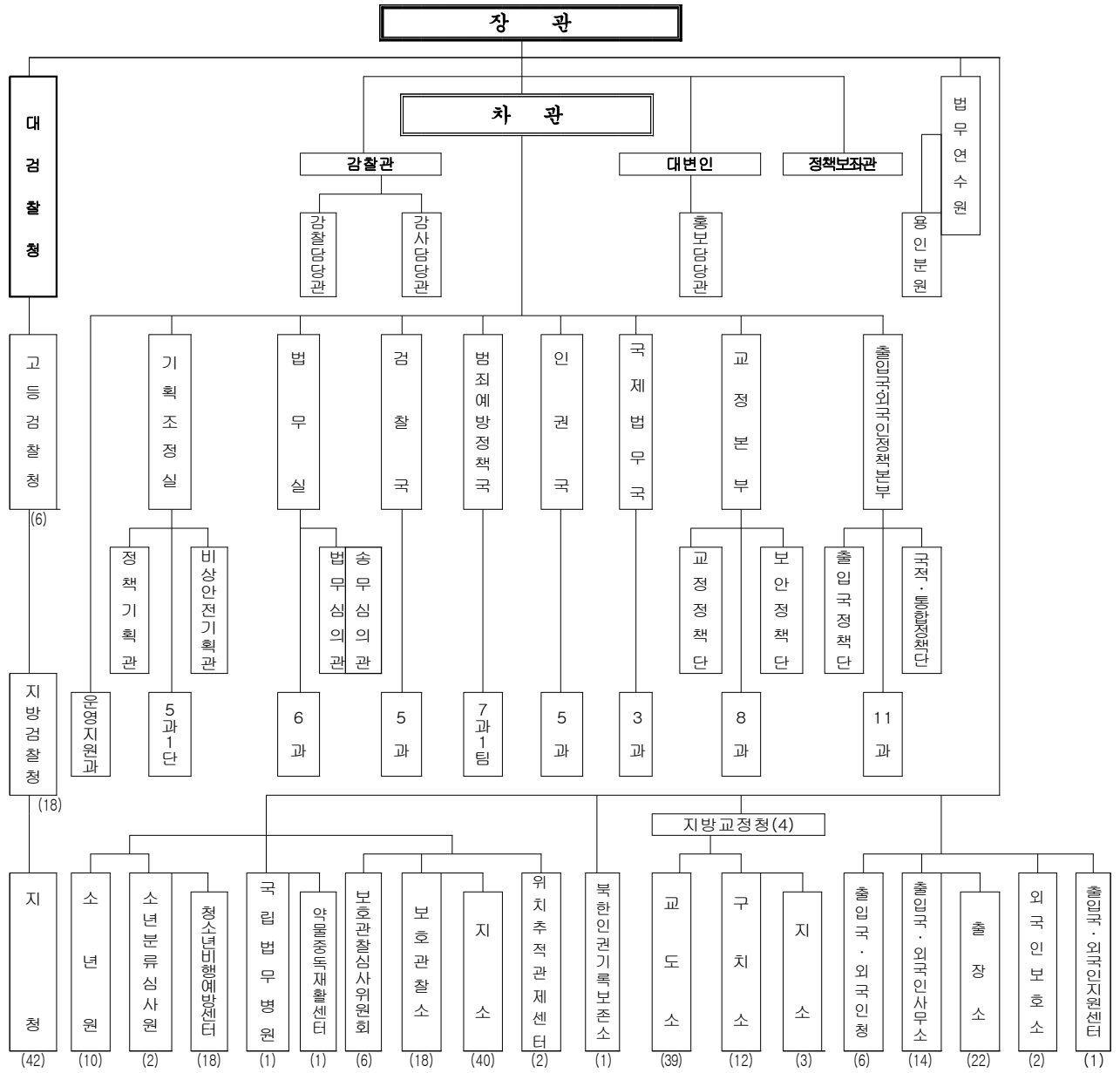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소속기관

구 분	조 직	기관수
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1 ● 고등검찰청 6 ● 지방검찰청 18, 지청 42 	67
범죄예방 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6, 보호관찰(지)소 58 ●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2, 비행예방센터 18 ● 국립법무병원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위치추적관제센터 2 	98
법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
교정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정청 4 ● 교도소 39 ● 구치소 12 ● 지소 3 	58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 출장소 22 ● 외국인보호소 2 ●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1, 외국인보호위원회 1 	46
법무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연수원 1, 용인분원 1 	2
계		272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소속 특수법인 3개

○ 조직도



(2) 인 원

(‘26. 2. 27.)

구 분	총계	정무직	검사	고위 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가급)	6급	7급 (나급)	8급	9급 (다급)
총계	33,799	2	2,035	43	41	310	204	1,330	6,346	9,868	5,987	7,633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6	'27	'28	'29	'30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47,046	55,008	57,179	59,759	62,615
(전년대비증가율, %)	-	16.9	3.9	4.5	4.8
○ 총계	48,901	56,854	58,728	61,598	64,320
(전년대비증가율, %)	-	16.3	3.3	4.9	4.4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27,654	29,589	31,661	33,877	36,248
(전년대비증가율, %)	-	7.0	7.0	7.0	7.0
○ 기본경비	1,703	1,754	1,807	1,861	1,917
(전년대비증가율, %)	-	3.0	3.0	3.0	3.0
○ 주요사업비	17,690	23,665	23,712	24,022	24,450
(전년대비증가율, %)	-	33.8	0.2	1.3	1.8
□ 예산					
○ 총지출	46,019	53,857	55,972	58,494	61,295
(전년대비증가율, %)	-	17.0	3.9	4.5	4.8
○ 총계	47,449	55,332	57,433	60,184	62,995
(전년대비증가율, %)	-	16.6	3.8	4.8	4.7
【일반회계】					
· 총지출	45,235	52,961	55,096	57,595	60,373
(전년대비증가율, %)	-	17.1	4.0	4.5	4.8
· 총계	46,147	53,916	56,038	58,766	61,554
(전년대비증가율, %)	-	16.8	3.9	4.9	4.7
【교도작업특별회계】					
· 총지출	784	896	876	899	922
(전년대비증가율, %)	-	14.4	△2.3	2.6	2.6
· 총계	1,303	1,415	1,395	1,418	1,441
(전년대비증가율, %)	-	8.6	△1.4	1.6	1.6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법무부의 임무, 비전 및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 전략계획 체계를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26년도 주요 정책·사업을 반영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임무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비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전략 목표	I.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III.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IV.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 (전략목표 I)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반듯한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
- (전략목표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및 수형자 집중관리와 다양한 교정정책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
- (전략목표 III)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진 법무서비스 및 국제법무 대응 시스템 강화로 국익을 수호
- (전략목표 IV)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 국가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출입국·이민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촉진

【 '26년 정책 여건 분석 】

○ 범죄대응

-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체계적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거점국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전방위적 대응을 지속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강화된 권고형량 상향 등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마약류 범죄 대응,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급사범 수사 강화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선거 되도록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관권·금권선거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26. 4. 27.~'27. 4. 26.)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중대 산업재해 사고 엄정 수사를 통해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원인 규명 및 책임이 중대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근절 노력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집중 송환을 추진하고, 해외 공조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형사사범공조망 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범공조 진행
- 독립몰수제 도입, 피해자 환부 가능 대상 범죄 확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재산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
- 법무부 내 범죄수익환수 전담 조직 신설, 해외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공조 전담인력 증원, 주요 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추가 신설 등 범죄수익 환수 조직 강화
-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배임죄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을 위한 「형법」 개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및 「수사절차법」 제정 등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지원

○ 범죄예방

- 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소년에 의한 흉악·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 범죄로의 전이·예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 필요
- 소년원 교육 내실화·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과밀수용 해소, 재범 고위험 소년원생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등 필요
- 여성 범법 정신질환자와 정신감정 수요 증가에 따른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 필요
- 범죄 발생 시 위험성이 높고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국민 법의식 향상과 마약·도박·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예방을 위한 법교육 수요 확대, 범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실천 문화 확산 필요

○ 인권보호

- 국제인권기구 보고·질의 등 범정부적·종합적 대응을 위해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권정책 간의 연계 강화 필요
- 피해 발생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회복의 전단계에서 경제·법률·심리지원 등을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속 추진
-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여 연계기관 간 보유 정보·자료가 공유되고, 범죄피해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하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위해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아동학대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 및 관련 법령 개선 필요

○ 교정교화

- 최근 강력범죄·이상동기범죄·마약범죄·정신질환자범죄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형자의 범죄유형·특성 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하고 효과성 있는 교정·교화 정책 필요
-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수형자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교정시설 조성, 가석방 확대 등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정책 필요
- AI 등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예측가능한 수용관리 필요

○ 법무서비스 제공

-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정 계속 추진 필요 (25. 12. 18. 「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 후속 과제로 「담보법」, 「권리 변동법」 개정안 마련 중)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따라 전자공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필요성 증대, 공증인에 대한 주기적 감독을 통하여 공증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지속 필요
- 입찰담합 비리 및 ‘폭파’ 장난 글 등 소위 ‘스와팅(swatting, 허위신고)’ 사건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적극적인 환수 소 제기 증진 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
-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그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 및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 방지 등을 위한 국가 행정소송 역량 강화 필요
- 남북 관계 개선 시 남북 대화협력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 강화 필요
- 주주 환원 제고, 주주 보호 및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사법제 추진 필요성 제기
- 경제계 불확실성 확산에 따라 도산절차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되므로, 파산채무자 등 재기 가능성 제고 및 채무자·채권자 보호 균형 확보 필요
- 신기술, 신산업 등을 활용한 거래유형 다수 발생 및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양상에 따라 신규 국제규범의 성안도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선진적인 법제 구축 필요
-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소된 ISDS 중재수행 및 선제적 예방과 정부부처·기업 등에 산재한 국제소송 및 국제법무 이슈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국부 유출 방지 필요

○ 출입국·외국인 정책

- 저출생·고령화 심화 및 지역소멸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 산업 및 전문인력 중심의 전략적 외국인력 유치 및 정주 지원을 위한 이민정책 필요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진입과 정주형 이민 확대로 복지 부담, 내국인 고용침해, 문화 갈등 등 반이민정서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 공감 기반의 사회통합 정책 필요
- 국가 위상 강화와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유입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AI 기반 지능형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체계 고도화 등 안전 사회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

【 계획 수립의 주안점 】

- 국정과제 등 국정 기조와 사회 여건 변화 등을 주요 사항을 관리과제에 충실히 반영
- 계획 수립 시 실·국·본부 조직 구성원, 자체평가위원들의 심의 절차를 통해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
- 성과관리계획 목표체계상 최상위 개념인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목표와 하위 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리과제를 설정
-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는 목표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의 대표성을 강화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는 법 집행 관련 정책 특성상 지표 및 목표설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 성과 제고를 위해 목표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대표성 있는 결과 지향적 지표와 더불어 과제 추진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 보완하여 반영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며,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실천을 위해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이라는 3대 임무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8개 성과목표 및 48개 관리과제 설정

임무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비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전략 목표	I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III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IV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성과지표] • 보호관찰 재범률(%)	• 인권위 권고 수용률(%)	•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실적(점)	• 체류 민원 만족도(점)
성과 목표	I-1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II-1 인권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권가치를 실현한다	III-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 시스템을 운영한다	IV-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성과지표]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점)	• 인권교육 만족도(점)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실적(건)	• 행정소송 승무역량 강화 실적(점)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시 정밀심사 실적(건)
성과 목표	I-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 한다	II-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III-2 국제법무 대응 시스템 강화로 국익을 수호한다	IV-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성과지표] •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 일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률(%) •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 법률 ODA 프로그램 품질평가(점)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8	10	48	86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1.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I-1.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성한다	①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국정74-3
	②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 및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	
	③ 공정선거를 해치는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④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	
	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국정74-3
	⑥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	국정6-1
I-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국정74-1 국정74-2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 이해도 제고	
	③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 강화	국정74-1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국정74-1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⑥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국정74-1 국정74-4
	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국정74-1
	⑧ 대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질서·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II-1. 인권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권가치를 실현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②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③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시스템 확립	국정6-4 국정74-2
	④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국정6-3 국정74-2
II-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사업 추진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③ 교정 접견 서비스 활성화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⑧ 재범방지를 위한 수용자 맞춤형 심리치료 체계 강화	
	⑨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문성 강화	국정74-4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Ⅲ.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Ⅲ-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 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미래번영 및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민법」 전면 개정 등 추진 ②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③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④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국정6-2
Ⅲ-2. 국제법무 대응 시스템 강화로 국익을 수호한다	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사법」 개정 ⑦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①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②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처·기업 등 국제법률지원 체계 구축 ③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제도개선	국정47-1
Ⅳ.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Ⅳ-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국경관리 체계 구축 ② 국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 ③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④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 및 보호업무 체계 개편 ⑤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⑥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국정6-4 국정6-4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기조 연계
IV-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①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④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세부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 전략목표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 전략목표 III.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 전략목표 IV.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보이스포싱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과 민생 보호
-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 및 산업현장 범질서 확립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
-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 마련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철저 및 피해자 환부 가능 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재산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
- 기업의 사법리스크 경감 및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배임죄 개선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및 「수사절차법」 제정,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재범방지 대책 추진
- 범죄예방정책 홍보를 SNS와 숏폼기획 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참여형·공감형 소통으로 전달력과 확산력 강화
-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선도·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강화
- 시설확충을 통한 과밀해소, 수요자 맞춤형 교정교육 및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원격의료제도 도입, 가족관계 회복지원 활성화
- 여성병동 추가 운영 및 여성 정신감정 재개,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 및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치료감호 실효성 제고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 법무보호사업(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통한 법무보호 대상자의 건강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 범죄예방활동 전개
- 마약도박 등 범죄예방 법교육과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범죄예방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초국가적·조직적 보이스피싱 등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계속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적 집행과 형평성 있는 처벌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근절
- '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일관된 선거사범 처리기준 확립 등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공정성·투명성 제고
-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송환, 해외 소재 증거 확보, 해외 은닉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한 엄정한 범집행 필요
- 첨단화·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수법에 대응하여 범죄수익 대응 체계 강화하고, 피의자의 사망·도주·불특정으로 기소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 박탈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하며,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피해 회복
-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참여와 형사절차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형사법체계 구축
- 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대책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범죄예방정책을 '어렵고 먼 행정'이 아닌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상의 정책'으로 인식시켜, 정책 공감도 상승
-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 초기단계 소년에 대한 선제적·조기 개입 대책 필요
- 소년원 교육 내실화·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과밀수용 해소, 재범 고위험 소년원생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등 필요
- 여성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종합진단 및 처우개선, AI 기술 등을 활용한 피치료감호자 맞춤형 치료·재활 환경 조성

-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 증대
- 재범 고위험 출소자 관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 보장에 기여
- 마약도박 등 예방교육 및 헌법교육을 통해 국민 법의식을 고취하고, 범죄예방 및 법질서 캠페인 활동으로 준법문화 확산 도모

◇ 임무·목표 간 연관성

-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 구축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14	1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 보호관찰 재범률(%)
1.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점)
	①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점)
	②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 및 산업현장 범질서 확립	■ 산업재해 엄단활동 실질화 실적(점)
	③ 공정선거를 해치는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 선거범죄 예방 활동 실질화 실적(점)
	④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	■ 국제형사공조 실적(점)
	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 정비(점)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건)
	⑥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	■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점)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 ■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등 처우 프로그램 횟수(회)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활성도(점) ■ 온라인홍보실적(점)
	③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예방교육 평가점수(점) ■ 비행예방전문교육 과정 운영 횟수(회)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교육목표 달성도(점)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 수료자 기능 개선율(%)
	⑥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 마약사범·치료명령 대상자 1인당 집중면담 및 연계상담 실시 횟수(건)
	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귀율(%)
	⑧ 대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질서·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여인원(명)

(1) 주요내용

□ 범죄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를 통해 법질서 확립

- 보이스포싱 등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 범죄예방 체계 구축

- 성폭력 등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자장치 훼손 대응 역량 향상을 통해 훼손·도주 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 재범방지 대책 추진
- 보복범죄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을 추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을 통한 재범 방지

- 강력사범·정신질환자 등 재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밀착점검 및 치료적 개입 등을 통한 실효적 관리·감독 지속 추진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이 깊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접형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25	'29			
보호관찰 재범률(%) (하향지표)	6.0	6.7	6.4	6.4	6.2	6.1	과거 5년간 실적 평균 6.3%의 0.2% 감소한 6.1%를 '29년 목표치로 설정	(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재범자 수 /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 100	보호관찰통계 정보시스템 ('27. 1월 초 실적 산출예정)

(1) 주요 내용

□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동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유지하여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적극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 하도급, 부당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
- 범죄수익환수 제도의 개선 및 적극 운용을 통해 범죄수익 및 불법행위 연루재산 환수 철저
- 보이스포싱 범죄조직의 국제화·전문화에 대응하여 '보이스포싱 범죄 합동수사부' 중심으로 체계적인 집중수사, 해외 수사관 파견 확대를 통한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 범죄예방 및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대응

□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 및 산업현장 범질서 확립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
 - '26.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지정됨에 따라, '26년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실효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도록 충실한 의견 개진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산업재해 엄정 대응
 - 중대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엄정 수사를 통해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주요 책임자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 적극 검토

□ **공정선거를 해치는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 '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범죄 엄정 대응체계 구축
 - 각급 검찰청 선거전담반 편성, 선거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검사·수사관 교육 등을 통해 선거범죄 엄정 대응체계 구축
-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중점 대응 선거범죄 지정
 -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금품선거, 관권선거 등을 중점 대응 선거범죄로 지정
 - 중점 대응 선거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 방법 등 선거범죄 수사 교육 실시, 선거사범 처리 기준 엄격 적용, 선거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수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집중 송환을 추진하고, 해외 공조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형사사범공조망 확충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범공조 진행

□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 독립몰수제 도입,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제도 도입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피해자 환부 가능 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재산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
- 가상자산 추적 전문수사관 양성 교육, 범죄수익환수 전담 교육 등을 확대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점)	60	57.5	60	60.1	최근 3년간 평균인 59.1점에서 1점 상향하여 60.1점으로 산정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의 연도별 사회통합실태조사(국기승인통계) 상 검찰 신뢰도(4점 만점) × 25	한국행정연구원 발표 자료 (사회통합실태조사 상 '검찰 신뢰도를 근거로 산정)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주가조작사범 ‘원스트라이크 아웃’ 구현

- 종래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박탈 중심으로 수사·조사가 이루어져 부당이득 박탈에 비해 원금 몰수에 대한 관심 저조, 시세조종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엄단을 위해 시세조종 원금 몰수·추징 규정(「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제2항)을 적극 적용 필요
- ⇒ 원칙적으로 시세조종 제공자금 몰수·추징 규정 적극 적용 추진하고, 원금 몰수·추징보전 근거 규정 미비로 수사 중 사건에 대한 보전조치 불가능바 관련 입법 추진

□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 및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과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우려 존재
- ⇒ '26년 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 공정선거를 해치는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 '26. 6. 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가
- ⇒ AI 등을 악용한 흑색선전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행과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하여 엄단

□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 강화 필요

- 보이스피싱 범죄의 점조직화·국제화로 인해 범인 파악이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또한 요원
- ⇒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하여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필요
- ※ ‘최근 4개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범죄수익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5년 보전 결정액은 182.9억 원이나, 보전재산 가액은 32억 원으로 약 1/6 수준

구 분	'22년(7.~)	'23년	'24년	'25년
보전 건수	1건	35건	27건	45건
보전 결정액	0.8억 원	94.6억 원	21억 원	182.9억 원
보전재산 가액	0.8억 원	25.5억 원	3.7억 원	32억 원

⇒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환수 업무 체계 확립, 범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회복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

○ 전문적이고 복잡한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업무의 성격 및 국내·외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에 장시간 소요

⇒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및 해외 공조담당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 협력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 범죄수익 환수 관련 법제 정비 및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 필요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I-1-①)

□ 추진배경(목적)

-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를 왜곡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자본시장 교란 금융·증권범죄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보이스포싱 등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조직적 비대면 경제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비리에 대한 지속적 수사 전개
 -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유관기관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조사 제1·2부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증권 범죄 대응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범죄 엄단
 - '25. 2월 정식 직제로 편입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를 주축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효율적 수사 계속
 - ※ '26. 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 유죄 선고
 - '24.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미비점이나 개선책 점검하여 신중 범죄인 가상자산이용범죄 처벌에 공백이 없도록 진단 계속
-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선제적 대응 및 적극적 범죄수익환수
 - 불공정거래 등 의심 계좌 지급정지 제도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등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분기별)를 통해 금융위, 금감원과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① 우선순위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협의 ② 주요 행정제재 필요 사건 진행 상황 공유 ③ 기타 애로사항 또는 요구사항 교환 등 논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입찰 담합 및 불공정거래 범죄 엄단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부당내부거래, 시장질서와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담합 범죄 등 집중 수사
 - ※ '26. 3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법무부장관 표창
-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간주 규정 신설을 논의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TF를 구성하고, 주요 현안 협의·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업관계 유지
-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주축으로 탈세범죄 및 국가재정비리에 대한 지속적 수사 전개
 -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범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수사
 - 역외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협력 강화
-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이스포싱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 엄단
 - 보이스포싱 범죄 합동수사부('26. 1월 직제화)를 중심으로 국가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 조직 와해
 - ※ 출범('22. 7월) 이후 '26. 1월까지 1,170명 입건, 469명 구속(구속비율 40.1%)
 - '25. 10월부터 보이스포싱 등 초국가범죄 대응 위한 대통령실 주재 회의 참석하여 협력방안 마련·추진하고 '25. 12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에 적극 참여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들과 초국가범죄 통합 관리 기구 설치 등 구체적 논의
 - ※ 보이스포싱 등 서민다중피해 범죄의 피해재산 필요적 몰수·추징 등 규정 도입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

- 보이스피싱 전담 검찰수사관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주요 거점국 파견 확대를 통해 ▲현지 수사 거점 마련,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수사와의 연계한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추적, ▲해외 거주 총책급 조직원 수사, ▲범죄수익 환수 추진

※ '22 6월부터 필리핀 국가수사청에 검찰수사관 2명 파견 실시, 현재('26. 2월)까지 총 39명 검거

- '26. 6월 미국 법무부 등 주관 '초국가적 조직범죄 국제회의'(ICTOCT) 참석하여 20여 개 국가와 공조수사 방안 등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 노력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1분기)	1~2월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직제 편성	1~2월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필리핀 파견	1~2월	
	○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참여	1~2월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파견 확대를 위한 태국 중앙수사국 (CIB)과 간담회 개최	1~2월	
	○ 불공정거래 대응 TF	3월	
	○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논의 관련 회의 참여	3월	
2/4분기	○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2분기)	4~6월	
	○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판별 '전센터' 성과 보도자료 배포	4월	
	○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참여	5월	
3/4분기	○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3분기)	7~9월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필리핀 파견	7월	
	○ 언론매체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8월	
4/4분기	○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4분기)	10~12월	
	○ 보이스피싱 신종수법 등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10~12월	
연중	○ 금융·증권범죄, 불공정거래행위, 조세포탈사범 중점 기소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 진행

- ① 우선순위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협의 ② 주요 행정제재 필요 사건 진행 상황 공유 ③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애로사항 또는 요구사항 교환 등 논의

※ 참여 기관: 대검찰청, 금융위, 금감원

○ 불공정거래 대응 TF 진행

- ①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간주 규정 신설 논의 ② 기타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등

※ 참여 기관: 대검찰청, 중앙지검, 공정위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협의회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 진행	분기별
TF	불공정거래 대응 TF 진행	3월

○ 보이스피싱 판별 콜센터 '찐센터' 적극 홍보

- 검찰 사칭 판별 콜센터 대검찰청 '찐센터' 적극 홍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인식 제고하고, 실시간 상담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의견을 정책 개선 및 대응체계 보완에 반영할 계획

□ 기대효과

- 수사와 행정제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속정확한 제재를 위한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간 공식 협의 채널 구축
- 불공정 거래행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철저한 박탈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엄단하여 국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 경제 보호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1-1-일반재정)				
①	검찰운영(1333)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301)	일반회계	7,957 (49,083)	7,937 (55,056)
③	수사지원및역량강화(1335)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303)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306)	일반회계	20,580 (122,776)	19,766 (125,049)
④	공판활동및형집행(1337)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301)	일반회계	7,262 (51,299)	6,620 (52,6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점)	68	64	71	97.7	- 자본시장교란 범죄 기소 실적: 최근 3년간 평균 기소 실적(구속 기소 35건, 불구속기소 173건)을 목표치(14.6점)로 설정 - 자본시장교란 범죄 추정보전 실적: 최근 3년간 평균 추정보전 실적(177건, 4조 1천억 원)을 목표치(15.5점)로 설정 - 공정거래위반 범죄 기소 실적: 최근 3년간 평균실적(기소: 65건, 고발요청권 행사: 59건)을 목표치(11점)로 설정 - 보이сп이스싱 단속 실적: 과거 3년간 실적 및 추세를 고려하면 상승률 11.7%로, '26년에 보이сп이스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정식 직제화 되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 예상 되므로 '26년 단속 예상 명수(793명)을 목표치(47.6)로 설정 -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국제세 등) 협업 사례수 : 연간 총 9회를 목표치(9점)로 설정	- 자본시장교란 범죄 기소 실적(불구속기소 1건당 0.06점, 구속 기소의 경우 가중하여 1건당 0.12점) - 자본시장교란 범죄 추정보전 실적(1건당 0.06점, 추정보전 금액 천억 원당 0.12점) - 공정거래위반 범죄 기소 실적(기소 1건당 0.06점, 고발요청권 행사 건의 경우 가중하여 0.12점) - 보이сп이스싱 범죄 합동 수사부 및 각 검찰청 보이сп이스싱 단속실적 1명당 0.06점 - 유관기관 협업 사례(회의개최, 규정 및 지침 개정, 합동수사 등) 1회당 1.5점	- 검찰 통계시스템 - 정보보고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

②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 및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I-1-②)

□ 추진배경(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및 산업재해 사건 엄정 수사를 통한 처벌 강화로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근절
-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엄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설정 적극 참여
 - 위원회는 '26. 1월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지정하고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
 - ※ 법무부는 '25. 8월~12월 위원회에 중대산업안전범죄 양형기준 설정 요청, 양형기준안 등 상세 의견 3회 제출
 - '2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실효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마련 되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예정
- 중대산업재해 사건 엄정 대응을 통한 산업재해 근절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중대 산업재해 사고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원인 규명
 - 책임이 중대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산업재해 사건 엄정 수사를 통한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근절
 - ※ '25. 9월 대검찰청을 통해 수립한 「중대산업재해 신속·엄정 수사 방안」 지속 시행
-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 등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
 -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은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정식 기소(구공판)하고, 고액·다수 근로자 임금체불 사안은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여 임금체불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임금 변제를 유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1~2월	
2/4분기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설정 관련 의견 제출	6월	
3/4분기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설정 관련 의견 제출	9월	
	○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8~9월	
연중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설정 관련 대검 의견 수렴	연중	
	○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엄정 수사 방안 시행		
	○ 중대산업재해 사건 엄정 대응 사례 홍보		
	○ 노동부(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설정 관련 대검찰청 의견 수렴 및 반영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산업재해·노동사건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여 현장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담검사 교육을 통한 수사력 함양
 - 중대산업재해 발생 단계부터 경찰·노동청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사 방향, 입건 대상자, 적용 법률조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 수사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현장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의견 수렴	연중
수사실무자 회의	사건 담당 경찰 및 근로감독관 의견 청취	
근로감독관 교육	노동 관련 수사실무 교육	

□ 기대효과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평성 있는 처벌 도모
-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근절
-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임금체불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1-1-일반재정)				
③	수사지원및역량강화(1335)	일반회계	3,246	2,982
	■ 공공수사(304)		(122,776)	(125,049)
			3,246	2,98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산업재해범죄 엄단 활동 실질화 실적(점)	-	-	208	282.5	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이행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 ② 중요노동사범 기소인원 당 가중치 0.5점, 구속인원당 가중치 5점 부여 - 최근 3년('23.~'25.) 간 기소·구속인원 추이를 고려해 연도별 평균 증가율 대비 목표치 설정 ·(기소) '23. 49명, '24. 101명, '25. 217명 등 매년 약 50% 증가율 고려, '26. 325×0.5=162.5점 ·(구속) '23. 1명, '24. 5명, '25. 11명 등 매년 약 5명씩 증가 고려, '26. 16×5=80점 ③ 중요 언론보도별 홍보실적 가중치 별도 부여하여 20점 산출 ④ 유관기관 회의의 개최횟수 및 중요도 등을 고려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중치 별도 부여하여 20점 산출	① 의견서 제출시 각 2점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포함 시 3점, 양형기준 마련시 5점 ② 중요노동사범 기소인원×0.5점, 구속인원×5점 부여 ③ 홍보실적 - 주요 공영방송(TV, 신문(중앙일간지) 보도(각 2점) - 지방신문, Radio 및 종편방송 보도(각 1점) - 유튜브, 포털사이트 보도(각 0.5점) ④ 유관기관 회의 - 개최횟수당 각 2점 - 참여편의 수중요도 3개 이상 2점 및 3개 미만 1점 가중치 부여	대검 통계 및 일선청으로부터의 정보보고, 보도자료 등 확인

③ 공정선거를 해치는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I-1-③)

□ 추진배경(목적)

-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건 처리,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국 60개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서 신속·엄정한 선거사범 수사
-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과학수사기법 활용, 국제수사공조 등 수사역량 집중
- 사건 처리 시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한 공소유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 제1단계('26. 2. 3. ~ 5. 20.)
 - 선거전담반 구성, 비상연락체제 가동
- 제2단계('26. 5. 21. ~ 6. 2.)
 - 전담수사반 적정인원 08:00~22:00 선거상황실 근무
- 제3단계('26. 6. 3. 선거일)
 - 전담수사반 전원 선거상황실 비상근무
- 제4단계('26. 6. 4. ~ 12. 3.)
 - 공소시효 완료일까지 비상연락체제 유지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1~3월	
	○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3~4월	
2/4분기	○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공수사 부장검사회의 실시	4월	
	○ 제9회 지방선거 관련 보도자료 배포	4월	
	○ 선거사건 전담 검사 타겟교육 실시(1차)	4월	
3/4분기	○ 선거사건 전담 수사관 수사실무교육 실시	7월	
	○ 선거사건 전담 검사 타겟교육 실시(2차)	11월	
4/4분기	○ 제9회 지방선거 수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12월	
연중	○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연중	
	○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일선청 지시공문 시행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건 진행 방향을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 특히 경찰과는 「수사준칙」(제7조)에 규정된 ‘선거사건 협력절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 대비 실무협의회 실시 예정

○ 선거범죄 전담 검사·수사관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대상 범죄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하고, 일선 실무자 의견 청취 예정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수사기관협의회	수사준칙 협력절차 활용, 수사 관련 실질 의견 교환	연중
유관기관 협의회	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 관련 의견 교환 및 협력	연중
검사·수사관 교육	선거사범 수사실무 관련 교육	4, 7, 11월

□ 기대효과

-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를 통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
- AI 악용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유관기관 상호 협력,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선거사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체계 구축(1-1-일반재정)				
③	수사지원및역량강화(1335)	일반회계	3,246 (122,776)	2,982 (125,049)
	■ 공공수사(304)		3,246	2,98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선거범죄 예방 활동 실질화 실적(점수)	249.1	280.4	신규	294	<p>① 선거 관련 홍보 실적은 건수에 가중치 2점 부여 - 최근 단일 선거 실시연도인 '24년 제22대 총선 실적 기준으로 산출 - '24년 제22대 총선 실적이 66회이므로 홍보실적 목표를 70회(140점)로 산출</p> <p>② 유관기관 대책회의 실적은 개최 건수에 가중치 1.5점 부여 - '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실적이 65회 이므로 실적 목표를 70회(105점)로 산출</p> <p>③ 선거사범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건수에 가중치 2점 부여 - '22년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 '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실적 각 2회 - 최근 대선, 지선, 총선과 동일하게 교육 실적 목표를 2회(4점)로 산출</p> <p>④ 선거사범 기소시 양형기준 적용률은 1%에 가중치 0.5점 부여【(양형기준 적용 선거사범/기소한선거사범)×100×0.5】 - '22년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 양형기준 적용률 88.8% - '24년 제22대 총선 양형기준 적용률은 79.8% - 지선 단일 실시므로, 실적 목표를 80%(40점)로 산출</p> <p>⑤ 선거관련 전국단위 검사회의(오프라인 및 화상) 개최 실적은 1건당 가중치 5점 부여 - 전국 단위 검사 회의는 선거당 1회 실시하므로, 실적목표를 1회(5점)로 산출</p> <p>○ '26년 목표 점수 - 홍보 실적 140점 +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실적 105점 + 선거 수사 관련 전문교육 실시 실적 4점 + 양형기준 적용률 40점 + 선거관련 전국 단위 검사회의(화상)개최 실적 5점 → 총 294점</p>	<p>① 관련 홍보실적은 건수에 가중치 2점 (보도자료 배포, 언론 인터뷰, 홈페이지 팝업 설치, 홍보 이메일 발송 등 건수×2점)</p> <p>②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건수에 가중치 1.5점 (개최건수×1.5점)</p> <p>③ 선거수사 관련 전문 교육은 실시 건수에 가중치 2점 (실시건수×2점)</p> <p>④ 선거사범 기소시 양형기준적용률은 1%에 가중치 0.5점</p> <p>⑤ 선거 관련 검사회의(전국)는 실시 건수에 가중치 5점 (실시건수×5점)</p>	<p>일선청, 대검, 법무연수원 등으로부터 통계, 유관기관 대책회의, 검사회의, 교육이수율 등 확인</p>

④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I-1-④)

□ 추진배경

-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거듭 반복됨에 따라 국외 도피한 범죄자 적극 송환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법정의 실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집중 송환 추진
 - 강제추방, 범죄인인도청구 연중 지속 추진
 -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등 국외도피사범 발생 억제를 위한 출국금지 강화
 - 주요 국제회의 적극 참석 등 해외 공조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형사사법공조망 확충 노력
 - 제13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ACT-NET) 참석('26. 1월)
 - 'ASEAN SOMTC-영국 스캠센터 관련 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26. 2월)
 -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회의 참석('26년 중)
 - 제5회 국제 지식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WIPO 공동 세미나 개최('26. 하반기)
 - UN초국가범죄방지협약(UNTOC) 국제협력 등 회의 참석('26년 중)
 - UN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 실무회의 참석('26. 5월)
 - OECD 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참석('26. 3월, 6월, 12월)
 - 유럽평의회 협약 담당자 회의(PC-OC) 참석('26. 5월, 11월)
- ※ 위 회의를 포함하여 기타 형사 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 예정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제13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ACT-NET) 참석	1월	
	○ 'ASEAN SOMTC-영국 스캠센터 관련 라운드테이 회의 참석	2월	
	○ OECD 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참석	3월	
2/4분기	○ UN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 실무회의 참석	5월	
	○ 유럽평의회 협약 담당자 회의(PC-OC) 참석	5월	
	○ OECD 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참석	6월	
3/4분기	○ 제5회 국제 지식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WIPO 공동 세미나 개최('26. 하반기)	7~9월	
4/4분기	○ 유럽평의회 협약 담당자 회의(PC-OC) 참석	11월	
	○ OECD 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참석	12월	
연중	○ UN초국가범죄방지협약(UNTOC) 국제협력 등 회의 참석	연중	
	○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회의 참석		
	○ 국외도피 등 자유형미집행자 발생 억제를 위한 출국금지 강화 및 강제추방, 범죄인인도청구 등 집중 송환 추진		

□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 계획

- 외교부, 경찰청,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재외국민 등 직·간접 정책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협의회	국제형사협력 강화 위한 논의	연중

□ 기대효과

- 해외 공조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국제화·디지털화되는 초국가범죄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1-1-일반재정)				
①	검찰운영(1333)	일반회계	7,957 (49,083)	7,937 (55,056)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301)		7,957	7,93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국제형사공조 이행 실적(점수)	101.8	91	78.8	84.9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등의 업무 특성상 소요기간 장기화, 상대국과의 관계, 국제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및 최근 형사사법공조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공조 요청 소요 기간도 증가한 점 등 고려하여, 최근 2년간 평균 실적(84.9점)과 동일하게 목표치 설정	○ A와 B를 합산한 수치 - 한국요청 실적(A) · 이행 건수 / 요청 건수 ×100 - 외국요청 접수 실적(B) · 이행 건수 / 접수 건수 ×100 ○ 가중치 항목 - 요청일 기준 이행일이 1년 이내인 경우(2점) - 국제회의 직접 개최(1점) - 국제회의 참석(0.5점) ※ 측정산식은 형사사법 공조 건수 합계임	자체통계 (외국의 주관적 결정 및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적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평가시 고려 필요)

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I-1-⑤)

□ 추진배경

- 첨단화·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수법에 대응하여 범죄수익 환수 체계 강화 필요
- 피의자의 사망·도주·불특정으로 기소·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사회적 요청 확대되었고,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서민다중 피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해외 유출·은닉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불특정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추진
 - ※ 제22대 국회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8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
-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제도 등 도입
 - 「부패재산몰수법」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을 필수적 몰수·추징으로 개정
 -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 도입
 -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단체이용·유사수신 등 조직적·대규모 사기 범죄에만 허용되는 몰수·추징 범죄피해재산 피해자 환부를 '불법사금융 범죄'에도 허용하는 등 피해자 환부 가능 대상 범죄 확대 추진

○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충 지속 추진

- 금융정보분석원,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과 국내외 협력 확대 강화 및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 네트워크(Eurojust)** 등과의 공조 체계를 통한 각국 법집행기관 간 범죄수익환수 공조 활성화

* 법무부와 UNODC 간 업무협약에 따른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역량 강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설립·운영 중으로, '26. 2월 기준 ASEAN 10개국 및 한·중·일·미 등 22개국 가입

** '25. 4월 법무부는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 네트워크(Eurojust)와 정보공유·형사협력 등을 내용으로 업무협약 체결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등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참석('26. 6월, 10월)
- OECD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등 범죄수익 환수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26. 3월, 6월, 12월)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실무회의 등 국제 형사협력 및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참석('26년 중)
- 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초청연수 참석, 해외 은닉 재산 환수 기법 및 해외 선진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도입 적극 추진('26. 4월)

○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추진

- **(특사경 역량 강화)** 서울시, 지재처, 식약처 등 기관 내부 정기 교육 과정 편성 등 추진 통해 '26. 상반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과정 과목 편성 및 교육 실시('26. 2월)
- **(가상자산 추적 전문 교육)**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및 수사관 대상 전문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 추진('26. 3월)
- **(범죄수익환수 전문화 교육)** 일선 청 범죄수익환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및 수사관 전문화 교육 실시('26. 4월~5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OECD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등 범죄수익 환수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	3월	
	○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추적 전문 교육	3월	
2/4분기	○ 범죄수익환수 전담수사관 실무 역량 강화 법무연수원 교육	4월	
	○ 제11회 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초청연수 참석	4월	
	○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전문화를 위한 법무연수원 교육	5월	
	○ OECD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등 범죄수익 환수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	6월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등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참석	6월	
3/4분기	○ 범죄수익환수 전담수사관 실무 역량 강화 법무연수원 교육	9월	
4/4분기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등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참석	10월	
	○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전문화를 위한 법무연수원 교육	11월	
	○ OECD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등 범죄수익 환수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	12월	
연중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실무회의 등 국제 형사협력 및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참석	연중	
	○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관련 커뮤니티 및 동호회, 세미나 등 개최		
	○ 관련 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하여, 국회·학회 등과 협의하여 관련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적극 참여하고, 특히 독립몰수 대상 범죄, 공소시효 완성 등 독립몰수 도입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국회·학회·법원행정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토론회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	연중

□ 기대효과

-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박탈하여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 사법 정의를 구현하며,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실질적인 피해자 회복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1-1-일반재정)				
①	검찰운영(1333)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301)	일반회계	7,957 (49,083)	7,937 (55,056)
④	공판활동및형집행(1337)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301)	일반회계	7,262 (51,299)	6,620 (52,612)
			7,262	6,6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효율적인 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제도 정비(점)			182.5	187.5	'25년 신규 지표인 점, 법령 개정 절차와 관련한 지표인 점 등 고려, 목표치 달성 가능성은 '26년 입법·정책 추진 환경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실적보다 5점 상향하여 설정	○ 추진 및 가중치 항목을 합산해 총점 산정 ○ 추진 항목(점수) -유관기관 등 협의(각 10점) -검토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의결(각 10점) -법령 제·개정안 검토·마련(각 30점) -법령 제·개정 입안보고·입법예고·제출·공포·시행(각 30점) -학술대회, 회의·세미나 등 참가(각 5점) -보도자료 배포(각 10점) ○ 가중치 항목 -장·차관급 회의(1점) -실·국장급 회의(0.5점) -국제회의 직접 개최(1점) -국제회의 미개최(0.5점)	관련 보고서, 공문서, 법령 제·개정안, 보도자료, 언론 기사, 포스터, 메일 등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건)	3,364	4,478	4,299	3,719	직전 연도 목표치의 10% 상향	전국 청에서 몰수·추징보전 청구한 범죄수익에 대한 법원의 보전 결정 건수(사법경찰관신청 포함)	범죄수익환수 정보시스템(ISF) 통계분석

⑥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I-1-⑥)

□ 추진배경(목적)

-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참여와 형사절차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형사법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의 사법리스크 경감 및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배임죄 개선 업무 지원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및 「수사절차법」 제정 등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지원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형사사법 시스템 관련 국회 입법 논의 지속 지원
 - 국민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노력 지속
- 학계 등과 소통 및 협력 강화
 - 「형사법」 관련 학회에 적극 참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 연구과제 추진 등 교류 확대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간첩죄 등 「형법」 개정 지원	1~3월	
	○ 배임죄 개선 업무 지원		
2/4분기	○ 촉법소년 관련 「소년법」,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4~6월	
	○ 배임죄 개선 업무 지원		
3/4분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형법」 개정 지원	7~9월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4/4분기	○ 국민 형사재판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지원 및 「수사절차법」 제정 지원	10~12월	
연중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제 형사사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거나 입법 논의 시 위원회 의견 개진	연중	
	○ 형사사법시스템 관련 국회 입법 논의 지속 지원		
	○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관계 법령 검토·정비		
	○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연중 수시로 형사법령 제·개정과 관련된 국회, 학계, 법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교정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피해자, 피의자 등 형사 사법 관련자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법원, 대검찰청과 간담회 개최	연중
현장방문	○ 수사관계자, 학회 등 현장 의견 수렴	연중
회의	○ 형사법령 제·개정 및 수사시스템 관련 회의 참석	연중
공청회 참석	○ 국회 등 입법 관련 공청회 참석	연중
국민청원청취	○ 입법관련 국민청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청취	연중

□ 기대효과

- 경제·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형사사법체계 및 수사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 증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1-1-일반재정)				
⑤ 형사사법선진화(1338)	일반회계	349 (349)	349 (34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건)	70	230	440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법제도 정비 등을 위한 노력 과정을 점수화하여 목표치 산출 ○ 법령 제·개정 실적은 국내 상황에 따른 영향이 큰 점 등을 함께 고려, 기계적인 목표 상향 지양 ○ 과제통합으로 인하여 '23년~'25년 평균치(246)의 10%을 상향한 270건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25년도 자문단 개선의견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별 추진 항목마다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제도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 산정 ○ 추진항목(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화·여론 조사·세미나 등 의견 수렴(각 15점) - 연구용역 및 해외 사례 분석·연구(각 10점) - 유관기관 등 협의(각 5점) - 검토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의결(각 10점) - 법령 제·개정안 검토·마련(각 20점) - 법령 제·개정 입안보고·입법 예고·제출·공포·시행(각 30점) - 학술대회, 세미나 참가(각 5점) - 보도자료 배포(각 10점) 	관련 보고서, 공문서, 법령 제·개정안, 보도자료, 언론기사, 포스터, 메일 등

(1)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출소 전부터 사전 접견을 통한 재범위험요인 분석 등 선제적 관리, 심리치료 및 디지털분석 강화 등으로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
- 1:1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확대로 고위험대상자 밀착관리, 일일 단위 생활계획 확인 및 보고된 체류지 이탈 시 알림 경보 신설 등 1:1 전자감독 관리체계 강화
-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피해자가 모바일 앱 지도에서 가해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 법무부-경찰청 잠정조치 시스템 연계,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 범죄수법 등을 분석하여 배달업 등 일정 직업 종사 제한,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통한 직업훈련 등 지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범죄예방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 공감대 형성

-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범죄예방정책을 기존 보도자료 외 SNS, 숏폼·기획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활용, 전달력과 확산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소속직원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담당직원 간담회 개최와 학습 동아리 운영, 자발적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우수기관·우수직원 선정
 - ※ 범죄예방정책국 웹진(소식지) 발간, 홍보대사 활용 정책 홍보 등 실시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교육청·검찰·법원 등 관계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개입 확대를 통해 재비행 예방 강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와 소년보호관찰 업무를 통합한 소년사범 통합기관을 운영하여 성인과 분리된 소년 특화 집행체계 구축

□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안산(여)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여성소년원 확충 등을 통한 과밀 해소
- 소년원생 인권 보호 및 수용관리 안정성 확보 조치 강화
- 정신질환 소년원생 정신건강 치료관리 체계 확대 및 원격의료제도 도입
- 마약·도박중독 및 디지털성범죄 치료·예방교육 강화, 자체 전문가 양성
- 소년원생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증진 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강화
- 소년원생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로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여성병동 추가 운영 및 여성 정신감정 재개
 - 유희병동을 활용, 여성 피치료감호병동과 여성 감정병동 공간을 분리하여 여성병동 추가 개설
- AI 기반 피치료감호자 행동분석 시스템 구축
 - AI 기술을 활용, 자·타해 위험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이상·공격행동을 자동 감지 및 분석, 의료진에게 제공
-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이중화, 의료·헬스케어 분야 최신 ICT 기술 활용을 통한 다각적 개편(1차 사업)

□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불시 약물검사 강화 및 전문가 연계상담 등 치료적 개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 보호관찰 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관리
-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사범에 대한 현장 중심 위주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피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범죄피해자 적극 보호
- 심리상담전문가, 보호관찰위원, 교사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멘토링·콜코칭 프로그램 등 적극 운영

□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 출소자의 자립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 훈련, 취업지원 등 맞춤형 법무보호서비스 제공
- 가석방 확대 등으로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인원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 등 환경조성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정책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정책 홍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자원 적극 활용

□ 대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질서·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민자 및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기초 생활법률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 도모
- 초·중학교 대상 「헌법」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도서·벽지 지역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 교육'에 「헌법」 교육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향상
- 대학생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지역사회 내 법질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실천 문화확산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하향지표)	10.3	10.2	10.2	10.1	과거 3년간 실적 평균 10.2%의 0.1%p 감소한 10.1%를 '26년 목표치로 설정	(당해연도 집중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자 수 / 당해연도 집중 보호관찰대상자 실시인원) × 100	보호관찰통계정보 시스템 ('27. 1월 초 실적 산출예정)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출소 등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 필요
 - ⇒ 출소 전부터 재범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준수사항 추가, 출소 후 밀착 관리·감독 실시 및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등록·관리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1:1 전자감독 확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현장 중심의 밀착 감독 강화
 - 범죄 수법 등 개별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범 방지 대책 마련
 - 디지털 분석관 등 전문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디지털분석 역량 강화 및 의무·준수사항 위반 즉시 즉각적인 수사 개시
 -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광역자치단체 CCTV 연계를 통한 현장 대응력 제고
- 최근 증가하는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필요

※ '20년 보복범죄 357건 → '24년 1,617건으로 약 4.5배 증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 ⇒ '24.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제도 시행 후 보복범죄 피해사례 0건으로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
 - 법무부·경찰청 잠정조치 연계시스템 구축, 정기적 업무협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지속 강화
 -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제공 등 피해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을 추진하여 피해자가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 범죄예방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 공감대 형성

- SNS를 활용한 참여형·공감형 소통으로 변화하고 있는 정책 홍보 환경에 맞는 전략 필요
- ⇒ 보도자료 배포 외, SNS와 숏폼·기획 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활용하여 전달력과 확산력 강화
- ⇒ 범죄예방정책이 '어렵고 먼 행정'이 아닌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상의 정책'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정책 공감도 상승

□ 청소년 비행 초기 단계 대응 강화

- 소년에 의한 흉악·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 초기단계 소년에 대한 선제적·조기 개입 대책 필요
- ⇒ 비행 초기단계 소년에 대한 개별상담·심리검사 확대를 통한 특성 파악 및 정신질환 등 위험 요인 진단, 상담·치료가 필요한 소년 대상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적 개입 실시

□ 여성 소년범죄 급증에 따른 실효적 관리

- 검찰 통계 기준, 최근 10년간 남성 소년범은 12% 감소('15년 57,043명 → '24년 50,193명)하였으나 여성 소년범은 오히려 30% 증가('15년 9,038명 → '24년 11,762명)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신규입원 여성소년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과밀심화
 - ※ (소년원(여)) '15년 349명 → '25년 604명, (심사원(여)) '15년 1,036명 → '25년 1,611명
- ⇒ 단기적으로 임시퇴원 확대로 수용인원을 조절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 과밀 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 계획

□ 여성병동 추가 운영 및 여성 정신감정 재개

- 여성 범법 정신질환자와 피치료감호자 증가 추세로 인해 국립법무병원 여성병동 추가 운영 및 여성 정신감정 재개에 대한 요구 증가
- ⇒ 여성병동 및 여성 정신감정 재개를 통해 치료감호 실효성 제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호관찰 관리·감독 강화

- 성인 보호관찰 담당 직원 1인당 평균 83명의 대상자를 관리·감독함에 따라, 위험징후의 조기 탐지 및 긴급 개입에 역량에 한계
 - ⇒ 선택과 집중을 위해 재범 고위험군을 선별 후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
 - 창원 모텔살인사건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제도 신뢰도 하락 우려
 - ⇒ 대상자의 위험성에 따른 준수사항 추가 신청, 경찰과 정보공유 강화 등 강력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 억제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 신뢰 회복
- ※ '성범죄 징역 5년 출소 후, 모텔서 중학생들 살해' 보호관찰제 무색(26. 1. 29. 언론보도)

□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 출소자에 대한 법무보호서비스 제공 관련 지역사회 반발 및 오해 우려
- ⇒ 지역사회의 출소자 인식개선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범죄예방 효과 등 정책성과 적극 홍보 및 법무보호위원 등 민간자원 활용
-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 우려 및 고용 기피로 인한 취업처 확보 어려움 예상
- ⇒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협력기업 적극 발굴 및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우수사례 공유 등 정책성과 홍보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기반 확충
- 지역사회에서 공단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여 공단 환경 개선 공사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 높음
- ⇒ 공단 소개, 사업 필요성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 등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적극 노력

□ 대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질서·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헌법」 교육 등 가치 법 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 및 법 교육 전문 강사의 전문성 증진 지속 노력 필요
- ⇒ 초·중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헌법」 교육 확대, 도서·벽지 지역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에 「헌법」 교육 추가
- ⇒ 법교육 전문강사의 지도 방법 및 강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교육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

(4) 기타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http://www.cppb.go.kr>)
- 보호관찰 통계분석시스템 홈페이지(<http://www.pist.go.kr>)
- 범정국 유튜브 ‘범죄예방 365’(<http://www.youtube.com/@cppbmoj>)
- 범정국 인스타그램 ‘범죄예방 365’
(https://www.instagram.com/criminal_prevention_365)
- 범정국 페이스북 ‘범죄예방 365’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7813038404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www.koreha.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1-2-①)

□ 추진배경(목적)

-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출소 및 스톱킹 강력범죄 사건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력범죄 방지 대책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1 전자감독 확대 등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

- 출소 전부터 범죄위험요인 분석 및 사전 면담을 통해 고위험대상자 선별, 출소 후 1:1 밀착관리감독, 심리치료 실시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즉각적인 수사 개시 등 실효적인 관리 방안 확립
- 1:1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확대를 통해 고위험대상자 밀착관리, 일일 단위 생활계획 확인 및 보고된 체류지 이탈 시 알림 경보 신설 등 1:1 전자감독 관리체계 강화
- 범죄수법 등을 분석하여 배달업 등 일정 직업 종사 제한,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통한 직업훈련 등 지도
-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 등 전력자의 경우 출소 전 '채팅금지 및 디지털 분석' 점검 준수사항 필수적 신청 등 재범위험요인별 관리 강화
- 스톱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활용 및 실직, 이별, 사회적 고립 등 급성 위험 요인 포착 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등 상황 맞춤형 대응 강화

-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연계와 전문 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통한 적기 치료 및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 보호장구 활용 체포술, CCTV 영상 분석 등 전문교육 실시, 전국 단위 '전자감독 특별수사대'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등 전자장치 훼손 사건 대응력 강화

○ 강력한 피해자 보호 추진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 '26. 6월)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무부·경찰 간 정기적 업무협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협력체계 강화

* (보호관찰소) 가해자 →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 피해자 장치·모바일 앱 제공
(위치추적관제센터) 접근 여부 관제, 경보 발생 시 경찰 통지 (경찰) 현장 출동

- 법무부·경찰청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지도상으로 확인하여 보다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

- 스토킹 치료 수강명령 교육 과정*과 성평등부가 개발 및 보급하는 스토킹 예방교육 자료**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 안전망 확대

* 스토킹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사실, 의무 위반 시 벌칙 등 교육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재범 예방 효과 제고

** 국가기관 및 학교 등에 보급하는 자료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 성평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신상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수사 의뢰, 상시 점검을 통한 신상 등록 정보 실시간 반영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전자감독 신임 신속수사팀장 멘토링 간담회 개최	2월	
	○ 신규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전문화 교육 실시	2월	
	○ 1:1 전자감독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시행	3월	
2/4분기	○ 신상정보등록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6월	
	○ 법무부-경찰청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 실시	6월	
	○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제공 시행	6월	
3/4분기	○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및 수사팀장 합동 간담회	7월	
	○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보호관찰소-경찰)	7월	
	○ 관계성 범죄예방을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	9월	
4/4분기	○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 실시	11월	
	○ 법무부-경찰청 잠정조치 연계시스템 개발	12월	
	○ 전자감독대상자 준수사항 부과·운영실태 점검	12월	
연중	○ 전자감독 대상자 직업 현황 점검	연중	분기 1회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실무과정 교육 실시	연중	분기 1회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점검 및 직권정정	연중	매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접근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경찰청(전자장치 훼손, 고위험대상자 관리, 스토킹 잠정조치), 검찰청(디지털 분석 기법 및 전문가 양성, 수사 실무 교육·공유 등), 국토부(CCTV 연계), 성평등부(신속 정확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등록, 스토킹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지자체(고위험 대상자 관리), 정책 연구 수행 기관 및 외부 평가위원 등

- (의견수렴) 정기적 담당직원 간담회 및 정책방문 등으로 현장 의견수렴,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집행방식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 집행 방안 마련, 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적극 수렴

※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 국민들이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의견수렴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장 간담회 개최	2월
간담회	신규 전담 보호관찰관 간담회 개최	2월
회의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3월
현장방문	전자감독 업무 등 현장 방문	3월
간담회	전자감독 심리치료 담당자 간담회 개최	5월
회의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6월
회의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6월
간담회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및 수사팀장 합동 간담회	7월
간담회	신규 전담 보호관찰관 간담회 개최	8월
회의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9월
간담회	전자감독 심리치료 담당자 간담회 개최	11월
현장방문	전자감독 지도감독, 신속수사 업무 등 현장 방문	11월
회의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12월
간담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장 간담회 개최	12월
설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 기대효과

-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일반 국민 보호,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강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

※ '24. 1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시행 이후 피해사례 0건

- 간담회, 현장방문, 회의 및 SNS 활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으로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Ⅱ-1-일반재정)				
④ 보호관찰(1635)		일반회계	36,847 (53,949)	37,266 (54,948)
■ 전자감독(301)			36,847	37,26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 (하향지표)	1.09	1.00	0.94	1.14	최근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률 추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최근 5년 평균 특정범죄 재범률을 목표치로 설정함 - 실효적인 재범방지 대책 강화로 재범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 전년도 목표치인 1.29%에서 10% 이상 낮아진 목표치임 ※ ① 재범률이 1%대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소수의 재범으로도 재범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데다가, ② '23년 특정범죄에 스토킹범죄가 추가되면서 스토킹 접수사건 대비 스토킹 재범건수가 증가하는 등 재범률 상승 요인이 더욱 증가하였고, ③ '08년 대비 '25년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32배 증가하였으나, 이에 상응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전담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이 증가추세 ('22년 17.1명, '23년 18.2명, '24년 19.5명, '25년 20.7명)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연중 전자감독 대상자 특정범죄 재범건수 / 특정범죄* 전자감독 실시건수)x100 * '특정범죄'는 성폭력·미성년 유괴·살인· 강도·스토킹 범죄를 말함	보호관찰정보시스템 (K-PIS) 통계자료 ※ '27. 1월 초 실적 산출예정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등 처우 프로그램 횟수(회)			신규	4.7	최근 3년('23.~'25.) 평균 실적(4.4회) 에서 약 5% 상향된 4.7회를 목표치로 설정 ※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자감독대상자 교정·교화에 초점을 둔 성과지표 마련 ※ '23년 4회, '24년 4.4회, '25년 4.9회	연중 전자감독 대상자(특정범죄) 심리치료 등 처우프로그램 집행 횟수 / 특정범죄 전자감독 실시건수	보호관찰정보시스템 (K-PIS) 통계자료 및 전국 58개 보호관찰소 심리치료 등 실적보고서 ※ '27. 1월 초 실적 산출예정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1-2-②)

□ 추진배경(목적)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공감형 홍보로 전달력과 확산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 홍보 활성화) 범정국 중점추진과제와 현안 등 정책홍보를 활성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 국정과제, 주요 정책현안과 더불어 우수·미담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례집, 소식지 등으로 제작·배포,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국민 여론, 언론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의 관심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등은 보도자료, 홍보물(영상, 포스터 등)을 수시로 제작·배포
 -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즉시 배포하여 국민들의 혼선 방지
- (홍보역량 강화) 홍보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홍보 확산 기반 마련과 자발적 참여 문화 조성
 - ‘전국 보호기관 홍보담당 직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정책 취지와 성과를 알리는 홍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홍보담당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
 - 홍보 우수기관·직원 선정, 홍보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소속기관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홍보 확산 기반 마련 및 자발적 참여 문화 조성
- (홍보매체 다양화) 기존 보도자료 배포 중심의 홍보방식에서 확산이 빠르고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홍보 정책 실시
 - 범정국 주요 정책을 SNS와 유튜브, 숏폼·기획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활용하여 전달력과 확산력 강화
- (소통 강화) 현장 캠페인, 웹사이트 게시판, 온라인 포스팅 댓글, 유튜브 댓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홍보에 적극적으로 반영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전국 보호기관 홍보담당 직원 간담회' 개최	1~2월	
	○ 소년원 교육 성과 홍보(소년원 학생 대학 입학)	2~3월	
	○ 정책 홍보 동아리 개설	3월	
2/4분기	○ 범죄예방정책국 웹진(소식지) 발간	4~5월	
	○ 범죄예방정책국 업무(범정국 사람들) 홍보 영상 제작	4~5월	
	○ 저스티스 서포터스 운영	5~6월	
	○ 홍보 우수기관·우수직원 선정	6월	
3/4분기	○ 범죄예방정책국 웹진(소식지) 발간	7~8월	
	○ 범죄예방정책국 주요 추진 정책 보도자료 배포	7~8월	
	○ 언론매체 인터뷰, 방송 및 기고	8~9월	
4/4분기	○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12월	
	○ 범죄예방정책국 웹진(소식지) 발간	12월	
	○ 홍보 우수기관·우수직원 선정	12월	
	○ 주요 정책, 행사 등 홍보물 온라인 포스팅	12월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유튜브 등 SNS에 접속하여 정책을 이해하고 댓글 등으로 공감하는 국민, 솔로몬로파크 등에 직접 방문하는 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법무부 저스티스서포터스, 법무보호위원 등 범죄예방 정책에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
- (의견수렴)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범정국 SNS를 이용하는 국민 의견(개선의견, 청원 등)을 적극 반영하여 콘텐츠 개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주요 정책 추진 현장,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 행사 현장 방문	연중
회의	범죄예방 홍보영상 제작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서면, 온라인 등)	연중

□ 기대효과

- 국정과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실효성 제고
- 온·오프라인 정책홍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한 예방법, 범죄 사례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범죄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정책홍보활성도(점)	203	241	415	443	전년도 실적 대비 약 6.6% 상향한 도전적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설명자료, 기고, 인터뷰 등 배포 (건당 1점) •범죄예방정책국 홍보 웹진 발간 (건당 10점) •홍보 영상물 제작(건당 5점)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 제작 (건당 3점) •정책홍보행사 기획 등 (건당 10점) 	해당자료, 결과보고, 동영상 등 관련 자료
온라인 홍보실적(점)	3,445	3,866	3,980	4,243	전년도 실적 대비 약 6.6% 상향한 도전적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튜브 구독자 SNS 팔로우 수 등 (1명당 1점) •홍보영상 관심표현(유튜브 '좋아요' 등) 건수 (건당 1점) •홍보물 온라인 포스팅 (건당 1점) 	온라인 홍보 채널 구독자 현황, 포스팅 자료 등

③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I-2-③)

□ 추진배경(목적)

- 소년에 의한 흉악·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지속적 개입 확대를 통한 비행예방 기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년사법 통합 시범운영 추진

- 기존 보호관찰소의 소년보호관찰 업무를 분리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통합, 성인과 분리된 소년 특화 집행체계 구축 필요
- 서울·광주·안산을 대상으로 소년사법 통합 시범운영을 실시, 다기관 협력 기반 마련 및 위험군별 맞춤형 처우 등 소년사법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소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운영체계 개편

-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소년 기소유예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심으로 운영체계 개편
- 검찰청별로 상이하게 의뢰되던 교육기간을 재비행 위험성을 반영한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표준화*하여 전국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

* 단기과정(1일), 기본과정(3일), 심화과정(5일)

○ 초기비행 예방 개입 확대

- (경찰 선도프로그램)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입건 전 선도교육을 확대 하고 도박·마약 등 중독, 성비행, 학교폭력 등 비행유형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교폭력 가해자교육) 교육 효과성이 입증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하고 강사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내실있게 운영
- (저연령 프로그램) 촉법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프로그램 운영

○ 비행진단 및 사후연계 확대

- 기관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후연계 방식을 개선하여 심리검사·개별상담 등 비행진단을 적극 실시하여 정신질환 등 위험군 선별
- 사후연계 대상은 교육 종료 후 상담전문가 멘토링, 정실진환·도박 등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재비행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모니터링 실시

○ 법원 소년 조사의 전문성 강화

- 상담조사서 내용 평가, 사례회의 실시 등을 통한 조사서 질적 수준 제고
- 소년사법 통합 시범운영 기관은 법원 조사(결정전조사/상담조사) 양식을 통일하고 심리검사 도구 공유 등을 통한 조사 업무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경찰청 업무협의	2월	
	○ 소년 조건부기소유예 교육 집행체계 개편	3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도점검 계획 수립	3월	
2/4분기	○ 비행예방교육 담당자 직무연수	4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간담회	5월	
	○ 회복적사법 강사양성 과정 직무교육	5월	
	○ 상담조사서 1차 평가	6월	
3/4분기	○ 비행예방 전문교육 운영 현황 점검	7월	
	○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9월	
4/4분기	○ 상담조사서 2차 평가	11월	
	○ 상담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청소년·보호자, 범죄로부터 보호 받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경찰·검찰·법원 등 교육 의뢰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등
- (의견수렴) 간담회, 점검회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비행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교육과정 재점검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간담회 실시	5월
현장방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장 지도점검 실시	연중
회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 실시	연중

□ 기대효과

- 비행 초기부터 심화단계에 이르는 소년까지 실효적인 소년비행예방정책 수행
- 비행 초기단계 정신질환 등 위험요인 진단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재비행 예방 강화
- 지역사회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 기회 제공 및 보호자의 보호력 강화
- 소년범죄의 성인범 전이 차단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의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Ⅱ-1-일반재정)				
① 소년보호(1632)		일반회계	5,577 (32,548)	5,656 (34,839)
■ 청소년비행예방(301)			5,577	5,6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비행예방교육 평가점수(점)	93.05	93.20	93.90	94.29	평가점수가 상승 임계치에 도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93.36점) 기준 1% 상향	교육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 실시 (평가점수합계 /평가참여인원)	비행예방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정보시스템 입력 결과
비행예방 전문교육 과정 운영 횟수(회)	173	209	240	264	'25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횟수의 10% 상향 * '25년 전문교육과정 실시인원 1,284명(과정당 평균 교육인원 5명)임을 반영, 올해 목표치는 전년 대비 전문교육 24개 과정, 실시인원 120명 이상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비행예방 전문교육과정 운영 적절성 및 횟수 *전문교육과정 •교육생 특성을 반영하여 1~8명 소규모 동일 집단 구성 •비행예방 전문프로그램 편성 •사전사후 검사 등 결과 분석	비행예방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정보시스템 입력 결과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1-2-④)

□ 추진배경(목적)

- 소년원 과밀 해소 및 인권적 처우 환경 조성 필요
 - 소년범죄 증가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용인원 증가 → 특히 여성 소년원(안양·청주)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심각
 - ※ '25년 전국 기관 연평균 수용률 114% → 여성소년원 15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44%
 - 정기적 수용실태 점검 및 보호장비 개선으로 소년원생 인권보호 증진 필요
- 정신질환자 및 신종범죄(도박·마약·디지털성범죄 등) 대응체계 강화
 - 전체 소년원생의 50%가량이 정신질환자이나 정신과 의사 결원 지속
 - ※ 소년원 정신과 의사 정원 12명 중 현원 1.5명(시간선택제 3명): 총원율 12.5%
 - 도박·마약 등 중독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소년에 대한 걱정 처우 필요
- 촉법·여성·다문화 등 소년원생 특성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필요
 - 소년원생의 기초학력이 일반학교 학생보다 현저히 낮아 증진 교육 필요
 - ※ '25년 기초학력(읽기, 쓰기, 셈하기) 미달률 : 2.1%(경기도, 초중고) vs 50.6%(소년원)
 - 소년원생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필요
- 가족관계 회복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도모
 - 소년원생의 61%가 부모이혼 등 가정결손, 55%가 학업중단, 70%가 가출 경험 등으로 비행에 반복적으로 노출,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여성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과밀 해소
 - (여성소년원 과밀해소) 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을 통한 대전(女)소년원 신설('26년 ~ '29년), 안양(女)소년원 재건축('26년 ~ '30년)
 - (수도권 위탁소년 과밀해소) 안산(女)소년분류심사원 개청('26. 4월) 및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실 증축('26. 9월)

- 소년원생 인권 보호 및 수용관리 안정성 확보 조치
 -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상시점검반 운영, 규율위반자 제재시 인권보호를 위한 맞춤형 감호 교육 강화, 신형수갑 도입 등 보호장비 개선 등
- 정신건강 치료관리 체계 확장 및 원격의료제도 도입
 - 9·10호 처분자에게 한정된 정신건강 치료관리 체계를 7호 처분자 및 위탁 소년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정신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원격의료제도 도입
 - ※ '26년 2개 소년원(안양·대전) 시범 운영 → '27년 전국 기관 확대 시행
- 마약·도박 중독비행 및 디지털성범죄 치료·예방 교육 강화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과 연계, 마약·도박·성폭력 사범 상담·치료, 전체 학생 대상 예방교육, 담당직원 전문가 양성과정 등 운영
- 소년원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교육과정 확대(7→9개 소년원) 및 기초학력 담당자 연수과정 운영(연 1회)
 - 소년원생 취업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진로지도 전문가 양성, 소년원 입원 초기 및 출원 예정 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강화
- 소년원생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부모 상담 및 교육, 가정관 이용 프로그램, 기관 특색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 가족사진 촬영, 가족 참여 음악치료, 가족과 함께 케이크 만들기, 보호자 차량 정비 등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소년원 기초학력 교육 보정학습 교재 제작·배부	3월	
	○ 소년원생 가족관계 회복지원 강화 방안 수립	3월	
	○ 성비행 보호소년 치료프로그램 개선 계획 수립	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 및 운영 개시	4월	
	○ 진로지도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5월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호자용 교재 발간	6월	
3/4분기	○ 소년원학교 교원 직무연수	7월	
	○ 소년원생 인권보호 맞춤형 감호교육 실시	7~9월	
	○ 소년원 기초학력 교육 담당자 직무교육	9월	
4/4분기	○ 소년원 정신건강 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11월	
	○ 소년원 원격의료 제도 시범 운영 결과 분석	12월	
	○ 안양소년원 재건축·대전소년원 리모델링 기본설계 착수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개별특성 맞춤형 교육, 가족관계 회복지원 등을 받는 소년원 입원·위탁생 및 보호자,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복지부(소년원학생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 사전 협의 및 승인), 지자체(시설 개청,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협조 등), 정책연구 수행기관 및 외부 평가위원 등
- (의견수렴)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및 가족관계 회복 콘텐츠 개발 관련 T/F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업무분야별 간담회·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공감대 형성 및 정책 추진 방안 마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T/F	소년원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콘텐츠(책자 등) 개발 T/F	~4월
	안양소년원 재건축 추진 T/F	3월~
	대전소년원 리모델링 추진 T/F	3월~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	소년원 원격의료 설치·운영 관련 보건복지부 승인 검토 협의	2월
	소년보호기관 교무과장·수용사무관 생활지도계장 간담회	9월
	소년원 정신건강 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11월

□ 기대효과

- 안양소년원 재건축 및 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기본설계 시 T/F에서 도출된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 요구에 맞는 설계안 도출
- 원격의료제도 승인 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범 사업 운영,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의료처우 기반 조성
- 소년원생 생활지도, 정신건강 관리 및 가족관계회복 지원업무 담당자 의견 적극 반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Ⅱ-1-일반재정)				
① 소년보호(1632)		일반회계	26,971 (32,548)	29,183 (34,839)
■ 소년원생수용(300)			26,971	29,18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소년원 교육목표 달성도(점)			신규	1.22	(자격증 취득개수 / 3,891개) × 0.3 + (검정고시 합격인원 / 응시인원) × 0.2 + (진학·편입학인원) / (졸업장취득 + 검정고시 합격인원) × 0.2 + (인성교육 수료인원 / 30,321명) × 0.1 + (봉사 활동 참여 인원 / 360명) × 0.1 + (가족관계회복 지원* 실적 / 804건) × 0.1 *가정관 운영 실적 +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실적	소년보호교육종합 관리시스템(TEAMS) 입력결과
				① 자격증 취득, 인성교육, 봉사활동, 가족관계회복 지원 → '26년 교육계획서 상 각 항목의 목표 대비 최근 3년간('23. ~ '25.) 실적의 평균치 * 2026년 성과지표 목표인원 → 자격증 취득 목표 개수(3,891개), 인성교육 목표 수료인원(30,321명), 봉사활동 목표 참여인원(360명), 가족관계회복 지원실적 목표(804건) ☞ 근거 : 「2026학년도 교육계획서」 ② 검정고시 합격, 진학·편입학 → 최근 3년간('23. ~ '25.) 실적의 평균치 ☞ ①+② = 1.17에 5%를 상향한 1.22를 목표치로 산출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I-2-⑤)

□ 추진배경(목적)

-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여 정신질환, 약물중독, 정신성적장애 등 피치료감호자 증상에 맞는 전문 치료·재활을 실시,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여성병동 추가 운영 및 여성 정신감정 재개
 - 국립법무병원 공간확보 및 여성병동 간호인력 조정, 여성 피치료감호 병동과 여성 감정병동 공간을 분리하여 여성병동 추가 개설
 - 여성 정신감정 재개 유관기관 안내,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AI 기반 피치료감호자 행동분석 시스템 구축
 -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맞춤형 치료를 위한 상시 관찰 및 대응체계 구축
 - CCTV로 피치료감호자 개개인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공격행동* 발현 시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행동 인지 및 분석,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제안
 - * 주먹질, 머리 때리기, 발차기, 밀고당기기, 배회하기, 달리기, 점프, 쓰러짐, 드러눕기
-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AI 모델 구축을 위한 장비 및 솔루션 설치, 시스템 운영체제 개편 및 노후 장비 교체
 - 피치료감호자 개인정보, 민감정보 처리 이력 관리 및 연구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비식별화(익명화) 등 시스템 보안 강화 솔루션 도입
- 치료감호 주요 정책 및 성과 홍보 강화
 - 여성 정신감정 재시행, 인지재활치료실 운영, AI 행동분석시스템 구축, 국립법무병원 주요 행사 등 주요 성과에 대한 홍보 적극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여성병동(83병동) 추가 운영	2월	
	○ 인지재활치료실(실벗) 홍보 영상 제작	3월	
	○ 여성 정신감정 재개 및 언론 홍보	3~4월	
2/4분기	○ 발달장애인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 중간 보고	4월	
	○ 의사 보수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연봉 협의	6월	
3/4분기	○ 여성 정신감정 재운영 현황 파악	7월	
	○ 국립법무병원 화재 등 재난 대비 시설 보완	8~9월	
4/4분기	○ AI 기반 피치료감호자 행동분석시스템 구축	12월	
	○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1차 사업 완료	12월	
	○ 치료·재활 주요 프로그램 추진 내역 보고	12월	
	○ 국립법무병원 발전계획(치료환경 개선) 연구용역 완료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일반 국민, 치료 시스템 개선으로 전문성이 강화되는 의료진, 처우개선 및 맞춤형 치료·재활을 받는 피치료감호자
- (이해관계집단) 법원 등 정신감정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업체, 정책연구 수행기관 등
- (의견수렴) 관계기관, 전문가, 실무자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여성병동 추가 운영 및 여성 정신감정 재개	2~3월
협의	인지재활치료실(실벗) 홍보 영상 제작	3~4월
보고	발달장애인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 중간 보고	4월
현장방문	국립법무병원 화재 등 재난 대비 시설 보완	8~9월
보고	치료·재활 주요 프로그램 추진 내역 보고	12월
연구	국립법무병원 발전계획(치료환경 개선) 연구용역 완료	12월

□ 기대효과

- 여성 정신감정을 재개하여 여성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종합 진단으로 양질의 양형자료 제공, 재판 전차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
-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피치료 감호자의 이상·공격행동에 대한 상시 관찰 및 개입으로 이상·공격행동 감소, 개인별 맞춤 치료계획 수립 등 재범예방 관리체계 구축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으로 오류 감소, 전자화로 중복 업무 감소 및 업무 일관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Ⅱ-1-일반재정)				
③	치료감호(1634)	일반회계	12,581 (12,581)	14,776 (14,77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 수료자 기능 개선율(%)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및 전반적 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극, 스노켈렌 등)			신규	83.3	(당해년도 개선인원 / 당해년도 수료인원) × 100 *정신재활치료에 선발된 피치료 감호자 중 기간 내 프로그램을 수료한 인원	국립법무병원 실적 보고

⑥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1-2-⑥)

□ 추진배경(목적)

- 각종 흉악·강력범죄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증대되는 가운데,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예방을 통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호관찰 대상자 강력범죄 재발방지 대책 추진
 -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등 법원과의 업무협약, 경찰-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개편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유인형 성범죄자 전원 디지털분석 수검의무 준수사항 부과·추가 신청
 - 신상정보 공개자, 형기종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즉시 영상통화 및 방문 점검을 통해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지도·점검 철저
- 마약류사범 단속과 치료·재활 병행을 통한 재범 방지 추진
 - 마약류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독전문가를 활용한 연계상담 강화 등 치료적 개입 병행
 -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확대, 수강명령 전문성 제고를 위한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
-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
 -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위험군 관리·감독 강화
 - 정신질환 의심자 전원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상담 및 병원 연계, 증상별 맞춤 치료프로그램 제공 등 치료적 개입 강화
 - 정신질환 대상자 복약 여부 감정을 위한 ‘약물분석실’ 본격 운영 및 하반기 대상 기관 확대 추진

- 생활밀접형 사범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 실시
 - 아동학대·스토킹 등 생활밀접형 사범 개시 초기 고위험자 선별, 외부 전문가 연계상담 및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감독 실시
 -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성폭력 범죄피해자 정보를 파악하여 재피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 적극 보호
-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집중 관리·감독
 - 학교, 지자체, 상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년의 위험요인에 맞는 통합적 개입 및 멘토링 확대
 - 정신질환 소년 및 마약·도박·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소년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치료' 연계 방식의 전문 처우를 확대
-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원호 확대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응급구호·검정고시·심리치료 등 맞춤형 원호 확대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보호관찰-경찰 간 정보공유 확대 업무협약	1월	
	○ 조사담당자 직무전문성 강화 계획 수립	2월	
	○ 수강명령 등 외부강사 평가 매뉴얼 시행	3월	
	○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방안 수립	3월	
2/4분기	○ 소년보호관찰 멘토링, 연계상담 추진(콜코칭, 교사멘토링 등)	4월	
	○ 성인 보호관찰 담당관 간담회 개최	5월	
	○ 디지털분석 수검의무 준수사항 부과·추가 신청	5월	
3/4분기	○ 외출제한명령 스마트워치 확대 보급	7월	
	○ 복약여부 확인을 위한 약물분석실 효율적 운영 검토	8월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협업체계 추진 현황 파악	9월	
4/4분기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효과성 분석	10월	
	○ 마약류사범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운영 점검	12월	
연중	○ 보호관찰기관 지도점검 실시	분기별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보호관찰 대상자 및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보호관찰관, 법원·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 상담·복지 및 치료·재활 전문기관 등
- (의견수렴)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보호관찰기관 점검, 보호관찰 실무담당자 현장 의견 청취	3월~12월
회의	'형사사범 환경변화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하는 '한국보호관찰 춘계학술대회' 개최	4월
간담회	전국 보호관찰관 간담회 개최	5월

□ 기대효과

- 외부 전문가, 현장실무자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고위험 대상자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강력범죄 재범률 감소 및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Ⅱ-1-일반재정)				
④	보호관찰(1635)	일반회계	17,102 (53,949)	17,682 (54,948)
	■ 보호관찰활동(300)		17,102	17,68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25	'26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하향지표)	-	-	5.2	5.0	5.1	5.0	과거 3년간 실적 평균 5.1%의 0.1% 감소(하향지표)한 5.0%를 '26년 목표치로 설정	(당해연도 고위험 대상자 재범자수 / 당해연도 고위험대상자 실시인원) × 100 ※ 고위험 대상자: 살인 범죄, 강도, 성폭력, 유괴, 미약, 보복, 스토킹 등 8개 사범 및 가중표기출소 치료감호 기간만료 후 보호관찰 형기종료 보호관찰 치료명령	보호관찰통계정보시스템 ('27. 1월 초 실적 산출예정)
마약사범·치료명령 대상자 1인당 집중면담 및 연계상담 실시 횟수(건)					신규	4.7	전년도 실적(4.5회)에서 5% 상향된 4.7회를 목표치로 설정 ※ 치료·재활 개입이 필수적인 마약사범·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집중면담 및 연계상담 실시 횟수를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 ※ '24년 4.4회, '25년 4.5회	마약사범·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 집중면담 및 연계상담 실시 횟수/연도말 마약사범·치료명령 보호관찰 현재환 * 집중·주요 대상자	보호관찰정보시스템 (K-PIS) 통계자료 ('27. 1월 초 실적 산출예정)

㉓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I -2-㉓)

□ 추진배경(목적)

-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자립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 재범 방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 고위험 출소자 관리 강화, 다인실 생활에 따른 부작용(범죄오염 등) 방지, 인권위 권고 이행 등을 위한 1인실 리모델링 추진
-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 편견 및 낙인 해소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대국민 정책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무보호서비스 제공 및 사업수행 역량 강화
 - '26년 공단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적응을 위한 AI기능(고용24 잡케어) 활용법 교육, 취업지원사업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전문성 제고
 - 상반기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 분석 등 개선대책 수립
 - '26년 성과 분석 결과 공유 및 차년도 중점 추진 사항 논의를 위한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개최
 - 공단 지부(소)의 거주율, 고위험군 출소자 입소인원 등 숙식제공 현황 상시 점검
- 지역사회 참여 독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기반 확대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활성화를 위한 100호 기업 인증식 개최
 - ※ '09년 ~ '25년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97개 기업체 인증
 - 법무보호대상자 고용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관표창 및 모범 사례 확산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회원 확대를 통해 자발적 고용 참여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법무보호서비스 연계 활성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팀* 구성, 4개 기관(서울·광주·대전·대구)에서 시범 운영 및 효과성 분석
 - * 출소자 등에게 공단 보호사업 안내 업무 등 수행(‘복지부 주관 ’26년 노인 일자리 아이템 개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시범사업 선정)
 - 분기별 3자 협의회*를 지속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간 협업 지속 노력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 KT&G(가족지원), LH(주거지원), 농협·지자체(긴급지원) 등과 협업 강화
-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시설 확충 및 사회정착 지원 확대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 등으로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강화, 다인실 생활에 따른 부작용(범죄 오염 등) 방지, 인권위 권고 이행 등을 위한 1인실 전환
 - ※ 공단 생활관 1인실 리모델링(인천·대구, ’27년 완료 예정)
 - 전국 26개 집중사례관리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기별 사례회의 실시
 - 고위험군 출소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단 자체 T/F 구성을 통한 관리 매뉴얼 제작
 - 고위험군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정책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 공단 홍보 간행물(소식지 등) 제작 및 배부
 - ※ 소식지(반기별), 브로슈어(4월), 법무보호연감(7월), 사례집(10월) 등
 - 법무보호위원 사기 제고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명예의 전당 헌액식 및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 공단 홍보영상 제작 및 범죄 예방 효과 등 정책성과 언론보도 전개
- 법무부와 공단이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T/F’ 구성·운영
 - 준정부기관 지정을 계기로 정관 개정, 내규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6년 공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1월	
	○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사전교육	2월	
	○ 취업지원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3월	
2/4분기	○ '26년 공단 대국민 인식 조사	4월	
	○ 취업지원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	5월	
	○ 명예의 전당 헌액식 행사 개최	6월	
	○ 집중사례관리팀 매뉴얼 제작	6월	
3/4분기	○ 상반기 취업지원사업 실적 점검 및 개선 대책 수립	7월	
	○ '25년 법무보호연감 발간 및 배부	7월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100호 기업 인증식 개최	9월	
4/4분기	○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12월	
	○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실시	12월	
	○ 직무 중심 조직 관리체계 개편(고도화)에 관한 연구	12월	
연중	○ 공단·보호관찰·교정 3자 본부 협의회 개최	분기별	
	○ 재범 고위험군 집중사례관리팀 사례회의 실시	분기별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국민
- (이해관계집단) 법무보호위원, 법무부 우수일자리 기업,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등
- (의견수렴) 전국 공단 지부(소)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및 우수 사례 발굴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정책 현장 방문(공단 지부 등)	연중
간담회	지도점검 기관 소속 직원 간담회 및 면담 실시	연중

□ 기대효과

-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따른 재범 억제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에 기여
- 생활관 1인실 전환을 통한 다인실 생활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강화로 인한 국민 안전 확보 기대
- 법무보호사업의 효과성, 자원봉사 활동 등 적극 홍보를 통한 대국민 공단 정책 이해도 제고, 우호적 여론 조성 및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Ⅱ-1-일반재정)			
② 갱생보호(1633)	일반회계	46,856 (46,856)	48,468 (48,4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사회복귀율(%)	81.70	83.34	82.98	83.08	최근 3년간 실적 및 추세 고려, 전년 실적 대비 목표치를 0.1% 상향	사회복귀 인원*/ 사회복귀 지원 종료 인원**×100 * 자립 인원 + 주거 마련 인원 + 자활 인원 - 자립 : 숙식제공 종료자 중 취업, 300만 원 이상 저축, 보호자 인도 - 주거 마련 : 주거지원 종료자 중 전월세 및 자가매입, 계약전환 - 자활 : 직업훈련 참여자 중 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 일자리 프로그램 수료자 중 취업 ** 숙식제공 종료 인원, 주거지원 종료 인원, 직업훈련 종료 인원, 일자리프로그램 수료 인원	내부 전산시스템 입력자료 표집

⑧ 대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질서·법교육 프로그램 운영(1-2-⑧)

□ 추진배경(목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및 마약·도박 등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
-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이민자 및 북한이탈청소년, 도서·벽지 지역 학생 등을 위한 사회배려계층 법교육 지속 제공 필요
- 기본권·인권 등 「헌법」 교육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대학생들의 온·오프라인 법질서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의 법준수 의식 향상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헌법교육 확대
 - (청소년 헌법교육)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초·중학교에서 운영한 「헌법」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 ※ '25년 초·중학교 913학급 → '26년 초·중·고등학교 2,000학급 이상 목표
 - (찾아가는 법교육) 도서·벽지 지역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에 「헌법」 교육 추가
- 신종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법교육 프로그램 제공
 - (법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여 범죄예방 법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 (범죄취약계층 법교육)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사회초년생 대상 법교육 확대
 - ※ 청소년 대상 마약·도박 예방 교육 강화 및 사회초년생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 법교육 사각지대 해소

- (도서·벽지 지역) 법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벽지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찾아가는 법교육' 제공
- (사회적 배려계층)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개발한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법 관련 현장 견학 기회 제공
- (사회통합) 우리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청소년·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헌법」, 실생활에 유용한 기초 생활법률 교육 실시
- (아동) 법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규칙 준수, 생명존중 등 눈높이에 맞춘 법교육 제공

○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청소년 체험형 법교육 3종 프로그램' 운영

-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교폭력·인성교육 등을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학교 대상으로 보급
 - (학생자치법교육) 학급 단위로 자치 규약을 제정하고 위반 사항을 판단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험
 -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행하는 법과 인권 체험 동아리를 육성·지원하여 청소년의 공감력과 긍정적인 실천 역량 강화
- ※ 대학생 중심의 '저스티스 서포터스'와 협업하여 비수도권 중심으로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지역 간 법교육 격차 완화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 신규 모집한 법교육 전문강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법교육의 이해, 교수 학습법 및 필기·시연 평가 등 양성과정 실시
- 교육현장 모니터링 확대, 법교육 우수사례 및 신중 강의안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보수교육 5회 실시

○ 법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실시

- 대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법질서 실천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운영하여 법질서 캠페인 활동 전개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6년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1월	
	○ 학교 현장의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1월	
	○ '26년 법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 계획 수립	2월	
	○ '26년 저스티스 서포터스 운영 계획 수립	3월	
2/4분기	○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모집 및 선정, 발대식 개최	4월	
	○ '학생자치법교육' 워크숍 개최	5월	
	○ 저스티스 서포터스 선정 및 발대식 개최	6월	
3/4분기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9월	
	○ 저스티스 서포터스 캠페인 굿즈 디자인 공모전 개최	9월	
4/4분기	○ '꿈꾸는 디케' 사례 발표회 개최	12월	
	○ 법교육 프로그램 최종보고회	12월	
	○ 저스티스 서포터스 프로그램 운영 결과 최종보고회	12월	
연중	○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분기별	
	○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법질서 캠페인 전개	분기별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법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 법교육 위탁 기관
- (의견수렴) 법교육 수료 후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만족도 및 법준수의식 등 측정으로 일반 국민의 의견 적극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법교육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연중
설문조사	법교육 설문조사 실시	연중

□ 기대효과

- 시민의식 향상과 준법문화 확산을 통해 일반범죄예방에 기여하고, 누구나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모두가 민주시민 역량을 갖춘 안전한 사회 구현
- 법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유관기관 협업 및 민간 법교육 기관 참여를 통해 법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Ⅱ-1-일반재정)				
⑤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1636)	일반회계	6,277 (6,277)	5,678 (5,67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여인원(명)			신규	224,000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총계로 최근 3년 실적치 평균보다 5% 향상한 적극적 목표 설정 ※ 제한된 예산 내에서 「헌법」 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타교육 인원을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성과수치가 높지 않지만 도서·벽지 학생 대상 법교육 등 사회배려계층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체 실적 목표치를 산정함	법교육 프로그램 11종 및 저스티스 서포터스 참여자 수	자체집계

기본방향

◇ 주요내용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년 ~ '27년) 수정·보완, '25년도 이행점검, 국제인권 기준에 맞는 국내 이행법률 제정 등 지원 및 국제인권 대응 철저
- 인권침해사건 처리절차 개선, 직접조사 확대, 전방위적 집중 실태조사 점검, 조사업무와 제도개선의 연계 강화, 인권친화적 법무검찰 구현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범죄피해자의 건강한 사회생활로의 복귀 지원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강화를 통한 법률복지 실현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내실화,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 운영 추진
- 교정시설 과밀·노후화 해소 및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해 신규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의 홍보를 통해 국민과 언론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책 만들기 추진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민원인에 대한 장소변경접견 확대, 교정시설 방문 고충 민원인에 대한 스마트접견 및 업무의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변호인 스마트접견 활성화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재범예방을 위한 개별처우계획 실효성 제고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다양한 조건부 가석방 제도 활성화
- 산업수요에 맞는 빈 일자리, 신기술 직종 및 취약계층 수형자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발굴을 통하여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 다양한 교정교육, 귀휴,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수형자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유형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부서 운영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 재활 체계 구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인권옹호 정책을 총괄하고 국제 인권기준과 국내 인권정책의 연계성 제고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조사하여 처리하고, 실태조사, 설문조사, 제보 등을 통해 인권침해사건을 인지·조사하여 처리,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
- 헌법상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사회생활 복귀 지원 필요
- 중대아동학대범죄 지속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며, 여성·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진술조력 필요
-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대법원 국가배상판결에 따라 신규 수용공간 확충 필요성 대두
- 교정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 마련 필요
- 변호인의 접견제도 개선 요청에 따른 업무상 효율성 개선 및 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등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강력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에 따른 국민적 불안과 우려 증대로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 재범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
-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수용자 의료 처우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 효과 달성
- 학령기 소년수형자의 학습권 보장 및 검정고시 응시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 및 사회적 처우를 통한 교정·교화 효과성 제고
- 범죄유형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지속적 증가와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독재활 필요

◇ 임무·목표 간 연관성

- 국가 인권정책 수립, 인권침해 예방,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및 교정행정 선진화를 통한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행정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4	13	2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위 권고 수용률 (%)
1. 인권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권가치를 실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교육 만족도(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실적(건)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옹호 활동(점)
	②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활동 실적(점) 인권침해사건 직접 조사 실적(건)
	③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지원 만족도(점)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스미일센터 지원 실적(건)
	④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인원(명) 피해자 법률조력 및 진술조력 지원 건수(건)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일평균 교정시설 수용률(%)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수용 공간 확충 실적(인원) 교정시설 조성 사업 관련 갈등 해소 노력 실적(점수)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홍보노력도(점) SNS 활성화 실적(점)
	③ 교정 접견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장소변경 접견 이용 건수(건) 스마트접견 횟수(건)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공통)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다면적 평가 시행실적(건) ■ 조건부 가석방 허가 실적(건)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수형자 만족도(점) ■ 직업훈련 수형자 자격증 취득률(%)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응시인원(명) ■ 사회적처우 실적(점)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실시율(%) ■ 만성질환자 정기적 측정률(%)
	⑧ 재범방지를 위한 수용자 맞춤형 심리치료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문화 실적(점) ■ 심리치료 프로그램 집행실적(점)
	⑨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사범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 구축(점)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집행실적(점)

(1) 주요내용

□ 인권보호체계 구축으로 인권수준 향상

- 국가 인권 정책의 추진체계를 총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 향상

□ 인권 존중과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정 정책 추진

- 교정시설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한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
- 인권 친화적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의료처우 내실화를 통한 수용자 건강권 보호
-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양성 및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이상동기 범죄자 등 범죄유형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수형자 재범방지 도모
- 마약사범 대상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재활 인프라 구축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방안 마련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25	'29			
인권위 권고 수용률(%)	92.9	92.2	85.8	78.8	83.3	90.0	과거 실적 및 추세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인 89.3%를 감안하여 '29년에는 90%를 목표로 설정	법무부 수용 건수 ÷ 인권위 권고 건수 (일부 수용의 경우 0.5건으로 집계)	인권위 권고 통지 공문

(1) 주요 내용**□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새정부의 인권정책 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3년~'27년)' 수정·보완 및 전년도 이행상황 점검
- 인권옹호 총괄부처로서 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등 국제인권활동 활발히 진행

□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
 - 법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시대·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화, 직렬별 내부강사가 직렬 특성에 맞는 인권감수성 증진 교육 실시, 내부강사의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속 실시 등으로 내실있는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

□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경제·법률·심리·자립 등 각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이를 온·오프라인 통합체계로 연결하는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속 추진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 지원

□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편 및 사건관리회의 기능 내실화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
 -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사례관리, 전문화교육, 전국 인원 확대 등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진술권 보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인권교육 만족도(점)	87	89	88.5	91	○ 최근 3년간 실적(88.1점) 및 추세를 고려하면 상승률 1.7%로 '26년에는 90점이 예상되어 '25년 실적을 기준으로 3% 상향	인권감수성 교육 종료 후 조사한 개인별 교육만족도 점수의 합 ÷ 교육자 총수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실적(건)	160	167	163	164	과거 3개년 평균(163)보다 높은 164로 설정	[(상담건수 × 1) + (경제·의료·주거지원건수 × 4) + (신변보호·법정동행건수 × 5)] / 1,00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시스템 (camp)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인권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 차이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관계부처,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 및 의견수렴 필요
- ⇒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등과 간담회·포럼 등 개최하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 법무부 소속 공무원 개인별 또는 기관별 업무환경에 따라 집합교육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
- ⇒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국제조약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강좌 개설 요청·신설, 구급·보호시설 정기 실태조사와 연계한 인권침해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인권교육' 확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추진 과정에서 민·관 참여기관간 의견 조정 필요
- ⇒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협의체' 등 유관기관 참여 협의체 구축 및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 교류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실시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지역별 불균형 완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 전담 인력의 지역별 인원 불균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안정성 등에서 지역별 편차 발생, 정책 체감도 저하 우려
- ⇒ 전담 인력의 지역별 배치·활용 현황을 점검, 전담 인력 미배치 지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비전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지역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노력할 계획임

(4) 기타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인권
- 인권위 국제인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uhr.humanrights.go.kr)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www.moj.go.kr/cvs/index.do)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홈페이지(www.kcva.or.kr)
- 스마일센터 홈페이지(www.resmile.or.kr)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www.lawhomedoctor.moj.go.kr)
- 범죄피해자지원포털(www.kics.go.kr)
-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Ⅱ-1-①)

□ 추진배경(목적)

- 인권침해 소극적 방지에 주안점을 두었던 정부 주도 인권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고 적극적 인권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적·통합적 인권정책 수립 및 이행 필요
- 또한, 국제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국제인권기구·시민사회·관련 전문가와 소통하며 인권 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권거버넌스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새정부의 인권정책 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3년~’27년)」 수정·보완 및 전년도 이행상황 점검
 - 이행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여 이행상황 점검
- * 장관(의장), 차관, 재경부·교육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 및 국조실 차관(급)
- 인권위 권고에 대한 실·국·본부 이행계획별 현황·통계 관리와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의견 회신으로 권고 수용률 제고 노력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차별금지법,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홍보, 법안 검토 및 정책 추진*
 - * 관련 지시사항: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26. 1월)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5차 쟁점목록 답변서 작성 후 제출 예정
 - 쟁점목록에 대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시민사회, 인권위 의견을 청취 후 이를 반영하여 정부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 예정
- 유엔 9대 핵심 인권협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에 따라, 강제실종 위원회가 채택 예정인 질의목록에 대한 후속조치 예정
 - 질의목록에 대한 시민사회 및 인권위 보고서 분석, 질의목록 국문 번역 등 이후 질의목록에 대한 우리 정부 답변서 작성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후속보고서 작성 후 제출 예정
 - 국제인권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및 특별보고관 방한 대비 유엔 인권 메커니즘 워크샵,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기관 간의 인권정책의 연계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유기적으로 대응 도모
 - ‘인권의 주류화’ 관점에서 인권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인권 관점 의견 적극 제시, 인권 카드뉴스 등 발간 및 배포 등
- 국외 인권상황 관련 유엔 서한 질의·개인진정 답변, 국제인권협약 국가 보고서 작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방문조사 대응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관련 지시사항 처리	2월	
	○ 유엔 사회권 규약 쟁점목록 답변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2월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지원 제도 홍보	3월	
	○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답변서 제출	1~3월	
2/4분기	○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쟁점목록 답변서 제출	4~5월	
	○ 주요 인권 현안 관련 의견안 검토	4~6월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4~6월	
3/4분기	○ 미 국무부 인권, 인신매매보고서 관련 대응	7~9월	
4/4분기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5년 이행상황 점검	10~12월	
	○ 강제실종방지협약 질의목록에 대한 후속조치 대응	10~12월	
	○ 유엔 자유권규약 후속보고서 제출	12월	
	○ 국제인권 포럼 토론회 개최	11~12월	
연중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국제인권 상황 질의 대응	연중	
	○ 국내외 인권 이슈 등의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발간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인권정책자문단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 국제인권 관련 관계부처·기관·시민단체 대상 회의 등 개최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유엔 사회권 규약 쟁점목록 답변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2월
간담회	국내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3월
워크숍	유엔 인권메커니즘 워크숍 개최	4월
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관련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회의	4~6월
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관련 인권정책자문단 및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회의	9~12월
토론회	국제인권 포럼 토론회 개최	12월

□ 기대효과

- 범정부적·통합적 인권정책체계를 수립하여 인권을 우선하는 정책 및 법제를 구축하고, 국민 인권 수준 향상 도모
-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체계를 마련하여 국제인권 선도 국가로 발돋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적 취약계층 인권옹호를 위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IV-1-일반재정)			
③ 국제인권증진(1139)	일반회계	246 (246)	266 (26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옹호 활동(점)	232	281	351.6	4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정책 관련 협의회 : 연 3회 (전년 3회) - 인권정책 간담회·관계부처의견 조희: 연 25회(전년 20회) - 법무행정인권모니터링 실시: 6회 (전년 5회) -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9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내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17건 (전년 10건) · 법령 검토의견 제시: 50건 (전년 38건) · 유엔 결의안 등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정부 의견 제시: 26건 (전년 21건) - 국제인권관련 회의참석: 31회 (전년 26회) - 국내외 인권 이슈 등의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인권정책 관련 발간물 등 발간 10건 (전년 7건) <p>※ 국내, 국제 인권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 활동의 실적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금년 목표치는 전년 실적 대비 최근 3년간 실적 추세 평균 23% 보다 추세평균 10% 상향한 25.3%로 설정</p>	<p>활동실적×가중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횡수 x 5 - (간담회·부처 의견조회) 횡수 x 4 - (인권모니터링) 횡수 x 4 - (인권정책의견 제시) = (부내정책의견 제시) 횡수 x 1 + (법률안의견 제시) 횡수 x 1.7 + (국제인권규범 의견제시) 횡수 x 3 - (국제인권관련 회의 참석) 횡수 x 3 - (카드뉴스, 발간물 등 발간) 건 x 3 <p>※ 우리과 추진 법안 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건 x 5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건 x 10 - 국회 본회의 통과 건 x 20 	<p>공문, 회의자료, 발간물 등 '26. 12월 실적 산출예정</p> <p>※ 「'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지표 개선 컨설팅 및 관리과제별 개선보안 필요사항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인권정책 의견에 대한 가중치 조정 및 우리과 추진 법률안에 대한 가점 부여</p>

②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Ⅱ-1-②)

□ 추진배경(목적)

-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체 조사·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156개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확대
 - '26년 총 35개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 ※ 교정시설 14개소, 검찰청 구치감 8개소, 외국인보호시설 8개소, 소년보호시설 5개소
 - 수용자 간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집중점검
 - ▲ 교정본부의 반복적인 폭행사고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간 폭행·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므로, 수용자 폭행, 사망 등 사건으로 언론보도 된 시설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소년·외국인 보호시설로의 전방위적 점검('26. 1월)
 - ▲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바탕으로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일선의 자체 계획 실효성 점검, 본부 차원의 일원화된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점검 요구('26. 3월 ~ 9월)
 - 민영교도소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 ▲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대한 실태조사가 2회('12년·'19년)에 불과, 최근 유명 연예인의 소망교도소 입소 조건 금품 요구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도관의 우월적 지위 등에 의한 사항을 중점으로 인권침해 상황 등을 집중 조사('26. 하반기)
- 주제별 실태조사를 통한 조사 업무와 제도개선의 연계 강화
 - 정기 실태조사,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제도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인권실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 1회 집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 ※ '25년 주제별 실태조사 : 노인·장애인·외국인 등 특별보호 수용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담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 및 시설 등 집중 점검('25. 11월)

○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신속 구제기능 확보

- 화상조사시스템 구축하여 원거리 구급·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사건 직접조사 확대 등을 통한 인권침해사건 신속 조사·구제 강화

구분	화상조사 시스템 구축	사건접수	직접조사	화상조사
'10년	8개소	1,023	370	98
'21년	57개소	4,062	2,622	771
'22년	63개소	4,002	2,584	904
'23년	69개소	4,395	2,830	1,169
'24년	71개소	4,520	2,984	1,233
'25년	73개소	4,570	3,000	1,388

※ '26년에는 기존 노후화된 화상조사시스템 장비 등을 교체하고 전국 법무부 구급·보호시설로의 화상조사시스템 순차적 추가 설치 및 인권침해사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중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대응: 신속대응반을 편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스템 점검을 통한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중심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 인권침해사건 심사분석서 발간 및 배포하여 매년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분석하고 향후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

○ 인권교육 실시

- 법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시대·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화, 직렬별 내부강사가 직렬 특성에 맞는 인권 감수성 증진 교육 실시, 내부강사 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등 내실있는 인권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

○ 인권보호상황평가 실시

- 법무부 산하 200개 기관에 대해 연 2회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실시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1~3월	
	○ '25년 인권침해사건 심사분석 실시		
	○ '25년 하반기 인권보호상황평가		
	○ '25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 '26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계획 수립		
2/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4~6월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실시		
3/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7~9월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실시		
	○ '26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평가		
4/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10~12월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구금·보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수용되었던 사람 및 그 가족, 출입국·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추진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면담 및 설문조사	○ 구금·보호시설의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면담 실시	연중
	○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인터뷰 및 설문조사	○ 법무부 소속 직원 대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인터뷰	
	○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기대효과**

- 인권침해에 대한 자체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법무행정 수행과정의 인권보호 증진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 조사 및 효과적인 구제기능 확보로 법무행정 전반의 인권보호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적 취약계층 인권옹호를 위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IV-1-일반재정)				
② 인권증진(1133)		일반회계	191 (436)	192 (437)
■ 인권교육(300)			191	19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실태조사 활동 실적(점)	1,822	2,195	2,480 (신규 산식 보정한 실적치 3,208)	3,304	- 정기실태조사 대상기관을 35개 기관으로 하고, 사후적 구제중심에서 인권침해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하는 주제별 집중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 - '25년도에 목표 대비 11% 초과 달성 하였으나, 대상기관이 1년 최대치인 35개로 유지된 반면 인력을 추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목표치 상향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보정된 산식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25년 실적치에 3% 증가분을 반영하여 3,304점을 목표치로 설정	(정기실태조사 기관 수×7) + (주제별집중실태조사 기관 수×21) + (개선조치 건수×8 + 설문조사인원×0.2) + (면담인원×1) + (보고서작성×2)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10)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인권침해 조사 관련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구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기존 산식에서 개선조치 가중치를 기존 4점에서 8점으로 확대)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실적(건)	2,830	2,984	3,000	3,085	- '25년도에 목표 대비 0.5% 초과 달성하고, 사건 수는 '22년까지 감소하였다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특정 개인, 단체,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단순반복 민원성 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인 2,938건에 3년간 평균 추세치인 85건을 반영하여 3,085건을 목표치로 설정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건수	인권침해사건 시스템 통계자료

③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Ⅱ-1-③)

□ 추진배경(목적)

- 피해 발생 초기부터 사회 복귀까지 회복의 전단계에서 경제·법률·심리지원 등을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주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사법 접근권 보장 및 기본권 보호 필요
- 생업·학업, 물리적 거리, 신체·정신적 제약 등으로 스마일센터 방문이 어려운 강력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 접근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추진
- 구조금, 경제적 지원금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지속 추진
- 범죄피해자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센터 운영 관련 개선 방안 도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옹호,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상호 소통 강화를 위한 '다링 안심 캠페인',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등 각종 국민 참여 행사 실시
- 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상담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365 스마일' 운영
- 스마일센터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 연합사례회의·통합사례자문회의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역량 강화
-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스마일공익신탁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이해 및 관심 제고
-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시행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365스마일 인력 채용 및 시설 개선 실시	2~3월	
2/4분기	○ 전국 스마일센터 센터장 회의 개최	4월	
	○ 스마일센터 연합사례회의 개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한 다량 안심캠페인 개최	5~6월	
3/4분기	○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스마일 공익신탁 실시	6~7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실시	9월	
4/4분기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홍보계획 수립	10월	
	○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11월	
	○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 개최		
	○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개최	12월	
	○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스마일 공익신탁 실시		
연중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현장점검 실시	연중	
	○ 스마일센터 운영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 스마일센터 종사자 전문역량 개발 교육 실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및 법률구조공단, 유관기관 참여·협력 회의 실시
- 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법률홈닥터 등 지도점검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및 현장방문	○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및 법률구조공단, 유관기관 참여·협력 회의 실시	연중
지도점검	○ 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법률홈닥터 지도점검 실시	

□ 기대효과

- 피해 발생 초기부터 사회 복귀까지 회복의 전단계에서 경제·법률·심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상담(365스마일) 및 찾아가는 심리 지원 실시를 통한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접근성 제고
-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 역량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적 취약계층 인권옹호를 위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IV-1-일반재정)				
①	법률구조(1131)	일반회계	72,480 (72,480)	72,320 (72,320)
④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1135)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40,275 (40,275)	48,446 (48,4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점)	91.1	91.5	91.3	91.4	만족도 조사 결과가 90점 이상 임계치에 올라와 만족도 상승이 어려우나 적극적인 목표설정을 위해 최근 3개년 평균 실적(91.3)보다 높은 91.4점을 목표로 설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실제 정책 체감도 측정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공통)	17239	18929	20073	19,000	<p>법률지원 실적은 소송비용 예산과 직결되는데, '26년 소송구조 예산(송달료 등 실비, 변호사보수 등)이 전년 대비 35억원 감액되어 '25년 실적보다 상향한 목표치 설정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큼.</p> <p>이를 고려하여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인 18,747건보다 상향한 19,000건을 도전적 목표로 설정</p> <p>※ 현재 '26년 성과계획서 목표치는 18,076건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보다 도전적 목표를 위해 소폭 상향</p>	<p>법률구조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소상공자영업자,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자, 장애인, 플랫폼 종사자 등) 법률지원 건수의 총합,</p> <p>법률구조 플랫폼 등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 협력 건수의 총합</p>	<p>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 통계 프로그램 실적 집계</p>
스마일센터 지원 실적(건)	82974	80269	87917	90,000	<p>최근 3개년 실적 연평균 증가율 2.37% 반영한 90,000건을 목표로 설정</p>	<p>스마일센터 심리 지원·사회·법률·임시 주거 등 지원 실적의 합계</p>	<p>스마일센터 전산 통계 프로그램 실적 집계</p>

4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Ⅱ-1-④)

□ 추진배경(목적)

- (아동인권증진) 아동학대 발견율 증가 및 중대아동학대사건의 지속적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전예방부터 사후조치에 이르는 전방위적 아동학대 방지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수사 및 공판절차 출석, 의견진술 등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 수요 증가

※ (근거) 「성폭력처벌법」(해당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포함),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12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25. 12월 까지 총 344,818건 지원

- (진술조력인 지원)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진술조력 지원 요구 증가

※ (근거) 「성폭력처벌법」(해당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포함),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13년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후 신규 자격부여, '14년부터 진술조력인 지원 시작, '25. 12월까지 총 31,798건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아동인권 증진

- (법령검토) 「아동학대처벌법」 등 소관 법령의 쟁점을 상시 점검하고,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간담회 등을 통해 법적 지원체계 내실화
- (교육개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 교육의 대상자 구성·권역·교과목 체계를 재설계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 (사건관리회의) 사건관리회의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관련 처분·보호·지원 방안에 대해 지역 전문가 의견 수렴 촉진

-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내실화

- (규칙 정비)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해 현직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유관단체 소속 변호사 등으로 '규칙 개정 자문단' 구성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칙 개정·내실화

- (전문화 교육) 사건유형(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스토킹 등)별 범죄 피해자 특성에 따른 실무 중심 커리큘럼 운영,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관련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실무 교육 운영 등을 통한 피해자 법률지원 소양 강화
- (운영 점검) 권역별 간담회 및 실태점검을 통해 근무환경·사례처리 애로사항 정기적 수렴, 제도개선 과제 도출·반영
- (제도편차 완화) 배치현황·사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 중복 등재 방식* 등을 통한 배치·업무지원 방식 개선(안) 마련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 외 인근 지역 검찰청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중복하여 등재하여 복수의 지역에서 지원 가능토록 하는 방식

○ **진술조력인 제도 전문성 강화**

- (사례관리)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우수 조력 사례를 공유하여 진술조력 전문성을 향상하고 향후 교육과정에 환류
- (자격관리) 진술조력인 자문단 및 제도개선 T/F를 통해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방식·교육과정·자격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견을 반영
- (신규 양성·보수 교육) 신규 양성 및 보수교육을 사례 기반 중심으로 개편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예산 배정 및 활성화 방안 안내	1월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합동교육 계획 수립	2월	
	○ 아동학대 전담수사관 교육 통합 추진계획 사전 안내	3월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3월	
2/4분기	○ 아동학대 전담검사 교육 실시	5월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합동교육 실시	5월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6월	
3/4분기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합동교육 실시	8월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교육	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 '26년 진술조력인 신규 자격부여	10월	
	○ 부서 소관 범죄 피해자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12월	
	○ 진술조력인 보수 교육 실시	12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12월	
연중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실적 점검	분기별	
	○ 상근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	매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례 간담회 실시) 피해자 국선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검찰청 등 유관기관 권역별 간담회 개최 → 제도 운영 상 의견 수렴 및 개선과제 도출
- (현장 방문)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기관 내부시설 및 근무환경 점검, 진술조력인 활용 관련 의견 수렴
- (사례관리회의) 매월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진술조력 우수사례 공유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반영을 통한 역량 강화
- (진술조력인 자문단 및 제도개선 T/F 운영) 진술조력인 자문단 및 제도 개선 T/F를 통해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방식·교육과정·자격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피해자국선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검찰청과 권역별 간담회 개최, 실태조사 실시	연중
현장 방문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운영 환경상 개선 과제 발굴	연중
회의	진술조력인 사례 관리 회의를 통한 우수 사례 공유	매월
회의	진술조력인 자문단 회의를 통해 신규양성 방식, 교육과정, 자격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향후 과정에 반영	2월

□ 기대효과

- (2차 피해 방지·권익보호)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 조력 지원을 확대하여 심리적 부담 경감, 의사표현 보장, 절차 참여권 강화 등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
- (대응역량 강화) 합동교육·전문과정 및 사건관리회의 지원을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여 사건 대응의 일관성·신속성을 높임
- (정책환류 내실화) 현장 의견과 자문단 개선의견을 시행계획·교육·지침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통해 제도 운영 내실화, 지속가능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적 취약계층 인권옹호를 위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IV-1-일반재정)				
② 인권증진(1133)	일반회계	245 (436)	245 (43.7)	
■ 아동인권 증진(302)		245	245	
⑤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1136)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14,857 (14,857)	13,856 (13,8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인원(명)	754	800	817	830	최근 3년간 평균 교육인원(790명)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4.09%)을 상회한 5%를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23년부터 복지부와 합동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23년부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이후 예산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교육대상자 확대 의지를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이와 같이 목표치를 산출함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인원 측정 ※아동학대 합동교육 결과보고서에 산출된 인원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결과보고 '27. 1월 말 실적 산출 예정										
피해자 법률조력 및 진술조력 지원 건수(건)	41,381	42,122	43,222	43,500	제도의 지원건수는 사건발생 및 절차진행 등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실적의 변동성이 비교적 큰 편이나,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5년 장기추세(연평균 증가율 약 0.34%)를 상회하여 달성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수치인 43,500건으로 설정(약 2배 상회하는 수준인 0.64% 증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1</td> <td>'22</td> <td>'23</td> <td>'24</td> <td>'25</td> </tr> <tr> <td>42,632</td> <td>42,983</td> <td>41,381</td> <td>42,122</td> <td>43,222</td> </tr> </table> ※진술조력인의 경우 정식 의사소통 중개 보조만을,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경우 단순 상담이나 정보제공이 아닌 실제 법률대리인 건수만을 실적으로 집계하여 관리 ※해당 지표에 만족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피해자에게 만족도 평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높기 때문임.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범죄피해자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표 반영 가능성에 대해 장기 검토 중	'21	'22	'23	'24	'25	42,632	42,983	41,381	42,122	43,222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지원대상 범죄에 대한 법률조력 지원건수 산출	피해자 국선변호사 통계(대검찰청) 및 진술조력인 통계(법무부) '27. 1월 말 실적 산출 예정
'21	'22	'23	'24	'25													
42,632	42,983	41,381	42,122	43,222													

(1) 주요 내용**□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사업 추진**

-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축 등 신규 수용 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률 감소와 교정 행정의 법치주의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수용자 인권을 강화

□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이해도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전 소속기관 인스타그램 개설, 언론인 교도관 체험 등 새로운 홍보방식 도입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및 객관적 보도환경 조성

□ 교정 접견 서비스 활성화

- 수형자의 가족 등 사회관계 회복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 활성화
-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스마트접견 확대 실시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실효적 개별처우를 통한 고위험군 재범 방지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관련기관 공유 근거 마련 등 재범방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재범 감소 및 사회 안전에 기여
- 재범고위험군 등 수형자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부 가석방 활성화
 - 취업 연계를 통한 취업조건부, 정신질환·마약류 사범 등에 대한 치료조건부, 주거부정자에 대한 보호조건부 가석방 활성화

□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사회 내 인력난을 겪는 빈 일자리 업종 및 AI·스마트 등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 신설 통하여 사회 정착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 정신질환 수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학령기 소년수형자의 학습권 보장 및 검정고시 응시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귀휴, 사회봉사,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적 처우를 통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 의료인력 확보 노력, 체계적인 건강검진 실시, 의료장비 현대화, 원격 의료 활성화를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인플루엔자 등 백신 접종 및 외부전문업체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예방 활동 및 감염병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범죄유형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범죄유형별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 사용 이력, 사전·사후 검사결과 등 통합 관리
- 정신질환자, 소년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체계 강화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부서, 교정시설 운영
- 마약류사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 첨단장비 확충을 통한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원천 차단 및 과학적 재활
- 모든 수용자 대상 중독예방 교육 강화
-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에 의한 치료재활 상담 강화
- 마약류사범 출소 후 치료재활 지속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일일평균 교정시설 수용률(%)	113.3	122.1	125.8	117	-과밀수용, 교정시설 확충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최근 3년 평균 추세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연간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정원×100	자체통계 자료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79.5	79.2	79.6	80.0	-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방식, 수용생활 도움여부, 출소 후 도움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설문조사하여 전체 응답자 수 중 만족 이상 응답한 수를 나누어 백분율로 산정 - 최근 3년간 평균이 79.4%로, 평균보다 높은 80.0%로 목표 설정	-(‘만족’ 이상 응답자 수/총 응답자수) ×100	참여자 만족도 설문 조사 자료 및 분석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교정시설 신축·이전 등 조성 사업 관련 주민 반대 및 사업비 부족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 님비현상으로 교정시설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어려움 봉착
 - ⇒ 예비 후보지 단계부터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편의시설(체육관, 주차장 등) 제공 및 지역주민 채용 등 인센티브 부여
 - ⇒ 간담회 개최 및 교정시설 참관 등을 통한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
- 최초 사업비 산정 시점과 실제 공사 발주 시점 간의 시차(설계 5년+공사 5년)로 인해 재정확보 애로 발생
 - ⇒ 사업비 편성 단계부터 최신 시장단가 및 물가 상승분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업무협의 지속

□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교정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국민과의 거리감 상존
 - ⇒ 언론인 등의 교정시설 참관, 전 교정기관 SNS 플랫폼 구축,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 회의) 활성화 등 국민 밀착형 홍보 추진
-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하여 작성된 언론기사 등 잘못된 언론보도
 -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 정정 요청, 설명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등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사후 조치 강화

□ 교정 접견 서비스 활성화

- 사회적 약자 중심 장소변경접견 확대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필요
 - ⇒ 노약자, 장애인 등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심의 우선적 허가 및 동반 접견인원 확대 등 적극 노력으로 장소변경접견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대한변호사협회 등 접견 예약 등 업무상 어려움 지속 호소
 - ⇒ 변호인 스마트접견 확대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홍보 등 적극적 소통 추진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강력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에 따른 국민적 불안과 우려 증대
 - ⇒ 교정재범예측지표 등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관련 정보를 경찰관서와 공유하여 실질적 재범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 과밀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에 대한 국민 불안 증가
 - ⇒ 가석방 심사제도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포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국내·외 경기침체로 취업협력업체의 채용 축소 및 경영난 등으로 출소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 발생
 - ⇒ 수형자의 취업장벽 해소와 안정적 취업처 제공을 위해 빈 일자리 업종, AI·스마트 업종 등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 신설 및 고용노동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정신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

□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한정된 예산 및 시설 등으로 다양한 수형자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 ⇒ 내부 전문인력 양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수형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 '26. 4월 민간대학 협력, 집중인성교육 담당자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 강화 예정
 - ※ '26. 하반기 교정교육전문강사 자격인정 시험 예정

□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 수용인원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관리 및 처우 환경 개선 필요
- ⇒ 과밀수용,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혈관계 등 만성질환자 관리 기준 강화

□ 재범방지를 위한 수형자 심리치료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증가와 스토킹·아동학대·동물학대 등 이수명령 대상자 확대에 따라 심리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
- ⇒ 범죄유형별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정신질환자 워크북 개발·운영 등 심리치료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지속 확대·개발
-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심리치료 수요에 비해, 심리치료 정책을 운영할 소속기관의 조직과 인력 부족
- ⇒ 심리치료과 신설을 위한 직제 요구 및 전문인력 양성·확충,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지속 추진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체계 강화

- 마약류사범의 특성과 반복적 훈련이 가능한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입 필요
- ⇒ 마약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 ※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한 마약류 단서 노출 치료(Cue Exposure Therapy)
- 여성 마약류사범 특성 반영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 여성의 약물 사용 동기, 문화적 성 역할 등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 맞춤형 중독재활 프로그램 개발 예정

- 외국인 마약류사범 증가에 따라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
 - ⇒ 외국인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 출소 예정 마약류사범에게 지역사회 재활기관 연계강화 필요
 - ⇒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출소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 연계 및 전담교정시설 출소 이후 '함께한걸음센터' 등 연계 확대
-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 과정 내 중독재활 관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 부재
 - ⇒ '26년 중독심리사 양성과정부터는 마약류물질 및 물질중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실습과정을 개선할 예정
 - ⇒ 국제중독재활전문자격 과정 도입을 위한 국제단체와의 접촉 및 협의 진행
- 마약류사범의 물질사용으로 인한 뇌손상의 정도를 평가하여 수준별 또는 맞춤형 개입을 위한 평가도구 및 훈련도구 도입 필요
 - ※ 현재 URICA(회복단계), 단약동기효능감 등의 자기보고식 측정치만 활용 중
 - ⇒ '26년에 융복합뇌파계(뇌파측정 및 뉴로피드백훈련)를 도입하여 중독재활 수용동 마약류사범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하여 기능손상 정도에 따라 맞춤형 훈련 실시

(4) 기타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교정본부 홈페이지(<http://corrections.go.kr>)
- 교정본부 TV(교정본부 유튜브)
- 교정본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orea correctional service](https://www.instagram.com/korea_correctional_service))
- 교정본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jcor>)
- 교정본부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wUAXed)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사업 추진(Ⅱ-2-①)

□ 추진배경(목적)

-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대법원은 국가 배상판결을 함에 따라 신규 수용공간 확충 필요성 대두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16. 12월) : 과밀 수용 행위는 인간을 존엄성을 침해
 - '25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 125.8%
- 과밀 수용 해소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넘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통한 재범률 감소와 교정 행정의 법치주의를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축 등 교정시설 조성 사업추진
 -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축 등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과밀·노후화 해소를 통한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30년)
 - ※ 신축(6개 기관) : 태백·남원·화성여자(교), 경기북부·대전·광주(구)
 - ※ 이전·현대화(7개 기관) : 원주·창원·안양·전주·대전·부산(교), 부산(구)
 - 교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국회·지자체와 업무협의를 지속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
 -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축 사업과 병행해 민간투자사업방식(BTL)을 도입하여 교정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고, 공모제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유치 희망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정시설 과밀·노후화를 해소 및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소속기관 실무자 워크숍 등 직무교육 시행	1~3월	
	○ 신축·이전 부지 및 수용동 증·개축 기관 등 현장 점검	1~3월	
2/4분기	○ 신축·이전 부지 및 수용동 증·개축 기관 등 현장 점검	4~6월	
	○ 교정시설 신축 이전 및 수용동 증축 공사 중간 실적 점검	4~6월	
3/4분기	○ 신축·이전 부지 및 수용동 증·개축 기관 등 현장 점검	7~9월	
4/4분기	○ 신축·이전 부지 및 수용동 증·개축 기관 등 현장 점검	10~12월	
	○ 교정시설 신축 이전 공사 및 수용동 증축 공사 완료	10~12월	
연중	○ 신·증축 관련 기관 협의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및 수용동 증축 등 조성 사업 관련 관계 부처 업무협의,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및 교정시설 참관 등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업무협의	신·증축 등 관련 기관과의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연중
현장방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신축·이전 부지 현장답사 등	연중
설명회 개최	교정시설 조성 정책 추진에 대한 대 국민의식 제고	연중

□ 기대효과

-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축 등 교정시설 조성 사업 추진으로 신규 수용공간 확대 및 시설 현대화로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수용관리 및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실시한다(II-2-일반재정)				
① 교도소 운영(1531)	일반회계	85,596 (154,353)	91,557 (159,401)	
▪ 교정시설 장비운영 및 현대화(302)		85,596	91,5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신규 수용 공간 확충 실적 (인원)			384	400	주요 국정현안인 교정시설 과밀·노후화 해소와 관련하여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목표로 설정 - '30년까지 과밀해소를 위한 계획에 따른 '26년도 자체 목표치를 기준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	수용정원 순증인원 (금년도 수용정원 - 전년도 수용정원)	자체통계 자료																										
교정시설 조성사업 관련 갈등 해소 노력 실적 (점수)	200	288	348	474	교정시설 조성 사업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유관 기관 협업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갈등 해소 노력 실적 - 과거 3년간 실적은 '23년→'24년 44% 상승, '24→'25년 20.8% 상승(3년 평균 추세치 32.4%), 평균실적 32.4%* 1.1=35.6%으로 '26년 실적은 상향기준 목표인 474점(36.2%, 상향)을 목표치로 설정	협업 관련 점수 합산 - 기관별 갈등 민원 해소(60점)×건수 <table border="1"> <tr><th>내 용</th><th>점수</th></tr> <tr><td>사업중지</td><td>0</td></tr> <tr><td>합의체 구성</td><td>15</td></tr> <tr><td>합의안 도출</td><td>30</td></tr> <tr><td>합의서 체결</td><td>45</td></tr> <tr><td>사업 정상화</td><td>60</td></tr> </table> - 관계기관 협의 (5점)×건수 <table border="1"> <tr><th>내용</th><th>점수</th></tr> <tr><td>합의요청</td><td>1</td></tr> <tr><td>합의실시</td><td>3</td></tr> <tr><td>합의결정 도출</td><td>5</td></tr> </table> - 민원 관련 협의 현장 방문(10점)×건수 <table border="1"> <tr><th>내 용</th><th>점수</th></tr> <tr><td>현장방문 실시</td><td>5</td></tr> <tr><td>현장문제 파악완료</td><td>10</td></tr> </table>	내 용	점수	사업중지	0	합의체 구성	15	합의안 도출	30	합의서 체결	45	사업 정상화	60	내용	점수	합의요청	1	합의실시	3	합의결정 도출	5	내 용	점수	현장방문 실시	5	현장문제 파악완료	10	공문 및 결과 보고 자료 등
내 용	점수																																
사업중지	0																																
합의체 구성	15																																
합의안 도출	30																																
합의서 체결	45																																
사업 정상화	60																																
내용	점수																																
합의요청	1																																
합의실시	3																																
합의결정 도출	5																																
내 용	점수																																
현장방문 실시	5																																
현장문제 파악완료	10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 구회 의원 방문설명 (10점)×건수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방문일정 협의</td> <td>3</td> </tr> <tr> <td>방문설명</td> <td>7</td> </tr> <tr> <td>협조사항 완료</td> <td>10</td> </tr> </tbody> </table> - 수용기관 현장 점검(5점)×건수 <table border="1"> <thead> <tr> <th>내 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점검 실시</td> <td>3</td> </tr> <tr> <td>점검결과 보고</td> <td>5</td> </tr> </tbody> </table> - 설명회 및 간담회 (15점)×건수 <table border="1"> <thead> <tr> <th>내 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개회계획 수립</td> <td>3</td> </tr> <tr> <td>설명회, 간담회 개최</td> <td>7</td> </tr> <tr> <td>결과보고</td> <td>10</td> </tr> <tr> <td>후속조치</td> <td>15</td> </tr> <tr> <td>사업 정상화</td> <td>60</td> </tr> </tbody> </table>	내용	점수	방문일정 협의	3	방문설명	7	협조사항 완료	10	내 용	점수	현장점검 실시	3	점검결과 보고	5	내 용	점수	개회계획 수립	3	설명회, 간담회 개최	7	결과보고	10	후속조치	15	사업 정상화	60	
내용	점수																																
방문일정 협의	3																																
방문설명	7																																
협조사항 완료	10																																
내 용	점수																																
현장점검 실시	3																																
점검결과 보고	5																																
내 용	점수																																
개회계획 수립	3																																
설명회, 간담회 개최	7																																
결과보고	10																																
후속조치	15																																
사업 정상화	60																																

2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Ⅱ-2-②)

□ 추진배경(목적)

- 교정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방안 마련 필요
-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지속 발굴 필요

※ ('26. 1. 3. 대통령 지시사항) 국정운영 주체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 / ('26. 1. 19. 국무총리 훈시사항) 청년층의 정책 이해 제고를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교정시설 현장 진단(교도관 체험)('26. 1월)
 - ※ 대언론홍보를 통한 교정 정책 이해도 향상 및 공정한 보도환경 조성
- 전 교정기관 인스타그램 SNS 플랫폼 구축 및 운영('26. 2월)
 - ※ 55개 전 교정기관 인스타그램 개설·운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와 트렌드에 맞는 적극적 홍보 개시
-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교정시설 현장 진단(수용자 체험)('26. 4월)
 - ※ 수용자 체험·참관 등 통해 인권 의식 고양 및 과밀수용 해소 등 관련 정책 필요성 홍보
- 교정본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정지·카드뉴스 등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26. 5월)
-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26. 6월)
 - *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들을 포상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KBS,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추진
- 교도관 사기진작 및 교정 조직 역량결집을 위한 제55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 개최('26. 7월)
- 교정본부의 조직, 기능, 주요정책을 담은 교정행정 홍보 브로셔(영문·국문) 제작 및 배포('26. 9월)

- '제81주년 교정의 날' 기념 '대국민 공모전(주제 미정)'을 통해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26. 9월)
- '제81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26. 10월)
 - * 1945. 10. 28.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지속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를 격려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
-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병역과 인권이 조화된 대체복무제 운영
 - * 학계·법조계·병역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반기 1회 개최
-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 학계·법조계·종교·방송·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반기 1회 이상 개최
- 교정정책 전파, 교정기관 관련 지역 현안 논의 등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유도
 - * 교정기관 관할(54개 기관) 지역사회 각계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
- 주요 추진정책 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해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 교정본부 교화방송센터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교정정책, 교도관 업무 등에 대한 홍보영상으로 제작, AI·일러스트 등을 활용한 쇼츠 영상을 SNS 등 홍보플랫폼에 게시
-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교정공무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관련 영화·다큐멘터리·유튜브 채널 제작 적극 지원
- 주요정책 시행, 사회적 이슈 발생 등 언론홍보 필요 시 보도·설명자료를 적시 배포하여 교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교정시설 현장 진단(교도관 체험)	1월	
	○ 전 교정기관 '인스타그램 SNS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월	
2/4분기	○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교정시설 현장 진단(수용자 체험)	4월	
	○ 교정본부 SNS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5월	
	○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6월	
	○ 상반기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6월	
3/4분기	○ 제55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7월	
	○ 교정행정 홍보 브로셔 제작	9월	
	○ '제81주년 교정의 날' 기념 대국민 공모전 진행	9월	
4/4분기	○ '제81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10월	
	○ 하반기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2월	
연중	○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연중	반기 1회 이상
	○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연중	상시
	○ 소셜네트워크(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유튜브 운영	연중	상시
	○ 홍보영상 제작	연중	상시
	○ 교정홍보 관련 드라마·다큐멘터리·예능 등 제작지원 협조	연중	상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교정본부 '민원톡' 방문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교정본부 카카오톡채널에서 운영 중인 '민원톡' 방문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방문자 필요 정보 분석 및 서비스 범위 확대
-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 개최를 통한 민간전문가들의 정책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워크숍	홍보 업무역량 강화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위한 전국 기관 언론·홍보 담당자 워크숍 개최	4월
설문조사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민원톡' 방문자 만족도 설문조사 및 의견반영 등을 통해 방문자들이 보다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	9월
법무부 및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교정 현안 자문	반기 1회 이상

□ 기대효과

- 만족도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등 피드백을 통해 민원인 편의성 개선 및 교정행정 신뢰도 제고
- 교정현안에 대한 법률, 인권, 종교, 방송,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통하는 교정행정 구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정책홍보 노력도 (점)	(1,373)	(1,693)	(1,550)	신규 1,636	<p>정책홍보 활성화에서 '정책홍보 노력도'로 지표 제목을 변경함.</p> <p>기존에 다소 추상적이던 '홍보행사 참석'을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대외협력이 필요하고 홍보 효과가 큰 언론사 기획취재 및 예능 방송 등을 산식에 넣어 정책홍보 노력을 반영함</p> <p>과거 3년 간 실적 및 추세인 5% 상승률에 10%를 추가상향한 5.5%를 목표로 설정함</p>	<p>- 보도·설명자료 배포(건당 1점)</p> <p>- 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현황(건당 5점)</p> <p>-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홍보 등 행사(건당 5점)</p> <p>- 기획 취재 및 보도(건당 10점)</p> <p>- 드라마, 다큐, 예능 등 기획(건당 10점)</p>	<p>해당 자료, 결과 보고, 결과 책자 등</p>																																
SNS 활성화 실적 (점)	(45,216)	(44,211)	(44,349)	신규 44,595	<p>지표의 측정이 과잉계상 되지 않도록 대중적으로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SNS 채널 2개에 대해 구독자 수, 좋아요 건수, 댓글 건수를 측정하여 SNS의 활성화 지수를 객관적으로 측정</p> <p>SNS 이용자 수, 댓글 등 소통지수의 증가 한계 및 최근 3년간 실적이 하향인 점을 볼 때(-0.95%) 성과 지표의 적극적인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SNS를 통한 홍보 및 소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근 3년 실적추세치 평균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함</p> <p>※ 유튜브 활성화 지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년</th> <th>구독자수</th> <th>좋아요</th> <th>댓글</th> </tr> </thead> <tbody> <tr> <td>23</td> <td>16,084</td> <td>5,793</td> <td>798</td> </tr> <tr> <td>24</td> <td>17,501</td> <td>2,374</td> <td>378</td> </tr> <tr> <td>25</td> <td>18,134</td> <td>1,382</td> <td>242</td> </tr> </tbody> </table> <p>※ 인스타그램 활성화 지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년</th> <th>구독자수</th> <th>좋아요</th> <th>댓글</th> </tr> </thead> <tbody> <tr> <td>23</td> <td>-</td> <td>-</td> <td>-</td> </tr> <tr> <td>24</td> <td>-</td> <td>-</td> <td>-</td> </tr> <tr> <td>25</td> <td>1,691</td> <td>2,500</td> <td>575</td> </tr> </tbody> </table> <p>* '25년 개설로 '23년, '24년 동일계수로 산정</p>	년	구독자수	좋아요	댓글	23	16,084	5,793	798	24	17,501	2,374	378	25	18,134	1,382	242	년	구독자수	좋아요	댓글	23	-	-	-	24	-	-	-	25	1,691	2,500	575	<p>- 유튜브 구독자 수*2</p> <p>- 유튜브 댓글 건수*1</p> <p>- 유튜브 '좋아요' 건수*1</p> <p>-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2</p> <p>- 인스타그램 댓글 건수*1</p> <p>- 인스타그램 '좋아요' 건수*1</p>	<p>SNS 홍보채널 구독자 자료 등</p>
년	구독자수	좋아요	댓글																																				
23	16,084	5,793	798																																				
24	17,501	2,374	378																																				
25	18,134	1,382	242																																				
년	구독자수	좋아요	댓글																																				
23	-	-	-																																				
24	-	-	-																																				
25	1,691	2,500	575																																				

③ 교정 접견 서비스 활성화(Ⅱ-2-③)

□ 추진배경(목적)

- 교통 중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특성에 따라 교통약자, 경제생활 등의 이유로 방문하기 힘든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용인원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변호인 접견 대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효율적인 접견 방안 마련

-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12개 교정기관 선정 및 25개 호실 증설
- 법무부, 교정본부 SNS 등을 통한 스마트접견(변호인 포함) 안내홍보물 게시
- 스마트접견을 처음 등록 및 실시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간편한 절차 안내
- 변호인 스마트접견 확대를 위해 각 지방청 등 운영상 문제점 의견수렴 및 요청 사항 반영
- 변호인 스마트접견 관련 안내문 제작 및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 스마트접견을 통한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방어권 보장에 기여
- 스마트접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접견 참여자의 음성을 AI로 실시간 분석·대조하여, 참여자 외 제3자가 접견에 참여할 경우, 즉시 제지할 수 있는 성문 인증 시스템 도입

○ 사회적 약자 중심 장소변경접견 활성화 방안 마련

- 노약자·장애인·어린이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우선적으로 접견 기회 제공
- 가족관계회복 등 장소변경접견의 본 취지 회복 및 '특별접견'이라 불리는 장소변경접견에 대한 교정기관의 신뢰도 제고
- 장소변경접견과 관련하여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할 시 이메일·모사접수 등 접수 방안 마련
- 장소변경접견 관련 사회적 약자 중심 운영방안 확대 지시

○ 교정 접견 서비스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

- 변호인 스마트접견 성문 인증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한 관련 업무 담당자 논의
- 변호인 스마트접견 서비스 확대실시를 위한 지방청별 담당자 회의
- 교정기관 접견 관련 운영 실태 조사와 담당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및 의견 교류
-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 관련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 ※ 각 지방교정청별로 2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직원이 느끼는 운영상 문제점 및 보완점 파악
-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접견 개선사항 도출 및 운영계획 수립에 참고

○ 장소변경접견 및 스마트접견 관련 운영실태 파악과 현장점검

-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관련 시범운영 기관 현장 방문
- 장소변경접견 관련 사회적 약자 중심 운영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운영실태 현장점검
 - ※ 각 지방교정청별로 2개 교정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점검
- 통합접견시스템 및 어플 등을 통한 스마트접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현장점검
 - ※ 각 지방교정청별로 2개 교정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점검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변호인 스마트접견 단계적 확대 기관 선정	2월	
	○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2차) 계획(안)		
	○ 법무부 인스타를 통한 변호인 스마트접견 홍보	2월	
	○ 법무부, 교정본부 SNS 등을 통한 변호인 스마트접견 홍보		
	○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2차) 확대 언론보도		
	○ 변호인접견 예약방식 등 개선 시달	2월	
	○ 수용자 장소변경접견 적극 활용 방안 시달	2월	
	○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2차) 기관 현장 방문(서울구 등)	3월	
2/4분기	○ 변호인 스마트접견 안내문 제작 및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등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4월	
	○ 변호인 스마트접견 성문 인증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 담당자 회의	4월	
	○ 변호인 스마트접견 성문 인증 시스템 운영 계획(안)	5월	
	○ 소속기관별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 운영 호실 등 현황 조사	6월	
3/4분기	○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 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 각 지방교정청별 2개 교정기관 대상 실시	9월	
	○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상 문제점 등 의견 조회 ※ 각 지방교정청별 교정기관 대상 실시 하고, 추후 확대실시 시 반영	9월	
	○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 관련 제도개선 요청 사항 반영	10월	
4/4분기	○ 통합접견시스템 및 어플 등을 통한 스마트접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현장점검 ※ 각 지방교정청별 2개 교정기관 대상 실시	11월	
	○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11~12월	
	○ 변호인 스마트접견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변호인 스마트접견 성문 인증 시스템 서비스 개발 관련 업무담당자 회의
 - 변호인 스마트접견 관련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 알서포트, 파워보이스, 서울구치소 변호인 스마트접견 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들과 서비스 개발 운영 방안 등 논의
-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2차) 기관 현장방문(서울구치소 등)
-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에 따른 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스마트접견 관련 담당 간담회를 통해 스마트접견 안내에 대한 자료 배포 및 민원인에 대한 적극 대응 등 간담회 개최
- 장소변경접견 관련 담당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중심으로 허가 사유 완화에 대하여 효과성 및 개선 방안 의견수렴
- 통합접견시스템 및 어플 등을 통한 스마트 접견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발굴 현장점검
- 장소변경접견 관련 사회적 약자 중심 운영 및 지시 사항 이행 여부 등 운영 실태 현장점검
 - ※ 각 지방교정청별로 2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 변호인 스마트접견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변호인 스마트접견 성문 인증 시스템 개발 관련 업무 담당자 회의	2월
현장방문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관련 시범운영 기관 현장방문	3월
의견조회	변호인 스마트접견 성문 인증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 방법 등 업무 담당자 의견조회	4월
간담회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 관련 담당 근무자의 고충 및 개선 요구 사항 등 간담회 개최	9월
현장방문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상 문제점 등 감담회 개최	9월
현장방문	장소변경접견 관련 사회적 약자 중심 운영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운영실태 현장점검	10월
현장방문	통합접견시스템 및 어플 등을 통한 스마트접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현장점검	11월
설문조사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11~12월
설문조사	변호인 스마트접견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11~12월

□ 기대효과

-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통한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방어권 보장에 기여
-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한 장소변경접견 기회 및 실시 확대
- 가족관계 회복 등을 포함한 장소변경접견 본 취지 회복 및 기존의 사회 저명 인사들의 특혜라고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교정기관의 신뢰도 제고
- 스마트접견을 통하여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정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민원인들의 접견 기회 확대 및 가족관계 회복 기여
- 스마트 및 장소변경접견에 따른 교정 민원 서비스 효율성, 효과성, 접근성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수용관리 및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실시한다(II-2-일반재정)				
②	재소자수용및교화(1532)	일반회계	11,457 (301,805)	13,260 (301,805)
	▪ 교정교화(301)		11,457	13,2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장소변경접견 이용건수(건)	신규	113	149	15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이후인 '24년, '25년도 평균 실적은 131건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민원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최근 2년 실적 평균의 17% 상향하여 설정	당해연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장소변경접견 이용건 수	기관별 장소변경접견 결과 보고 등 자체 통계 활용
스마트접견 횟수(건)	596,833	712,358	793,017	805,846	-'23,~'25년도 평균실적은 700,736건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평균 실적에 15% 상향하여 설정 ※ 3개년 추세치가 급등한 것은 지속적으로 과밀수용이 심화됨에 따른 것으로, 현재 부처차원에서 꾸준히 과밀수용 대책 수립 및 해소방안을 도입하고 있어, 이후 급상승세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당해연도 스마트접견 이용건수	법무부 통계 활용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Ⅱ-2-④)

□ 추진배경(목적)

-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은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증대시켜왔으며, 최근에도 성폭력사범의 출소 후 1년 이내 살인 사건* 발생

* 창원시 소재 모텔 흥기 난동으로 중학생 사망 사건 발생('25. 12. 3.)

- 이에 따라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 이행률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 재범 예방을 도모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관련 정보 공유체계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한 고위험군 수형자 재범예측지표 활용 범위 확대
 - 교정재범예측지표 등 고위험군 수형자 재범위험성 관련 정보의 경찰관서 공유로 실질적 재범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 집중개별처우계획 이행률 제고 및 개별처우계획 실효성 강화
 - 형확정 수형자가 이입되는 교정기관에 대한 개별처우계획 재수립 의무화 등 개별처우계획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 신규 직업적성검사 도구 도입을 통한 개별처우계획 실효성 강화
 - 한국고용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직업선호도검사(S형) 외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적성검사 도구 추가 도입
- 신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고도화 추진
 - 신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분류센터 업무매뉴얼」 등 개정
- '재범위험성 평가 사례회의' 개최로 정밀분류심사 실무자 전문성 제고
 - 사례회의를 통해 신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MMPI-II 등 다양한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등 전문가 슈퍼비전 제공

○ 조건부 가석방 활성화 및 심층면접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 범죄유형별 재범요인 등 수형자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출소 후 취업 연계를 위한 취업조건부, 정신질환·마약류사범 등에 대한 치료조건부, 주거 부정자에 대한 보호조건부 가석방 활성화 방안 등 추진
- 범죄예방정책국·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조건부 가석방 제도개선 협업을 위한 '3자 협의회' 분기별 개최
- 조건부 가석방 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보라미 방송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

※ 조건부 가석방 실시 현황 (단위: 명)

총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436	49	53	86	99	83	136

- 마약류·스토킹, 불특정 다수 서민 대상의 민생 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 보이스포싱 등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기준 강화
-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심층면접 제도 지속 추진으로 수형자의 범인성 개선 정도와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석방 심사

※ 심층면접 실시현황 : '21년 252명, '22년 476명, '23년 518명, '24년 541명, '25년 573명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분류심사 업무개선 사항 담당자 의견조회	2월	
	○ 재범고위험군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경찰청 업무협의	3월	
	○ 분류심사 업무 담당자 교육	3월	
2/4분기	○ 개별처우계획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자 의견조회	4월	
	○ 가석방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4월	
	○ 분류심사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 지능검사 현대화를 위한 실무자 의견조회	7월	
	○ '분류센터 업무매뉴얼' 개정안 의견조회	8월	
	○ 신규 직업 적성검사 도구 도입을 위한 한국고용정보원 업무협의	9월	
	○ 가석방 업무 담당자 교육	9월	
4/4분기	○ 분류심사·가석방 홍보 리플렛 배포	10월	
	○ 분류센터 재범 위험성 평가 사례회의	11월	
	○ '분류센터 업무매뉴얼' 개정 및 시행	12월	
연중	○ 조건부 가석방 제도 개선을 위한 3자 협의회	분기별	
	○ 가석방 심층면접 계획 수립 및 실시	매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분류심사 실무자 워크숍 및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개별처우계획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가석방 실무자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조건부 가석방 활성화 방안, 심층면접 제도 등 가석방 관련 정책 개선방안 논의
- 언론보도 등에 대해 신속한 해명자료 배포, 언론취재요청에 적극 대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가석방 정책 지속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교육	분류심사 업무 담당자 교육	3월
워크숍	가석방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4월
워크숍	분류심사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6월
교육	가석방 업무 담당자 교육	9월
회의	재범위험성 평가 실무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회의	11월

□ 기대효과

- 개별처우계획의 내실화, 가석방 심사의 전문화·체계화 등 과학적·체계적 수형자 교정교화 시스템 정착
- 유관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 및 실무자 역량 향상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 재범고위험군의 재범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수용관리 및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실시한다(II-2-일반재정)				
② 재소자수용및교화(1532)		일반회계	11,457 (301,805)	13,260 (301,805)
▪ 교정교화(301)			11,457	13,2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범률 (공통) (하향지표,%)			신규	33%	<p>교정행정의 핵심 목표인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률 감소'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교정정책의 효과성을 가늠하고 향후 정책결정에 활용 가능한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범률'을 신규지표로 설정함</p> <p>*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Correctional-Recidivism Prediction Index) 4·5등급 판정을 받은 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수용 위험등급: 5등급 -REPI-1: 재수용 위험이 거의 없으며, 사회적응능력 충분 -REPI-2: 재수용 위험이 없는 편으로, 사회적 처우를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배양 가능 -REPI-3: 재수용 위험성이 있으며, 각종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 필요 </div>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4 또는 5 등급 판정을 받고 3년 전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범한 인원 비율	법무샘 통계 등 자체 통계자료 활용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다면적 평가 시행 실적 (건)			신규	2,134	<p>-REPI-4: 재수용 위험성이 높으며, 시설 내 생활적응 및 관련 치료프로그램 필요</p> <p>-REPI-5: 재수용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전문적인 치료나 문제행동 프로그램 참여 요구</p> <p>목표치 산출은 '26년도부터 대폭 확대된 가석방 정책시행에 따라 재범고위험군의 출소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의 평균 재복역률(31.1%) 대비 6.1%를 완화하여 33%로 설정함</p> <p>'25년 재범위험군 대상 다면적 평가 도구(KIMAS) 도입 이후 현재는 재범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 구축의 초기 단계로 KIMAS 결과를 반영한 집중개별처우계획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충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선 정량적인 성과지표인 KIMAS 시행 실적을 신규지표로 설정함</p> <p>목표치 산출은 분류센터 업무량 증가와 교정본부의 과밀 수용 해소 정책에 따른 수용인원 감소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고위험군 집중관리 관련 유사지표인 '23~'25년의 3년치 평균 재범고위험군 개별처우계획 평균 수립 실적(2,033건)에 5%(101건)를 가중하여 2,134건으로 적극적으로 설정</p>	'26년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다면적 평가 시행 실적(건)	교정정보시스템 등 자체 통계자료 활용
조건부 가석방 허가 실적 (명)			신규	146	<p>심층면접관 인력충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심층면접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향상이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하고, 마약류, 정신질환, 강력사범 등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부 가석방 확대를 통해 범죄성향을 개선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이고자 신규지표로 설정함</p> <p>목표치 산출은 신규 성과지표로서 조건부 가석방 허가인원의 증가율 변동이 심한 점(24년 -16%, 25년 64%)을 고려하여, 최근 실적(136명)에 '23~'25년의 3년치 평균 조건부 가석방 허가인원(101명)의 10%(10명)를 가중하여 146명으로 적극적으로 설정</p>	'26년 조건부 가석방 허가 인원(명)	교정정보시스템 등 자체 통계자료 활용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Ⅱ-2-⑤)

□ 추진배경(목적)

- 출소자 생계형 재범이 최근 사회의 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출소 전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력 자립 도모

※ ('25년 교정통계)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 21.2%, 생계형 범 죄인 절도죄는 49.2%

- 빈 일자리, AI·스마트 직종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직업훈련생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 내실 있는 수형자 직업훈련의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도작업 중심의 희망센터 발굴 및 운영

-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유사한 작업 중심의 희망센터 운영

- 중소기업 발굴 협력체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입주기업 모집 및 교도작업 참여를 홍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여 교도작업 민간 참여 강화

- 취약계층 수형자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다양화

- 정신질환자·노인·여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 수형자 대상 훈련 과정 신설 및 다양화

※ 의정부(교) 정신질환 수형자(동료지원인)과정, 원주(교) 버섯종균, 화훼 고령자 우선 선정

-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력 양성

- 빈 일자리 AI·스마트 등 산업 변화에 따른 취업 유망직종 훈련 신설 및 직업훈련 과정 발굴을 통하여 출소 후 수용자 취업역량 강화

※ 빈 일자리 : 간병인 과정(화성직훈교 남, 천안개방교 여)

※ AI·스마트 : 지능형 홈 관리자 과정(화성직훈교 여), 스마트팜(대구교)

○ '26년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 직업훈련 개선사항 및 개설 희망직종 등 만족도 조사 결과를 '27년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법무부 주최, 지방교정청 주관 교정작품전시회 개최를 통해 각 지역에 균형 있는 대국민 교정홍보 효과 제고
- 수형자의 기능향상, 정서함양 및 창작능력 계발의 기회제공으로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교정'을 알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관심과 이해증진

○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전창업교육, 소자본창업교육 등의 실시로 출소 후 안정적 사회 정착 도모
- 출소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강화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실적: '23년 4,286명 → '24년 4,538명 → '25년 4,677명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26년 상반기 직업훈련 실시	1월	
	○ '26년 교도작업 주요업무 추진 계획 알림	1월	
	○ '26년 교도작업·직업훈련 지도점검 계획 알림	2월	
	○ 사천희망센터 개관식 계획 알림	3월	
2/4분기	○ 전국 직업훈련과장 워크숍 개최	4월	
	○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4월	
	○ 권역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시행	6월	
3/4분기	○ '26년 하반기 직업훈련 실시	7월	
	○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8월	
	○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심사	9월	
4/4분기	○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10월	
	○ '26년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11월	
연중	○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연중	
	○ 출소예정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전국 직업훈련과장 워크숍 개최
 - 각 기관 주요업무와 현안과제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소통 강화 및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교정작품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담당자 간담회 실시로 주관·시행기관 선정에 대한 소속기관 의견 청취 및 각 기관의 출품작품 제작 과정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 방안 논의
- 직업훈련 수형자 대상 만족도 조사
 - '27년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워크숍	전국 직업훈련과장 워크숍 개최	4월
간담회	제55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6월
설문조사	직업훈련 수형자 대상 만족도 조사	11월

□ 기대효과

-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유리한 종목의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향상 과정을 통해 고급 숙련 기술인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취업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출발 도모
- 교도작업을 통해 건전한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실무 중심 기술을 습득하여 산업현장 적응력을 배양하여 출소 후 취업을 통한 사회 정착과 재범의 악순환 차단
- 취업 연계 인프라 확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 연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 사회 정착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수용관리 및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실시한다(Ⅱ-2-일반재정)				
③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1535)	교도작업 특별회계	70,401 (70,401)	77,723 (77,72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직업훈련 수형자 만족도 (점수)	80.1	82.2	84.3	86.0	-만족도 측정방식은 전체 직업훈련 수형자 중 순수 만족 이상 답변한 인원을 측정 하여 직업훈련의 궁극적인 효과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측정방식으로 직업훈련의 다양화, 현실을 반영한 직업훈련 직종 발굴 등의 노력으로 인해 매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 -매년 직업훈련의 만족도가 상승 추세임을 반영하여 작년 목표치인 84% 보다 2% 상향되고 최근 5년치('21 ~ '25년) 실적의 평균보다 6% 상승한 86%로 설정	(만족이상 답변 인원 / 총 응답자수) x 100	자체통계 자료 활용
직업훈련 수형자 자격증 취득률(%)	57.5	59.6	58.6 신규	59.6	-직업훈련 수형자 중 자격증 취득 인원은 성공적인 훈련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측정 방식으로 '26년 신규 성과지표로 반영하여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하여 매년 일정 취득률 향상을 목표 로함 -매년 자격증 취득률이 근소한 수치로 상승 추세이고, 신규 지표임을 반영 하여 작년 취득률보다 1% 상향되고 최근 5년치('21 ~ '25년) 자격증 취득 률 평균보다 3.4% 상승한 59.6%로 설정	(자격증 취득 수 / 직업훈련 수형자 인원) x 100	자체통계 자료 활용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Ⅱ-2-⑥)

□ 추진배경(목적)

- 소년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 내 기초 학과교육 체계 강화 및 실질적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귀휴, 사회봉사 등 사회적 처우를 다양화하고 개별 가족 위주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수형자의 실질적인 사회복귀 도모

※ '25년부터 성과관리 지표에 사회봉사(인원) 및 가족사랑캠프(횟수) 실적 포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년수형자의 학력 회복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추진
 - 교육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학습 상담,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구축
 - 학습환경 개선, 교재 지원, 외부 강사 활용 등을 통해 교육 접근성 강화
 - 교육 참여 및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성취 경험을 축적하고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책임감 형성을 지원
- 성공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사회적 처우 확대
 - 사회적 처우 계획 인원 확대를 통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 귀휴('25년 1,536명 → '26년 1,537명), 가족만남의 집 ('25년 1,599명 → '26년 1,680명), 가족만남의 시간('25년 2,670명 → '26년 2,800명), 가족사랑캠프('25년 105회 → '26년 158회), 사회봉사('25년 2,696명 → '26년 2,800명)
 - 1박2일 가족사랑캠프 실시 기관은 +10점 가점 획득
-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처우의 질적 발전 도모
 -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 발굴 및 실시
 - 가족사랑캠프 등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 가족 관계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 도모
 - 수용자 자녀 지원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외연 확장을 위하여 민간 단체와 협업 강화

- 교정위원(민간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 도모
 - 교정위원의 교정행정과 수용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실시
 - 다양한 연령 및 분야의 교정위원을 위촉하여 교정정책의 발전 도모
 - 심리적 안정 및 재사회화를 위한 도서관 운영환경 개선
 -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신간·우량 도서 보급
 -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확대
 - 수용자 자녀지원 업무 강화
 - 수용자 자녀 긴급구호물품 지원금액 및 횟수 상향
 - 계절별 맞춤 지원 및 신학기 학습지원 시범실시
 - 수용자 자녀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한 현황조사 확대실시
 -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의 법적 근거 마련
 - 교화 목적 방송 콘텐츠 개발 및 교정정책 홍보 강화
 -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지식 함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 역사, 공연, 클래식 음악 및 건강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콘텐츠 내실화
 - 대국민 교정정책 홍보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으로 교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도모
 - 교화방송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질적 개선 및 교화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 수용자 교화방송 만족도 조사 연 2회(5월, 11월) 실시 예정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수용자자녀 물품 지원 강화	1월	
	○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계획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	1~2월	
	○ 상반기 검정고시 대비 집중 학과교육 운영 및 학습지원	3월	
2/4분기	○ 검정고시 합격자 격려 및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응시 현황 점검	4~5월	
	○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실시	4~6월	
	○ 전국 교정시설 도서관 비치도서 구입		
	○ 수용자 자녀 현황조사		
	○ 수용자 교화방송 만족도 조사	5월	
	○ 교화방송자문단 회의	6월	
	○ 하반기 검정고시 대비 학과교육 운영 및 맞춤형 학습지도 실시	6월	
3/4분기	○ 하반기 검정고시 대비 학과교육 운영 및 맞춤형 학습지도 실시	7월	
	○ 검정고시 합격자 격려 및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응시 현황 점검	8~9월	
4/4분기	○ 기관별 학과교육 운영 실적 및 현황 점검	10~11월	
	○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실시	10~12월	
	○ 수용자 교화방송 만족도 조사	11월	
	○ 차년도 학과교육 운영 개선사항 도출	12월	
	○ 교화방송자문단 회의	12월	
연중	○ 사회적처우(귀휴,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사회봉사) 시행	연중	
	○ 수용자자녀 지원 간담회 개최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교육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년수형자 학과 교육 강화
 - 만델라 소년학교 및 김천소년(교) 교육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검정고시반 운영 애로사항 및 개선 사항 파악
 - 교육 참여 및 검정고시 응시 소년수형자 대상으로 학습환경, 교육과정, 학습지원 등에 대한 의견 수렴하여 교육 운영에 반영
- 다양한 수용자 자녀 지원 창구 개발을 위한 외부 단체와의 협업
- 수용자 자녀 지원 업무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수용자 자녀 지원 관련 「형집행법」 개정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논의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학과교육 운영 결과 분석 및 교육 운영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담당자 회의(대면 혹은 비대면)	5월, 9월
간담회	교육운영 결과 공유 및 차년도 학과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담당자 의견 수렴	11월
간담회	수용자자녀 지원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연중

□ 기대효과

- 소년수형자의 기초학력 회복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 강화
- 학과 교육 참여 확대 및 검정고시 응시 활성화를 통해 자기효능감 향상과 재범 예방에 기여
- 소년수형자 학과 교육 강화 관련 실질적인 성과지표 마련
- 다양한 사회적 처우를 통해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 기여
- 수용자 자녀 보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수용 생활 도모 및 수형자 자녀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유도
- 다양한 방송콘텐츠 개발로 수용자의 교정·교화 효과 향상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수용관리 및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실시한다(II-2-일반재정)				
②	재소자수용및교화(1532)	일반회계	11,457 (301,805)	13,260 (301,805)
	▪ 교정교화(301)		11,457	13,2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응시 인원(명)	101	109	97 신규	109	-최근 3년간 검정고시 교육 참여 인원 및 교육 확대 추세를 고려, 참여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교육참여 기회 확대 및 학습지원 강화 정책 반영하여 3년 평균의 약 10% 수준 적극 상향 -소년수형자의 비중이 약0.4%(166명/전체기결43,029명)로 매우 작은 규모인 점, 향후 소년범죄 예방 정책 강화 효과 반영 : 목표치는 최근 3개년 평균 응시 인 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소년수형 자 인원 증감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 이 산출함 목표 응시 인원=A×(1+0.1-B) A(기준값): 최근 3개년('23년~'25년) 평균 검정고시 응시 인원 10%(적극 상향률):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한 적극적 행정 목표치 B(수용 변동률): 최근 3개년 대비 당 해 연도 전체 소년수형자 수의 감소 비율 A: (101+109+97)/3=102 B: 156- (160+165+156)/3 /156=0.025 109=102(1.1-0.025) 전체소년수형자 인원: '23년 160명, '24년 165명, '25년 156명	목표치는 최근 3개년 평균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소년수형자 인원 증감을 반영	만델라 소년학교, 김천소년교도소 자체 통계 자료 활용(연간 실적)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사회적처우 실적(점)	8,043.5	11,669	15,588	16,3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초, 소속기관에 사회적 처우 계획 인원을 시달, 그에 따른 목표 달성 점수를 목표치로 설정 - 가족사랑캠프 실시 기간 확대를 위해 1박 2일 이상 실시 기관에 회당 +10점 가점 부여 - 농촌일손 돕기, 수해복구, 설해 복구 시 지역 농협과 연계해 사회봉사를 실시한 기관에 회당 +3점 가점 부여 - 귀휴 기간 확대를 위해 귀휴 실시 기간이 7~9일 시 +1점, 10~14일 시 +1.5점, 15일 이상 시 +2점의 가점 부여 - 귀휴 실시 독려를 위해 '26년 귀휴 계획 인원 대비 실적이 60% 미만인 기관의 경우, 획득한 귀휴 관련 BSC 점수 중 1/2 감점 - '26년도 목표치는 '25년도 실적의 5% 증가한 16,368점으로 적극적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식 = 사회적처우 * (실시 인원 또는 실시 횟수) - 귀휴(명) * 3점 - 가족만남의 집(명) * 2점 - 가족만남의 시간(명) * 1점 - 가족사랑캠프(횟수) * 10점 - 사회봉사(명) * 1.5점 ※ 가족사랑캠프는 실시횟수, 그 외 모두 실시 인원으로 점수 부여 • 가점 가족사랑캠프 1박2일 실시에 따른 가점 부여 - 1박2일 + 10점(회당) 농촌일손 돕기, 수해복구, 설해 복구 시 지역농협과 연계해 사회봉사를 실시한 경우, 가점 부여 - 1회 + 3점 귀휴 기간에 따른 가점 부여 - 7일~9일 + 1점 - 10일~14일 + 1.5점 - 15일 이상 + 2점 ※ '26년 귀휴 계획 인원 대비 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획득한 귀휴 관련 BSC 점수 중 1/2 감점 ※ 27. 1월 초 실적 산출예정 	자체 통계 자료 활용(연간 실적)

7]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Ⅱ-2-⑦)

□ 추진배경(목적)

-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의료처우 강화 필요
- 물적·인적 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도모
- 방역체계 구축과 백신 접종, 방역소독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적절한 의료처우 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인력 확보 노력
 - 민간전문가 파견 확대를 통한 정신과 전문의 확보
 - 적극적인 의무관 채용 노력, 간호사·방사선사 증원
- 원격의료시스템 운영 활성화
 - 원격의료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노후장비 교체·유지 보수
 - 원격의료센터 전문인력 충원 및 진료과목 확대
-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수용자 의료환경 개선
 -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치과파노라마촬영기, 전해질분석기 등 최신 진단장비 도입을 통한 수용자 건강권 증진
- 예방 의료활동 강화
 - 외부 기관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악화 예방
 - 계절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저질환자·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코로나19 백신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폐렴구균 백신접종
 - 외부 방역전문업체를 통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연6회)
 -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법무부 교정본부-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합동훈련 정례화(연1회)
※ ('25년 최초 실시) 법무부 56명, 질병청 64명
- 혈액투석실 간호사 직무역량 강화
 - 혈액투석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연1회, 집합)
 - 혈액투석실 간호사 직무교육 수강(반기1회, 개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교정기관 외부전문업체 방역소독 실시	3월	
2/4분기	○ 전문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워크숍	4월	
	○ 의료장비 현대화	3~6월	
	○ 국가지급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회의	5월	
	○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양성 교육	5월	
	○ 혈액투석 공통품목 선정 회의	6월	
	○ 상반기 하트세이버 선정 및 포상	6월	
3/4분기	○ 자비구매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회의	9월	
	○ 혈액투석실 간호사 직무교육 실시	9월	
	○ 법무부 교정본부-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합동훈련	9월	
4/4분기	○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7~9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10월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실시	10월	
	○ 교정공무원 응급구조사 위탁교육 실시	연중	
	○ 의무관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	연중	
	○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6~12월	
	○ 하반기 하트세이버 선정 및 포상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의료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 민간전문가 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현장방문
 - 소속기관 의견 공유 및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국가지급의약품, 혈액투석, 자비구매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회의
 - 소속기관 의무관 약무관 간호사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가지급의약품, 혈액투석, 자비구매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구분	내용	세부일정
워크숍	소속기관 의견 공유 및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4월
회의	국가지급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회의	5월
회의	혈액투석 공통품목 선정 회의	6월
회의	자비구매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회의	9월
교육	혈액투석 간호사 직무교육 실시	9월

□ 기대효과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건강한 수용생활 보장 및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 자체 전문인력 양성 등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강화·유지하며 수용자에게는 의료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효과
- 교정시설 내 감염병 차단 및 예방 의료활동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향상을 통한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수용관리 및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실시한다(Ⅱ-2-일반재정)			
② 재소자수용및교화(1532)	일반회계	290,348 (301,805)	302,342 (301,805)
▪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300)		290,348	302,3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건강검진 실시율(%)	73.7	72.8	69.4 신규	71.8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인 71.8%를 목표치로 설정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	(당해연도 건강검진 실시인원/ 당해연도 일평균수용인원)x100	건강검진 실시 결과보고 및 교정통계
만성질환자 정기적 측정률(%)	-	-	신규	50.0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목표로 설정 -전년도 신규 실적을 기준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	(고혈압당뇨 환자 중 매일 주기로 혈압 혈당 측정인원/ 당해연도 고혈압 당뇨 환자 총인원)x100	교정정보시스템의 고혈압, 당뇨환자 측정 실적 합산

⑧ 재범 방지를 위한 수용자 맞춤형 심리치료 체계 강화(Ⅱ-2-⑧)

□ 추진배경(목적)

-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등 범죄유형 및 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범죄 성향 개선 및 재범 방지 도모
-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 적응과 내면의 변화를 위한 심리상담 강화
- 교정공무원의 정서 소진 예방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마음나래) 프로그램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범죄유형별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 '25년 성폭력(6종), 스토킹(4종), 아동학대(4종), 가정폭력(4종) 총 18종 콘텐츠 개발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 이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등을 통합 관리·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 체계 마련
-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
 - 프로그램 과정별*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스토킹, 아동학대, 정신질환자, 규율위반자, 이상동기, 소년수형자 등 범죄유형 및 수형자 특성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소년수형자 가족 기반 심리치료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중독 및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정신질환자 자가증상관리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정신질환자의 자기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비대면 워크북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내 심리상담 자원 연계
 - 출소예정자 대상^{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연계 및 홍보

○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도입

- 교정공무원의 정신적 공상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심리상담을 건강검진처럼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음건강검진 운영

○ 심리치료과 신설을 위한 직제 요구 및 전문인력 양성·확충,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지속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시달	1월	
	○ 출소예정자 대상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	2월	
	○ 범죄유형별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	3월	
	○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달	3월	
2/4분기	○ 소년수형자 중독 및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4월	
	○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운영	4월	
3/4분기	○ 소년수형자 가족참여 프로그램 시범운영	7월	
	○ 범죄유형별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8월	
	○ 정신질환자 비대면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9월	
4/4분기	○ 심리상담 및 직원 정신건강 담당자 워크숍 개최	10월	
	○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2월	
	○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	12월	
연중	○ 수용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연중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심리치료 업무 효율화를 위한 소속기관 의견수렴
 - 상담 대상자 선정 기준, 상담 주기 개선 등 심리치료 업무 지침 개정을 위한 소속기관 의견수렴
 - 불필요, 유사·중복 업무, 현장 적용이 곤란 업무 등에 대한 개선 의견수렴
-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담당자 회의 개최
- 개편된 수용자 상담사례회의 참관을 위한 현장 방문
- 심리상담 및 직원 정신건강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심리상담, 직원 정신건강 담당자의 업무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심리치료 효과성 제고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의견수렴	심리치료 업무지침 일부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1월
의견수렴	심리치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불필요한 업무 개선 의견조회	1월
회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담당자 회의 개최	3~8월
현장방문	개편된 수용자 상담사례회의 참관을 위한 현장방문	6월
워크숍	심리상담 및 직원 정신건강 담당자 워크숍 개최	9~10월
현장방문	개편된 수용자 상담사례회의 참관을 위한 현장방문	11월
회의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2월

□ 기대효과

- 현장 의견수렴 및 업무 개선을 통해 심리치료 업무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 담당자 의견을 반영한 범죄유형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범죄 성향 개선 및 재범 방지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현장 방문, 워크숍 등을 통한 담당자 간 협력 강화로 심리치료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수용관리 및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실시한다(II-2-일반재정)				
②	재소자수용및교화(1532)	일반회계	11,457 (301,805)	13,260 (301,805)
	▪ 교정교화(301)		11,457	13,2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문화 실적(점수)	343	416	479	482	-심리치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TF회의, 사례분석 회의, 자문위원단 회의, 직원 전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실시한 실적을 점수화 함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5%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간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 실적인 412점을 기준으로 17% 상향한 목표치 설정	-워크숍 등 각종 회의 및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 (횟수×5점) -프로그램 시범 운영(건수×10점) -전문인력 양성 (당해연도 전문인력 /전년도 전문인력 인원×100)	자체통계 자료
심리치료 프로그램 집행 실적(점수)			142 신규	156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기관*, 프로그램 참여 인원, 프로그램 시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 총 60개 기관에서 집행(54개 교정시설, 5개 지방청 심리치료센터 및 소망교도소) -전년도 신규 실적을 기준으로 10% 증가한 156점으로 적극적 설정	-기관별 월평균 참여인원(인원×5점) -기관별 연평균 실시 횟수(횟수×10점)	자체통계 자료 '27. 1월 초 실적 산출 예정

㉑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체계 강화(Ⅱ-2-㉑)

□ 추진배경(목적)

- 마약류 범죄의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의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마약사범의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및 교정 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재활 개선 방안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부서 운영
 - 일선기관 '마약사범재활과' 전담부서 신설
 - ※ 4개 기관(광주·화성직훈·부산·청주여(교))
- 마약사범 중독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 회복이음과정 기반 전담교정시설로 대전(교) 추가 지정
 - ※ '25년 기준 5개 기관(대구·광주·화성직훈·부산·청주여(교)) 운영
 - 광주, 화성직훈(교) 중독재활수용동 확대 운영
 - ※ '25년 기준 2개 기관(부산·청주여(교)) 운영
- 마약류사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외국인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 여성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개발
 - 미결수, 소년수 등 대상 개인상담 프로그램 운영
- 첨단장비를 통한 과학적 재활
 -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한 마약류 가상현실(VR) 재활프로그램 도입
 - 융복합뇌과계(뇌파검사 및 뉴로피드백)를 4개 기관(광주·화성직훈·부산·청주여(교))에 도입하여 중독재활수용동 마약류사범 대상 뇌파 등 생체신호 측정 및 맞춤형 기능향상을 위한 훈련실시

○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

- 중독심리사 양성 과정을 법무연수원 정규과정으로 등록하고 커리큘럼을 '물질 중독 중심'으로 개편
- 국제중독재활전문자격 도입을 위한 국제유관단체 등과 지속적인 접촉
- 마약사범재활과 근무경력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 중독재활수용동 치료재활 상담 강화

- 중독재활수용동 마약류사범에게 정기적으로 1342 중독재활전화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기 및 앱 설치

○ 마약류사범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 치료보호기관 연계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의
- 함께한걸음센터 사전 사례관리 신청 대상 확대

※ '25년에 회복이음과정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26년 하반기부터 중독재활수용동 인원으로 확대 예정

○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

- 마약류대책협의회 참석 등 부처 간 회의를 통한 협력 강화
-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마약사범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강화

○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첨단장비 확충

- 마약탐지기를 추가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

※ '24년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 4대 최초 도입 후 현재 총 14대 운영 중이며, '26. 11월 추가 10대 도입 예정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부서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1월	
	○ 외국인 마약류사범 대상 중독예방 교육 제공	1월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교정시설 추가 지정	2월	
	○ 법무부·관세청 마약탐지견 상호협력의향서 체결	3월	
2/4분기	○ 중독재활 업무지침 제정	4월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부서 '마약사범재활과' 정식 운영	4월	
	○ 전문인력(중독심리사) 양성과정 운영	4월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수용동 확대 운영	4월~6월	
	○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4~5월	
	○ 뇌파기기 및 뉴로피드백 도입	6월	
3/4분기	○ 대전교도소 회복이음 과정 추가 운영	6월	
	○ 가상현실 중독재활 프로그램 정식 운영	7~9월	
4/4분기	○ 중독재활수용동 내 중독재활전화상담 운영	8~9월	
	○ 교정시설 내 휴대용 마약탐지장비 추가 도입	11월	
	○ 중독재활담당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12월	
연중	○ 여성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개발	12월	
	○ 유관기관과의 회의 참석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연중	사회 연계
	○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기본,집중,심화,회복이음) 운영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문성 강화

- 유관기관과의 회의 참석 및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
-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회의, 워크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일선기관 직원 의견 적극 수렴

구분	내용	세부일정
워크숍	융복합 뇌과계 운영 관련 워크숍	6월
회의	마약류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회의 참석	연중
회의	교정기관 중독재활 업무담당자 회의	연중

□ 기대효과

-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독재활을 통해 마약사범 재범 방지
-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마약사범 출소 후 사회 내 재활 연계로 마약류 안전망 강화
- 마약류사범에 대한 중독재활 전문성 강화로 마약범죄 및 재범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수용관리 및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실시한다(II-2-일반재정)			
② 재소자수용및교화(1532)	일반회계	11,457 (301,805)	13,260 (301,805)
▪ 교정교화(301)		11,457	13,2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 구축(점)	183	576	662	520	-마약사범재활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교정시설 지정,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업무 협력 실적, 중독 재활 전문인력 양성,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에 대한 홍보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최근 실적치의 평균인 473점보다 10% 상향한 520점을 '26년 목표치로 설정	-마약사범재활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교정시설 지정 (기관×10점) -유관기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참석 (횟수×5점) -중독재활 관련 정책 홍보실적 (횟수×1점) -중독관련 전문가 양성 인원 (당해연도 전문인력 / 전년도 전문인력 인원 ×100)	-운영계획, 결과보고 등 공문, 회의·점검 등 실적 자료 -유관기관 및 전문가 회의 참가 계획, 자료, 업무보고 등 -소속기관 리플렛 배포, 언론보도, 정보보고 등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집행실적(점)	-	1,888	2,249	2,469	-마약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체계화 및 집행 강화 -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가중치를 계산하여 실질적인 집행실적 점수 산출 ※ 프로그램 수료 인원 현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기본</th> <th>집중</th> <th>심화</th> <th>이음</th> </tr> </thead> <tbody> <tr> <td>'24년</td> <td>1052</td> <td>140</td> <td>44</td> <td>91</td> </tr> <tr> <td>'25년</td> <td>1246</td> <td>164</td> <td>41</td> <td>138</td> </tr> <tr> <td>'26년 (예상)</td> <td>1370</td> <td>180</td> <td>45</td> <td>151</td> </tr> </tbody> </table> -마약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전체 수료 인원 10% 증가를 반영하여 환산 점수인 2,469점으로 목표치 적극적 설정	구분	기본	집중	심화	이음	'24년	1052	140	44	91	'25년	1246	164	41	138	'26년 (예상)	1370	180	45	151	-마약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집행실적에 대한 환산 점수 ※ 이수인원 X 과정별 점수(기본 1점, 집중 2점, 심화 3점, 회복이음 4점) 합계	-자체 통계 자료 '27. 1월 초 실적 산출예정
구분	기본	집중	심화	이음																							
'24년	1052	140	44	91																							
'25년	1246	164	41	138																							
'26년 (예상)	1370	180	45	151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 전면 개정 및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인하
- 전자공증제도 고도화를 위해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 적극 추진, 적정한 감독권의 행사 통해 공증사무 공공성 및 신뢰성 제고
- 국고손실 환수송무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부패·비리,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발생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송무지도점검 및 송무교육 실시 등을 통한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기능 개발·탑재하여 선진화된 송무체계 구축
- 남북관계 개선 대비 대화·협력에 필요한 법적 자문, 북한법령 및 해외 법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 「상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상사법」 개정 추진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의 안정적 실시, 변호사시험 CBT 방식 적용에 따른 시험관리체계 정비 및 시험제도 개선,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 추진
- 국제규범 성안 및 국내 도입 추진을 통한 민·상사 법제 선진화, 이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글로벌 스탠더드 형성 주도
- 정부부차지자체 등 국제소송 대응 지원, 국제투자분쟁 위험요소 조기식별·예방,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등을 통한 국익 수호 및 국부 유출 방지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여 막대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 필요성 증대 및 국민의 사법 접근성 실효적 보장 필요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따라 인지도 및 성능 제고 필요, 공증인 감독권의 적정한 행사로 공증제도에 대한 신뢰 지속 필요
- 체계적인 민사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하여 국고손실 환수소송 적극 추진 중
-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행정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소송 송무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송 장기화 방지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실현
- 남북관계 복원을 대비한 법적 기반과 남북교류 관련 법적 쟁점 연구 필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확대 및 통일법제 전문인력 양성 도모
-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 상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실시하고, 도산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정질서 확립 도모
- 공정한 법조인 선발 시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다수 배출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등을 활용한 거래유형 발생에 따라 확산 중인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 적기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권익 보호 필요
- 국제투자 확대와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부처와 기업에 대한 전문적 국제법률 지원 및 선제적 분쟁 예방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SDS)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막대한 재정손실로부터 국부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국내 정책의 자율성을 수호

◇ 임무·목표 간 연관성

- 경제산업 구조 재편 가속화에 대응한 선진 법무 인프라 구축 및 국가송무 국제 분쟁 대응 역량 강화로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 뒷받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10	1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공증시스템 이용실적(점)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 송무역량 강화 실적(점)
	① 미래변영 및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민법」 전면 개정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등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점)
	②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 제도개선 실적(점) ■ 공증 신뢰도 제고 실적(점)
	③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손실 환수실적(점)
	④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 대응 실적(점)
	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법령연구 및 통일 대비 법적 쟁점 연구 실적(점) ■ 통일과법률 아카데미 등 교육운영실적(점)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등 실적(점)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적(건)
	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사 법령·제도 개선 실적(점)
	⑦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시험 시행 및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실적(점) ■ 변호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률 2% 이하 달성(점)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국제법무 대응 시스템 강화로 국익을 수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ODA 프로그램 품질평가(점)
	①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점) ■ 법률 ODA(점)
	②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처·기업 등 국제법률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지자체 등 법률지원(점) ■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점)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점)
	③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투자분쟁 대응(점) ■ ISDS 제도개선(점)

(1) 주요 내용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

- 「민법」 및 「상사법」 개정,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등 법무 행정 영역에서 미래지향적 법률 개정,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범 도입 및 교육을 통해 선진화된 법무서비스 제공
- 전자공증,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민에게 친숙하고 선진화된 법무서비스 제공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25	'29			
전자공증시스템 이용실적(집)	264	276	313	246	271	302	전자공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직무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려는 바, 지난 4년간의 실적치의 평균보다 10%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전자공증 완료건수X0.1	전자공증시스템 자체 집계

(1) 주요 내용**□ 미래변영 및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민법」 개정 등 추진**

- (민법개정위원회) 채무불이행·법률행위 등에 관한 「계약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후속 과제로 저당권·유치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법」 규정 및 소멸시효, 등기의 공신력, 취득시효 등 「권리변동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마련 추진
- (가족법특별위원회)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 필요성 검토 및 개정 추진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인하)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인지대 인하 방안을 마련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 추진

□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전자공증제도 고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기능개선 및 직무교육 등 적극 추진하고, 공증실무협의회 등 통해 제도개선 과제 지속적 발굴
-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이의신청 사건 처리 등으로 공증인 감독권을 적정히 행사하여 공증사무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

□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부패·비리, 공공조달 입찰담합 등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국고손실 적극 환수 추진
-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중심으로 하여, 손해 전보뿐 아니라 위법 행위 방지라는 사회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익적 환수 소송을 적극 제기함으로써 형사·행정 집행과 민사적 대응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국가 재정 누수 방지 및 국가 기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

□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 소송수행청에 대한 송무지도점검 및 소송수행자에 대한 송무교육, 행정소송 주요 사례집 발간·배포,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L) 기능개선 등 선진 송무 체계 실현을 위한 송무 역량 강화
- 소송총괄관 회의 등 외부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송무 전문성,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남북 관계 현안 및 정책추진 과제에서 제기되는 제반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 자문 역량 제고
-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남한 내 안정적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확대하고 상담 과정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 재산권이 적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사법」 개정

- 기업지배구조 개선, 신속하고 합리적인 도산 제도 마련 등을 위한 「상사법」 개정 지속 추진
 - 전자주주총회 제도 신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개정 「상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대비 세계은행 도산 원칙에 부합하는 개인 회생에서 파산절차로의 전환 도입 등 「채무자회생법」 개정 지속 추진
 - 다수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선 등을 추진하여 준법 경영 강화 등 기업환경 선진화 도모
 - 대금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자어음 관련 법제 개정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

□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 변호사시험 CBT 방식의 안정적 시행
-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실적(점)			신규	126	○ 과거 3년간 실적 평균(115점)을 고려하여 10% 상향된 목표치 설정 ※ '25년도 실적 : 97점 - 송무지도 점검 : 40회(40점), - 송무교육 : 17회(17점), - 소송총괄관 회의 : 1회(10점), - 세미나 및 업무협약 : 4회(20점), - 주요 사례집 발간 : 1회(10점) ※ '24년도 실적 : 97점 - 송무지도 점검 : 41회(41점), - 송무교육 : 26회(26점), - 소송총괄관 회의 : 0회(0점), - 세미나 및 업무협약 : 4회(20점), - 주요 사례집 발간 : 1회(10점) ※ '23년도 실적 : 150점 - 송무지도 점검 : 78회(78점), - 송무교육 : 42회(42점), - 소송총괄관 회의 : 1회(10점), - 세미나 및 업무협약 : 2회(10점), - 주요 사례집 발간 : 1회(10점)	- 송무지도 점검 : 각 1점 - 송무교육 : 각 1점 - 소송총괄관 회의 : 각 10점 - 세미나 및 업무협약 : 각 5점 - 주요 사례집 발간 : 각 10점	공문서, 보고자료 등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미래변영 및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민법」 개정 등 추진

- 과거 있었던 두 차례의 민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해 ① 소수의 학자만이 개정안을 마련한 점에 대한 다른 학자·실무자들의 비판(제1차 위원회), ② 개정 시안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평가(제2차 위원회)가 있었음
- ⇒ 개정안에 학문적·실무적 합의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원회에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음
- ⇒ 학회와의 교류, 학술대회 공동주최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칠 예정
- ⇒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

- 인지액이 하향될 경우 인지대가 납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검토,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납소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증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증인이 업무 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협의 등을 통하여 일선 공증인과의 공감대 형성할 필요
- ⇒ 공증 관계 법령 정비 과정에서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공증실무협의회 등 개최하여 대한공증인협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공증 실무계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함으로써 잠재적인 갈등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

□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국고손실 환수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 되어 각 단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소송과를 컨트롤타워로 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
- ⇒ 스와팅(swatting, 허위신고) 사건, 부패·비리로 인한 국고 손실 문제가 지속 되고 있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민사 환수시스템 운영
- ⇒ 중·장기적으로는 형사·행정 집행과 민사적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재정 특별송무 시스템(National Finance Litigation) 구축 추진

□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 내용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통일적·체계적으로 소송 대응하기 위한 송무 행정 또한 고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 필요
- ⇒ 소송수행자의 역량 강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소송지휘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송무 행정 실현

□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남북관계의 다변화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일 법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대응전략 마련
- ⇒ 학계·민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남북 간 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심화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 기능 강화
-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등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필요
- ⇒ 통일 법제 정기 간행물 발간,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리플렛·홈페이지·언론 홍보 등 다각적 소통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북한이탈주민의 법치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지원 필요
- ⇒ 입국 초기 보호 단계부터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법률·인권 교육을 체계화하여 실질적 권리 보호 기반 강화
- 정착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법률·생활상 문제 지원
- ⇒ 다채로운 상담 채널을 운영하여 위기 취약 탈북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률지원 확대 추진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사법 개정

- 신설된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혼란 발생 우려 상당
- ⇒ 「상법」 시행령을 통해 전자주주총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과 학계, 실무계와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인하여 시장의 불안감 확산 가능
 - 학계, 실무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로 논의되는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검토
-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의 도산 진행 등으로 채권자의 피해 호소 증가 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도산 수요 확대로 재기 기회 부여 필요
 - 이해관계인의 권리 균형을 고려하여 재기를 위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 추진
- 다수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남소 등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 제도 운영 상황 점검,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남소 우려 방지 방안 검토
- 전자어음 만기 단축,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 상이
 - 만기 단축 기간,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기업,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 수렴하여 법제 개선 추진

□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 변호사업계의 불황 심화, 낮은 합격률로 인한 로스쿨의 고시 학원화 등 복합적 문제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기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 간 상충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전문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 예정

*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과 법학 교수(5명), 판사(2명), 변호사(3명), 법무부·교육부 고위공무원(2명), 검사(1명), 학식·덕망 있는 위원(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미래변영 및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민법」 전면 개정 등 추진(Ⅲ-1-①)

□ 추진배경(목적)

- (민법개정위원회) 「민법」은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행 「민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결과가 발생함
 - 반면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해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 방식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음
- (가족법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변화하는 가족 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증가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인하) 높은 인지대 부담은 사회적 약자에게 재판청구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법개정위원회) 「민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계약법」에 이어 「담보법」, 「권리변동법」 등 「민법」 전반에 걸쳐 개정 작업 추진
- (가족법특별위원회) 혼인 외 출생자(비혼출산) 차별 개선,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부성주의 원칙 유지 여부 등),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 유언 제도 접근성 강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법」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인하)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인지대 인하 방안을 마련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회 회의 진행	1~2월	
	○ 가족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1~3월	
	○ 인지대 인하 관련 1차 연구용역 결과 회신 및 검토	2월	
	○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3월	
	○ 인지대 인하 관련 2차 연구용역 진행	3월	
2/4분기	○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회의 진행	4~6월	
	○ 「계약법」 개정안 관련 국회 전문위원실 설명 진행	4~6월	
	○ 유언제도 개선 방안 관련 연구용역 진행	4~6월	
	○ 인지대 인하 관련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협의	6~7월	
3/4분기	○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회의 진행	7~9월	
	○ 민법개정위원회 「담보법」 개정시안 마련	7~9월	
	○ 가족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7~9월	
	○ 인지대 인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마련	8월	
4/4분기	○ 「담보법」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10~12월	
	○ 가족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10~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련 학회와의 교류, 학술대회 공동주최, 공청회,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
 - 사법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개인, 기업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국회 전문위원실을 방문하여 「계약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 청취 예정(3~4월 중)
 - 「민법」 개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공동주최·참석하여 전문가 등과 소통 예정(6~8월 중)
 - 저당권·유치권 등 「담보법」 규정은 국민 경제활동의 핵심적 기능을 하므로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예정(10~12월 중)
 - 여론조사 등 「가족법」 쟁점 사항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10~12월 중)

구분	내용	세부일정
국회 전문위원실	「계약법」 개정안 설명 및 의견청취	3~4월
학술대회	「민법」 개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진행·참석	6~8월
공청회, 여론조사 등	「담보법」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10~12월
	「가족법」 쟁점사항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10~12월

□ 기대효과

- (민법개정위원회) 사법(私法)의 기본법이자 국민생활의 인프라인 「민법」의 현대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법률분쟁의 합리적·효율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민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인하) 적정한 수준의 인지액 책정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남소의 우려를 최소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화한다(V-1-일반재정)				
③ 민상사법령의 선진화(1033)	일반회계	4,659 (7,254)	4,554 (9,010)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300)		4,659	4,5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민법」 등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점)	245	345	580	630	'24년의 전년 대비 실적 상승률은 약 40%이며, '25년의 전년 대비 실적 상승률은 약 68%임 이는 '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계약법」 개정 논의를 시작으로 「담보법」, 「권리변동법」 개정 논의가 단계적으로 개시된 점이 반영된 수치임. '26년은 '25년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 논의를 지속하되, 「담보법」 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약 10% 상향	○ 활동실적(가중치) -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1회x10점) - 가족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회x10점) -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회 회의 (1회x5점) -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회의 (1회x5점) - 공청회(1건x30점) - 공동 학술대회 (1건x20점) - 입법예고(30점) - 연구용역(30점) - 전문가 의견 수렴 (1건x5점) - 유관기관 협의 (1건x5점) - 여론조사 (1건x10점) - 법제처 심사 (1건x10점) - 국회제출(30점) - 국회 설명 (1건x30점) - 언론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1건x15점)	공문, 회의자료, 학술대회 자료집, 설명자료 등

②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Ⅲ-1-②)

□ 추진배경(목적)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능개선·적극적 홍보 및 제도개선 노력 필요
- 공증의 예방사법적 기능 강화 및 국민의 공증 제도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무를 반영한 제도개선 및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증 제도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전자공증시스템 지속적 기능개선 및 제반 규정 개선 추진
 - 공증실무협의회, 공증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안건 발굴 및 제도 개선 추진
- 공증 신뢰도 유지를 위한 적절한 감독권 행사 및 관계기관 협의
 -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로 공증 사무 신뢰도 유지
 - 재외공관 영사 공증사무 지도점검 및 협의 실시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공증인 신규 임명·인가 및 재인가·재임명	2월	
2/4분기	○ 공증인 징계위원회 개최	5월	
	○ 공증실무협의회 개최(10차)	6월	
3/4분기	○ 공증 제도개선위원회 개최(25차)	9월	
	○ 홍보물 제작 등 공증제도 홍보 실시	9월	
4/4분기	○ 재외공관 공증사무 협의 및 지도점검	12월	
	○ 전자공증 업무 담당 지정공증인 지정	12월	
연중	○ 신규 임명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직무교육 실시		
	○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지정·고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증실무협의회, 공증제도개선위원회 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증인협회·법원·학계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
- 재외공관 영사와 공증 사무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해외 공증사무 실태 파악하고 국내·외 공증 사무의 통일적 처리를 도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공증실무협의회	6월
회의	공증 제도개선위원회	9월
현장방문	재외공관 영사 공증 사무처리 관련 협의	연중

□ 기대효과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기능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공증사무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증 실무를 반영한 공증 제도 개선을 통해 공증 사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도모
- 공증인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공증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방사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법시스템 운영비용 절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화한다(V-1-일반재정)				
④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1038)	일반회계	826 (6,888)	947 (6,823)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300)		826	9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공증 제도개선 실적(점)	3,896	3,693	4,389	4,392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실적 평균치(3,993)의 10%를 상향하여 적극적 목표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 관련 법령 등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안국회통과 (제·개정 조문 1개당 20점) -하위법령 공포(제·개정 조문 1개당 10점) -각종 지침 제·개정(조문 1개당 10점) ○공증제도개선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증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안건 수×10점 -공증실무협의회 회의 건수×10점 -제도개선의견수렴 건수×10점 ○의사록인증제외 대상법인 지정·고시(고시1개 법인당 1점) ○공증제도 관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증법령 유권해석 건수×10점 -공증연구용역 건수×30점 -공증인·보조자, 재외공관 공증담당자 교육 건수×10점 ○전자공증시스템 개선·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헬프데스크 질의 응답 건수 ×0.1점 -전자공증이용건수×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입안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법령안 공증인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자료, 보도자료, 유권해석 자료, 연구용역, 홍보물 전자 공증 시스템 앱스토어 기록 등('27. 1월 초 실적 산출예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공증 신뢰도 제고 실적(점)	340	360	400	403	지속적인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실적 평균치(366)의 10%를 상향하여 적극적 목표치 설정	-모바일앱다운로 드 건수 ×0.05점 -시스템 기능개선 건수×20점 -지정공증인 교육(지정공증인 1명당 20점) -지정공증인 고시(1명당 20점) ○공증 홍보 건수 ×20점 ○공증인 징계· 공증 신뢰 제고 -정기감사 외 특별감사 실시 건수×10점 -공증인징계위원 회심의 건수×20점 -공증인 징계 관련 행정소송 심급별 승소 건수×20점 -공증인 징계 관련 행정심판 기각·각하 건수×20점 ○공증 사무 작성성 유지 -공증사무 이의신청 사건 처리건수 1회×10점 -계도공문 실시건수×10점 -재외공관 공증사무 협의 및 지도 점검 횟수×10점	공증인징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행정소송 판결문, 행 정심판 재결서, 공증사무 이 의신청사건 결정문, 계도 공 문 사본 등('27. 1월 초 실적 산출예정)

③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Ⅲ-1-③)

□ 추진배경(목적)

- 국고손실 환수를 위해 민사적 대응이 필요한 공공 입찰담합 및 부패·비리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경우, 소송 수행청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체계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법무부는 '15. 9. 22. 체계적인 민사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하여 국고손실 환수소송 적극 추진 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고손실 환수 가능 사례발굴 및 주요 소송행위 승인
 - 언론 보도자료, 검찰 정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형사판결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수 가능 사례를 발굴하고, 주요 소송행위에 대한 승인을 통하여 소송 전 과정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
- 실무자 간담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
 - 각급 검찰청, 조달청, 경찰청 및 소송 수행청 등 주요 유관기관과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통해서 효율적·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하고, 소송 활성화에 기여
- 송무역량 강화 및 법률자문 지원
 - 소송수행자 대상 법무연수원 정기 교육, 각급 검찰청 송무지도 점검, 국고손실 환수송무 매뉴얼 개정·배포 등을 통해 송무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자문 지원을 통해 적극적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 및 감독
-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 입찰 참가 기업 등 수범자와 국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선진적인 법무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 제고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각급 검찰청 등에 대한 송무지도점검	3월	
	○ 국고손실 환수송무 관련 교육 실시	3월	
2/4분기	○ 각급 검찰청 등에 대한 송무지도점검	4~6월	
	○ 국고손실 환수송무 관련 교육 실시	5~6월	
3/4분기	○ 각급 검찰청 등에 대한 송무지도점검	9월	
	○ 국고손실 환수송무 관련 교육 실시	9월	
4/4분기	○ 각급 검찰청 등에 대한 송무지도점검	11~12월	
	○ 국고손실 환수송무 관련 교육 실시	10~11월	
연중	○ 소제기 등 주요 소송행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연중	
	○ 소제기 관련 간담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진행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상시 유관기관 협의 및 송무지도점검을 통해 소관 부처 소송수행자 및 실무자로부터 환수가능 사례, 대상 사업의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송 지휘 및 수행에 반영
- 소송수행자 대상 교육과 활발한 홍보를 통해 각 소관 부처에서 발생한 국고손실 및 환수 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유사 사건 재발 예방
- 소송총괄관 회의를 통해 각 행정청 국가소송 수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고손실 환수송무시스템 운영 개선에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상시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소송 진행 관련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소송 수행청과 환수내역 자료 제공 요청 협의를 통해 확정판결 이후 실제 세입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연중
현장방문	각급 검찰청 송무지도 점검 및 법무연수원 소송수행자 교육을 통해 사례공유 및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연중
회의	각 행정청의 소송총괄관이 참석하는 회의 개최를 통해 국고손실 환수소송 사례소개 및 수행청의 애로사항 청취	연중

□ 기대효과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등 민사적 대응의 위법행위 방지 기능(Deterrence role)을 극대화하여, 국가재정 누수 방지 및 국가기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국민의 이익 보호
-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화한다(V-1-일반재정)				
①	국가송무수행(1031)	일반회계	2,961 (135,404)	2,543 (148,080)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300)		2,961	2,5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국고손실 환수실적(점)	3,760	4,882	7,977	6,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제기 및 지급명령신청 건수(건당 20점) ○주요 소송행위 승인 건수 (건당 15점) ○심급별 소송금액 (천만원당 1점, 최종심의 경우 환수 완료 금액) ○국고손실 환수 소송 홍보 (건당 20점) ○사례전파 (건당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관련사건 조회 ·공문, 관련 문서 ·소관부처·검찰청 첨부자료 ·방송, 신문 등 보도자료 (연중지표는 '27. 1월 초 실적 최종 업데이트 예정)

4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Ⅲ-1-④)

□ 추진배경(목적)

- 전국 단위 통일적 대응이 필요한 행정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리적 쟁점 검토 및 체계적인 소송 대응 등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적·효율적 지휘권 행사의 필요성 증대
- 소송수행정 및 소송수행자 송무역량강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실질적 소송지휘를 통한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 소송 수행청 대상 송무지도점검을 통하여 소송업무 수행 실태 및 소송 수행 해태 현황,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소송 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 도모
 - 소송총괄관회의, 간담회 및 업무협의 등을 통해 소송 수행청 및 소송 수행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 송무교육 및 행정소송 주요사례집 발간·배포,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하여 소송수행자의 송무 역량 강화
-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기능 개선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전지지휘 실시에 따른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기능 개발·탑재 및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상반기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계획 수립	2월	
	○ 상반기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계획 수립	3월	
	○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실시	3월	
	○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실시	3월	
2/4분기	○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실시	4~5월	
	○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실시	4~6월	
	○ 각 기관별 송무지도점검 결과서 작성 및 송부	6월	
	○ 상반기 소송수행청 업무협의	6월	
3/4분기	○ 하반기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계획 수립	8월	
	○ 하반기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계획 수립	9월	
4/4분기	○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실시	10~11월	
	○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실시	10~11월	
	○ 각 기관별 송무지도점검 결과서 작성 및 송부	12월	
	○ 소송총괄관 회의	12월	
	○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기능 개선	12월	
	○ 행정소송 주요 사례집 발간·배포	12월	
	○ 하반기 소송수행청 업무협의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소송총괄관회의, 송무지도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소송수행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수렴 후 정책 반영
- 통일적 대응이 필요한 중요사건 및 공동 대응 필요한 사건 관련 업무 협의 개최 및 협의 결과 송무에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업무 협의 포함)	주요 현안 관련 의견 수렴 후 정책 반영	6월, 12월
송무지도점검	소송 업무 수행실태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능 관련 불편 사항 점검하여 효율적 업무 지원	3월 ~12월
소송총괄관회의	소송수행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후 정책 반영	12월

□ 기대효과

- 실질적 소송지휘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신규 기능 개발·개선 등을 통하여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 송무 체계 구축
- 소송수행청 및 소송수행자의 송무역량 강화를 통한 신속한 국민권리 구제 및 법치행정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화한다(V-1-일반재정)				
① 국가송무수행(1031)	일반회계	2,961 (135,404)	2,543 (148,080)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300)		2,961	2,5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행정소송 대응 실적 (점)			100.2	100.5	□ 승소율(70점)+중요사건 금액방어율(30점) : 100점 - 승소율(A) : 70점 $x = \text{당해연도 승소율} - \text{직전 2년 승소율 평균}$ ▷ $x \geq 0$ 인 경우 : $A = 70 + 0.125 \times x^2$ ▷ $x < 0$ 인 경우 : $A = 70 - 0.125 \times x^2$ - 중요사건 금액 방어율 (B) : 30점 $y = \text{당해연도 중요사건 금액 방어율} - \text{직전 2년 중요사건 금액 방어율 평균}$ ▷ $y \geq 0$ 인 경우 : $B = 30 + 0.125 \times y^2$ ▷ $y < 0$ 인 경우 : $B = 30 - 0.125 \times y^2$ ※ 금액 방어율(B) 산출식 $\text{년도 중요 사례 과잉한정 금액방어율} = \frac{\sum(\text{소기} \times \text{승소비율})}{\sum(\text{소기})}$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통계자료, 중요 사건 관리부, 판결문 등
				○ 3년간 행정소송 승소율은 감소추세(59.3% → 61.4% → 59.1%)이고, 중요사건 금액방어율은 전년 대비 감소추세(91.94% → 85.10%)로서, ○ 통상적 등락구간의 가·감점 계수(0.125)보다 0.2점을 상향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기본점수에 가·감점(계수(0.125)×증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산출하므로, 목표치 0.2점 상향은 적극적으로 설정된 것임 ※ 측정산식에 직전 3개년도 승소율 및 방어율 평균을 반영함으로써 최근 실적 추세치 반영		

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Ⅲ-1-⑤)

□ 추진배경(목적)

- 남북 통일 과정에서 단계별 법·제도 통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통일 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업무 역량 강화 필요
-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법제를 선도할 전문 법률인력의 지속적 양성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권 교육 강화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실효적 해결 체계 구축 필요
-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권 보호를 통한 권익 보장 및 제도적 신뢰성 확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통일 대비 법적 기반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별 남북 법·제도 통합 방안 연구 추진
 - 남북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전문적 자문 기능 강화
 - 통일부·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학술회의 참여를 통한 정책 연계 강화
- 통일 법제 전문가 양성 및 국민 공감대 확산
 -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제16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 '통일과 법률' 학술지 분기별 발간,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북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통일정책 교육을 통해 통일 담론 확산
-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 교육 강화
 - 국정원·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국 초기부터 정착 단계까지 단계별 법률·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 권리 보호 도모

- 위기 북한이탈주민 법률안전망 구축 및 현장 의견수렴
 - 전화·온라인·메신저·방문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법률 지원 및 위기 대상자 발굴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또는 소송구조 변호사 연계 및 후속 행정지원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법률 지원 제공
- 북한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
 - 북한 주민 소유의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허가 및 재산관리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

※ 관리 대상 재산 규모: '12년 60억 원 → '26년 460억 원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약	1월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65호 발간	2월	
	○ 법무연수원 통일 교육 실시	3월	
	○ 제146회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3월	
2/4분기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66호 발간	5월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6월	
3/4분기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67호 발간	8월	
	○ 북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9월	
4/4분기	○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10월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68호 발간	11월	
	○ 제16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12월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개최	12월	
	○ 통일법제 유관기관 공동학술회의 개최	12월	
	○ 베니스위원회 연례보고서 발간	12월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실시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북한이탈주민 법률 상담이 필요한 현장 방문 지원	분기별
공모전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10~11월
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유관기관 업무 협의	연중
교육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12월
교육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연중

□ 기대효과

- 남북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 통일을 대비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강화
- 통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에 기여
- 사회통합의 선행 단계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내 정착지원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북한법령 연구 및 통일대비 법적쟁점 연구실적(점)	596	759	845	929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733) 및 전년도 실적 보다 10% 이상 적극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A~I를 합산 - 학술 등 회의 점수(A) ▷ 학술대회(1회 10점) ▷ 연구회의(1회 5점) - 법령 개정 점수(B) ▷ 법률 개정(1건 10점) ▷ 대통령령 개정(1건 5점) ▷ 부령 개정(1건 3점) ※ 발표 등 활동 내용은 회의 등 점수 준용 - 자료집 점수(C)(1건 10점, 200쪽 이상 20점, 등재지 30점)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점수(D) ▷ 위원회 등 연구반 구성(1건 10점) ▷ 위원회 활동(1회 5점) - 연구용역 점수(E)(1건 10점) - 연구 성과 기여도(F) ▷ 유관기관 정책 협력(1건 5점) ▷ 정책 관련 검토 의견 제시(1건 5점) ▷ 정책 반영(1건 10점) ▷ 연구자료 활용(1건 5점) ▷ 연구자료 정책 반영(1건 10점) - 법률 자문 활동 기여도(G) ▷ 정부 발의 법률안 검토(1건 5점) ▷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1건 10점) ▷ 검토 법률안 국회 통과(1건 15점) ▷ 검토 법령 대통령령 개정(1건 10점) ▷ 검토 법령 부령 개정(1건 5점) - 홍보 활동(H)(1회 15점) - 유관 기관 협력(I) (1회 5점) ▷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도 연구 반영 (1건 10점)	·공문 ·보고서 ·자료집 ·주제발표문 ·지정토론문 ·위원회 운영 현황 ·연구용역 계약서 등 ※ 성과지표 개선 컨설팅 의견 반영하여 연구 성과 기여도 및 유관기관 법률 검토 활동 지표 보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통일과법률 아카데미 등 교육운영 실적(점)	408	475	533	586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472) 및 전년도 실적 보다 10% 이상 적극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A~F를 합산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강 인원(A) (단, 수료 인원의 경우 1명 당 2로 계산) -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 만족이상 90%(100점) ▷ 만족이상 80%(90점) ▷ 만족이상 70%(80점) ▷ 만족이상 70%미만(60점) - 홍보 점수(C) (매체별 1건 15점) - 기타 통일법무 교육(D) (1회 10점) - 유관 기관 협력(E) (1회 5점) - 통일법제 전문성, 자료 관리 및 남북관계 상황 분석(F) ▷ 통일법제 전문인력 확보(1건 5점) ▷ 남북법제 등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1건 5점) ▷ 논문 공모전 수상작 학술지 게재 1건 5점 논문 공모전 접수 1건 2점 ▷ 북한전문가 간담회 등(1건 10점)	·공문 ·수강자·수료자 명단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 등 ※ 성과지표 개편 컨설팅 의견 반영하여 전문성 관리 및 남북관계 상황 분석 지표 보강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등 실적(점)	246	288	324	356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286) 및 전년도 실적 보다 10% 이상 적극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A~F를 합산 - 법률교육 점수(A)(1회 7점) -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 만족이상 90%(30점) ▷ 만족이상 80%(25점) ▷ 만족이상 70%(20점) ▷ 만족이상 70% 미만(15점) - 법률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 교재 제작 점수(C) (1건 20점) - 법률교육 피드백 점수(D) (1건 2점) - 홍보 활동(E) ▷ 언론 보도(1건 15점) ▷ 기타 매체 홍보(1건 10점) ▷ 오프라인 홍보(1건 5점) - 유관 기관 협력(F) (1회 5점) ▷ 법률교육 관련 업무협약(1건 5점) ▷ 유관기관 회의(1건 5점)	·공문 ·법률교육 현황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 등 ※ 성과지표 개편 컨설팅 의견 반영하여 홍보 매체별 구체화 및 유관 기관 협력 구체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적(건)	358	447	497	546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434) 및 전년도 실적 보다 10% 이상 적극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A~D를 합산 - 온라인·모바일 등 북한이탈주민 상담 건수(A) - 소송구조 연계 건수(B) - 홍보 활동 건수(C) ▷ 언론 보도, 기타 매체 홍보 ▷ 오프라인 홍보 - 유관 기관 협력 건수(D) ▷ 유관 기관 협력 지원, 간담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현황 통계 등 ※ 성과지표 개편 컨설팅 의견 반영하여 홍보 매체별 구체화 및 유관 기관 협력 구체화

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사법」 개정(Ⅲ-1-⑥)

□ 추진배경(목적)

-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 환원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법제를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신설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 해소 필요
- 개인 및 중소기업의 도산 절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 균형 도모 필요
- 현재 증권관련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 관련, 다수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 확대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한 지급·결제 수단인 전자어음 관련 기업환경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 환원 강화 등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사법」 개정 추진
 -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고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하여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
 -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됨에 따른 기업 현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
 - 1차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1~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대비 세계은행 도산원칙에 부합하는 개인회생·파산 간 절차의 전환을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
 -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 소득자에 대한 간이 회생절차의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24. 9월 국회 제출, 법사위 계류중)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논의 지원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동일 형태의 집단소송 적용 범위 확대 추진
 - '04년 도입되어 사례가 축적된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제도 확대안 마련하고 관련 입법 논의 지원

- 기부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 추진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개선,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규제 적용 배제 등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성안하여 국회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한 지급·결제 수단인 전자어음 관련 법제 개선 추진
 - 전자어음 만기를 단축하고 의무 발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전자어음법」 개정안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관련 법안 마련
 - 연구용역 진행 결과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분야별로 또는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개선안 도출 예정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상법」 개정 관련 국회 법사위 1소위 논의 대응	1월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	2월	
	○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2월	
	○ 「상법」 개정 관련 Q&A 자료 배포	3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확대 법안 국회 제출	3월	
2/4분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확대 법안 관련 국회 논의 대응	4~6월	
	○ 「상법」 시행령 개정안 성안	5월	
	○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관련 법안 마련	6월	
	○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월	
3/4분기	○ 「전자어음법」 개정안 마련	7~9월	
	○ 「채무자회생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 대응	7~9월	
4/4분기	○ 「전자어음법」 개정안 의견조회	10~12월	
	○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 대비 홍보 등 활동	10~12월	
	○ 「공익신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상법」 및 시행령 개정 관련 학계 및 현장 의견수렴 지속 예정
 - 관련 학회 또는 세미나 참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학계 및 실무계 의견수렴
 -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개발현황 점검하는 등 개정 「상법」 안착 및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예정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련,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관련 학회 참석, 연구용역,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각계각층 의견수렴
-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에 관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 예정
 - 관련자 면담, 토론회 또는 세미나 참석,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
- 「전자어음법」 개정 관련 기업·경제계 의견수렴 예정
 - 개정안 관련 경제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예정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참석	2월
회의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	3~6월
의견조회 (또는 회의)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관련 의견수렴	3~6월
현장방문	예탁결제원 방문하여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개발현황 점검	6월
의견조회 (또는 회의)	이사 충실의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	7~9월

□ 기대효과

- 「상법」 개정 및 개정 「상법」의 안착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총회가 내실화되고 주주권이 강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개인회생-파산 간 절차의 전환을 도입함으로써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 대응하고, 간이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부채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확대로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고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익신탁 수탁자 자격요건 명확화, 공익신탁 운용방법 개선 등으로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기대
- 상거래상 주요한 대금지급·결제 수단인 전자어음 관련 법제 개선으로 상품 또는 용역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불법행위의 동기 차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화한다(V-1-일반재정)			
③ 민상사법령의 선진화(1033)	일반회계	2,595 (7,254)	4,456 (9,010)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304)		2,595	4,4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상사 법령·제도 개선 실적(점)	540	615		620	- '24년 신규 도입된 지표로, 지난 2년간 실적 약 13.8% 상승 - 이는 '25년 이례적으로 상법이 연달아 2차례 개정됨에 따라 상당히 높은 실적 달성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 - '24년 목표 400→실적 540(135%), '25년 목표 450→실적 614(136%)으로 2년 평균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은 135.5%인 것으로 확인 - 신규지표로 최근 3년 평균 실적 상승 추세치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적극적 목표 설정을 위하여 전년도 목표치에서 약 37.7% 상향한 620점을 목표치로 설정 (개선의견 반영하여, 입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관한 지표를 삭제하고, 업무 난이도, 개정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조정함)	○ 활동실적×가중치 1) 개정 준비 - 위원회 개최 (1회x20점) - 공청회·토론회 등 행사 개최 (1건x20점) - 전문가 의견 수렴 ▶용역(1건x20점) ▶자문(1건x10점) - 유관기관 협의 (1건x20점) 2) 법률안 입법 - 입안보고 (1건x15점) - 입법예고 (1건x10점) - 국회 제출 (1건x15점) - 국회 설명 (1건x10점)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 입안보고 (1건x15점) - 입법예고 (1건x10점) - 차관회의 (1건x10점) - 국무회의 (1건x10점) 4) 홍보 등 - 언론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 (1건x20점) - 대국민 홍보 (1건x20점)	회의록, 보고서, 보도자료, 자문지급결과내역, 용역계약서 등

㉞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개선(Ⅲ-1-㉞)

□ 추진배경(목적)

- '17. 2월 「사법시험법」 폐지로 법조인 선발 방식이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은 내실 있는 변호사시험 운영 필요

* 단순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 체계로 법조인 배출 방식을 전환하는데 있음

-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선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기반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시행

- 4일간 진행(중간 휴식 1일 포함 시 5일), 「공법」·「형사법」·「민사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 및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사례형) 시험 실시, 출제, 문제지 인쇄, 시험 집행 및 채점 등 전 과정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시험관리 추진
- 변호사에게 필요한 지식·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교수, 실무가 등으로 시험위원을 위촉, 출제 오류 방지를 위해 시험위원 대상 출제 오류 사례 교육 실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분리하여 상호 검증 체계 마련, 시험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운영 및 정답 확정 회의를 통해 최종정답 공개
- 합격자 결정 관련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 수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 인원 확정

- '26년 제17회 법조윤리시험 시행

- 법조인의 직업윤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본적인 소양과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강화

- 변호사, 법관, 검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직무 윤리를 포함하여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변호사 윤리 장전 등 필수 법령·규범에 대한 실질적 평가 실시
- 문제은행 검토 시스템의 충실한 운영, 실력 있는 시험위원 위촉으로 문제의 완성도 제고하고, 응시자가 정규수업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하게 합격이 가능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

○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및 절차 개선 추진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및 산하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운영을 통해 시험 제도개선 추진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및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선발·양성 시스템 및 시험제도, 변호사수요 관련 조사 연구를 지속 실시하여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에 반영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제15회 변호사시험 실시	1월	
	○ 제17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월	
2/4분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4월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4월	
	○ 제17회 법조윤리시험 응시원서 접수	6월	
3/4분기	○ 제17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8월	
	○ 제1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9월	
	○ 제1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9월	
4/4분기	○ 제16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11월	
	○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운영	연내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단체, 법원, 교육부 등 정책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 국민 등 각계 의견을 반영

* TF 구성 : 변협 2명, 법전원 2명, 법원·교육부·법무부 각 1명, 독립적 인사 1명 등 총 8명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하여 합격자 결정 관련 심의 및 사전 의견 조회	3~4월
	■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TF 운영	연중

□ 기대효과

- (공정한 법조인 선발 체계 확립) 변호사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실력 있는 법조인 배출
- (법률 소비자 보호 강화) 직업 윤리 및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배출을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만족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화한다(V-1-일반재정)				
④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1038)	일반회계	5,283 (6,888)	5,109 (6,823)
	■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305)		5,283	5,1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변호사시험 시행 및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 실적(점)	768	796	846	888	과거 3년간 실적 및 추세를 고려, '25년 실적치에서 3년 평균 상승률인 4.96% 반영하여 상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실적합산 - 시험문제은행 구축 (건수×20점) - CBT 시험 대응 · CBT 시스템 점검실적 (건수×10점) · CBT 시험관리 인력 교육 실적 (건수×10점) - 장애인 편의제공 (인원수×10점) - 시험 관련 사고 · 민원 검토·처리 (건수×10점) - 시험 문제 이의제기 신청률 8% 이하 달성 · (점수) = 25점 + (8-신청률) × 1점 ※ 신청률(%) = 이의제기 문항수 / 총 문항수 × 100 -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개정 (건수×50점) - 제도개선 실적 · 변호사시험 CBT 관련 전산화 확대 (건수×35점) · 기타 (건수×30점) - 제도 연구·용역 등(건수×30점) - 법조인 선발· 양성 관련 공청회·회의 등 참석 및 개최 (건수×20점) - 보도자료 등 정책홍보 (건수×15점) 	공문, 보고서, 공고자료 등
변호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률 2% 이하 달성 (점)	120	122	128	132	과거 3년간 실적 및 추세를 고려, '25년 실적치에서 3년 평균 상승률인 3.28% 반영하여 상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점 + (2-인정률)×16점 ※ 복수정답 인정률(%) = 복수정답 인정 문항수 / 총 문항수 × 100 	보고서, 공고자료 등

(1) 주요 내용**□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 국제규범 성안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제협약 가입 및 관련 국내법제 정비 등 성안 결과의 국내 도입과 이행 추진
-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 및 법제정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형성 주도
 -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 투자환경 및 현지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교민 생활 안정에 기여

□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처·기업 등 국제법률지원 체계 구축

- 국제투자분쟁 예방 역량 강화
 - 국제투자분쟁 위험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국제투자분쟁 위험요소 조기식별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산업단지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정부적 국제투자분쟁 예방 역량 강화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소송·중재 대응 고도화
 -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국제소송·중재 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대응전략 수립부터, 법률자문 제공, 증거 수집·제출, 법정 변론까지 사건 대응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로펌'으로서의 임무 수행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동법률상담회 개최, ▲최신 해외규제 동향 분석을 실시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제도개선

- 국제투자분쟁(ISDS)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대응하고,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막대한 국부 유출을 방지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ISDS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 성안 주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법률 ODA 프로그램 품질평가(점)	-	86.7	86.2	86.7	'24년에 코로나19 및 신설 조직 개편 절차로 2년 만에 초청 연수를 개최, 연구용역을 바탕 으로 개발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2년 70점에 비해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25년 에도 이와 비슷하게 달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최근 2년간 최고 실적치 (86.7)를 목표치로 설정	역량강화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평가	인터뷰, 설문조사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 '인공지능(이하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AI 관련 국제
규범의 주도권을 얻기 위한 제·개정 논의 급격히 확산
- ⇒ 적극적인 논의 참여 및 AI 협약 가입 등을 통해 국제규범 선도
 - ※ 유럽평의회(CoE)가 '24. 5월 세계 최초로 성안한 AI 협약 가입 추진
- 법령 정비의 규모 증대 및 역량교육 강화 등 수원국의 요구 증가,
G2G(정부 대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최근 ODA 사업의 환경 변화
- ⇒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ODA 수행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기관과
맞춤형 협력 시스템 구축

□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처·기업 등 국제법률지원 체계 구축

-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지자체의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으로 분쟁 예방체계의 실효성 저하 우려
- ⇒ KOTRA 옴부즈만실과 연계한 외국인고충민원 동향 파악, 외국인투자
사업 인·허가 담당 기관 대상 ISDS 예방교육 실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배포·홍보를 통해, ISDS 예방 역량 강화
- 국제소송·중재 사건 지원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건
관련 자료 확보 등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 관계부처 실무회의 및 전략회의를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사전에 조율
하고, 법무부의 국제소송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권, 피요청
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 보완 노력 필요
- ※ 국제소송·중재 지원에 필요한 권한을 명시한 행정명령 제정 추진 중

- 해외진출기업의 법률지원 수요 증가추세에 비해, 기업이 직면하는 현지 법제도 및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부족함
- ⇒ 대한상공회의소·KOTRA 등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진출기업 대상 법률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기업 지원 네트워크 확대

□ 국제투자분쟁(ISDS) 리스크 선제적 관리 및 凡정부 대응총괄

- (외부환경요인) ISDS 중재가 일단 제기되면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년 이상의 시간과 수십~수백억 원 단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패소 시 대규모 국부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함
- ⇒ 정식 중재가 제기되기 전인 '중재의향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청구인과의 사전협상을 적극 진행하는 등 ISDS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함

※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사건은 총 11건

- (갈등요인) ISDS 사건은 다수 부처의 정책이 복합 연관되어 있어, 개별 대응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입장 정리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 국제투자분쟁과 주도로 '관계부처TF(차관급)' 및 '국제투자분쟁대응단(국장급)' 등 범정부 의결기구를 가동하고 수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입장을 원활하게 조율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지속 수립하여 시행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Ⅲ-2-①)

□ 추진배경(목적)

- 신규 국제규범 성안 참여 및 국내 도입을 통한 민·상사 법제 선진화
 - 신기술을 활용한 거래, 「우주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규범이 형성되고 국제 교류가 증대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검토 및 추진 필요
-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우리 법제정비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격 제고
 -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친숙한 법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 비용 절감 및 해외 진출 법률리스크 감소와 교민 생활 안정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상사 규범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성안 결과의 국내 도입 추진
 - 법무 관련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규범 성안에 기여, 국제협약 가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국내 도입 및 이행법률 제·개정을 통해 국내 법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 '24. 9월부터 T/F를 운영하여 '26. 1월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국내 이행법률 입법안 초안을 성안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 제출 목표
 - 국제규범 연구와 최신 동향 논의를 위해 관련 세미나 참석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직접 개최하고, 예방(禮訪)행사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 구축
 - ※ 국제중재 활성화 및 민·상사 분야에 있어서의 한·일 법무협력 증진을 위하여 일본 국제중재 주간 행사(ADR Week)에서 소규모 세미나 개최 예정('26. 7월 중)
 - 국제규범 도입 및 국제협약 가입 후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제도개선 논의
 - ※ 미국, 영국의 지속적인 법률시장 추가 개방요구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며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성안 후 연내 정부입법 추진 예정

- 국격에 걸맞은 ODA 사업 확대 및 선진적·전략적 ODA 추진
 - 역량교육 규모 증대, 실무자용 가이드라인 작성 등 증가하는 추세인 수원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내실 있는 ODA 사업 수행
 - G2G(정부 대 정부)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ODA 최신 흐름을 반영하여 민간/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마련
 -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등 체감가능한 직접적 수혜 제공
- ※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캄보디아에 투자한 국가로 식품·섬유·건설 등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음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캄보디아 상사법원 설립 지원 계획 협의 등 현지 실사	2월	
	○ 영국 법무부 및 법원 대표단 예방	3월	
2/4분기	○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장 예방	4월	
	○ 유럽평의회 신기술운영위원회 옵저버 가입	6월	
3/4분기	○ 캄보디아 법관 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8월	
	○ 캄보디아 조정인 초청 교육 실시	9월	
4/4분기	○ 캄보디아 고위급 세미나 실시	11월	
	○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안 국회 제출	12월	
연중	○ 국제법무연구 발간(4회)	연중	
	○ 영문저널 발간(3회)	연중	
	○ 국제규범 관련 국제회의 참석	회의 일정 및 정책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수행	신청에 따라	
	○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국민, 정책수요자 대상 적극 의견수렴
 -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 방안 논의
 -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국민 의견수렴
 - 주캄보디아 한인회 대상 ODA 사업 홍보 및 요구사항 청취
 - '국제법무연구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KCI 학술지 평가 대비 등 학술지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

- 개발도상국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전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 관련 분야로 구성된 ODA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차회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	1월
간담회	○ 주캄보디아 한인회 간담회	2월
회의 등	○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안 관련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	4~5월
인터뷰, 설문조사	○ 개발도상국 실무자 등 대상 만족도 조사	10월
회의	○ '국제법무연구 편집위원회' 개최	12월
회의	○ 법무부 ODA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12월

□ 기대효과

- 글로벌 규범 형성에의 적극적 참여로 질서 주도 및 국가경쟁력 강화
 - 기술발전과 규범형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국제동향에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법제와 국제규범의 괴리로 관련 분야의 성장동력 저하
 -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것은 글로벌 통상질서를 주도하는 결과로 이어짐
- 개발도상국 내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글로벌 법치 협력의 이니셔티브 확보
 - 법제정비 지원을 통한 수원국 내 법치주의 확립은 장기적으로 법무협력 분야 외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한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화한다(V-1-일반재정)			
②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1032)	일반회계	884 (8,770)	1,058 (8,944)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301)		734	842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302)		150	2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점)	408	452	506	569	'26년에 제정 추진하던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예상 되고, 국제교류 활동을 측정산식에 추가하여 최근 3년 간의 실적 평균 추세 치인 11.4%보다 10% 이상 상향	<p><국제규범 및 국제협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안 참여(각 3점) - 안건 검토 등 사전회의(x1) - 국제회의 등 참석(x2) - 국제세미나 개최(x3) ○ 국내도입·가입 추진(각 5점) - 국제규범·협약 연구 및 입안 사전준비 등(x1) - 입법안 초안 마련 및 부내협의, 협약 가입 준비 등(x2) - 입법안 완성 및 관계기관 협의·각종 평가·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협약 서명(x3) - 국무회의 등 국회제출, 협약 비준 지원(x4) <p>※ 국제규범 성안 및 도입 관련 활동은 정부 입법 절차와 국제협약 가입 절차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가중치 설정</p> <p><국제교류·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대응(각 5점) ○ 예방 대응(각 10점) ○ 협력 강화 등 결과 (각 10점(가산)) <p><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반환 지원 - 접수 및 지원(각 3점) - 아동반환 절차(각 5점) - 우호적 해결(각 7점) ○ 타 중앙당국, 관계기관 협의 등(각 5점) ○ 제도개선 추진(각 5점) <p><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자문사 승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등(각 5점) ○ 법률시장 개방 관련 대응 및 협의 등(각 10점)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지 등 자료발간(각 10점) ○ 보도자료 등 홍보(각 5점) 	공문, 회의자료 및 보고서, 발간물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법률 ODA(점)	145	155	170	186	투입지표 위주였던 측정산식에 결과지표를 추가하여 최근 3년 간의 실적 평균 추세치인 8.3%보다 10%이상 상향	<p><법률 O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정비 지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협력기관 회의, 간담회 등 참석(각 5점) - 자료발간, 보도자료 등 홍보(각 5점) - ODA 교육 이수(각 10점) - 개도국 법제 관련 연구 및 세미나 개최(각 20점) - 개도국 실무자 등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각 20점) * 직전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시 개선의견 또는 만족불만족 사유 반영 건수(각 5점(가산)) ○ 법제정비 단계(누적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연구, TF 구성 등 초기 준비(10점) - 비교법 연구, 법률안 초안 도출 등 준비(10점) - 공청회 실시, 주요 의견 반영한 법률안 수정본 도출(10점) - 정부 내부 검토 완료, 국회제출 준비 또는 국회 제출(10점) - 법률 제정 완료 및 공포(국회 통과 직전단계 포함)(10점) <p>※ 법제 정비가 장기간 소요되고 개도국 현지 상황의 영향 등으로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제정비 성과를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단계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p>	공문, 회의자료 및 보고서, 발간물 등

②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차기업 등 국제법률지원 체계 구축(Ⅲ-2-②)

□ 추진배경(목적)

○ 범정부 차원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역량 강화 필요성

- 국제투자분쟁은 절차가 개시되면 대응을 위해 수년간 상당한 비용·인력 투입, 패소시 국가신뢰도 하락, 투자정책의 변경, 유사사건의 연쇄 발생 등으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선제적 예방이 중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소송·중재 사건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 사건 수행청의 예산·인력의 제약, 국제소송·중재사건에 필요한 해외증거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법제도 및 글로벌 규제 변화로 인한 법률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현지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제한적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역량 강화

- (ISDS 위험요소 조기식별 체계 구축) KOTRA 옴부즈만실과 연계하여 국제투자분쟁 비화 우려가 있는 외국인 고충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단을 가동하여 집중관리하는 대응체계 구축

- (ISDS 예방 체크리스트 배포)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선 부처·지자체·공기업이 쉽게 ISDS 위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가능한 체크리스트(문진표) 제공

※ '24. 11월 체크리스트 초판 발간 후,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세미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ISDS 위험요소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한 ISDS 예방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예정('26. 3월)

- (맞춤형 예방교육·세미나 실시) 외국인 투자 집중 지역 및 산업을 검토하여, 지자체별·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 대상자 확대하여 실시

※ '26. 1~2 KOTRA 옴부즈만실 접수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외국인고충민원의 선제대응 필요성을 인지하여, 국방부·기후부·국방과학연구소·KOTRA 등 관계부처에 ISDS 위험요소를 설명한 후 대응 전략 실무협의 진행하며 ISDS 비화가능성 차단

※ '25년 외국 투자자 규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유관기관(금융위·복지부·KOTRA 등)을 중심으로 ISDS 예방 세미나를 5회 개최한바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소송·중재 대응 고도화

- (소송수행자 등 직접 참여) 정부부처·지자체 등이 개별 대응에 어려움을 표한 주요 국제소송·중재 사건에 대해 검사·사무관(변호사)이 소송수행자로 직접 참여하여 ▲대응전략 수립, ▲서면·증거 제출, ▲법정 변론 등 '정부의 로펌'으로서의 임무 수행

※ '25. 1월 美 기업 2곳 약 1,000억 원대 개인정보 무단수집 국제소송을 전부승소한바 있고, '26. 3월 현재 방위산업·조세·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소송·중재 사건에 직접 공동소송수행자로 참여하거나, 법률자문·연구용역 등 지원 중

- (전문적 법률자문 지원 강화) 사건 대응과정에 수반되는 방위산업·조세·개인정보·환경·에너지·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 분석과 제도개선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법률지원 제공

※ 불법조업 외국선박 몰수 관련 국제소송 지원과정에서, 국제사법 및 해양법 관련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26. 1월), 불법조업 단속체계 관련 연구용역 의뢰 예정('26. 3월)

- (법적 기반 마련) 국제소송·중재 지원에 필요한 사건 관련 자료 요청 등 정부기관의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어, 관련 행정명령 제정 추진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자문위원과 협업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률쟁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5년부터 서면상담 외 화상상담을 개시하여 실시 확대 중

※ '12년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발족, '23년 국제법무지원과 신설과 함께 중견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하고, 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213명을 자문위원으로 섭외한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으로 확대·개편

※ '25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법률자문 총 485회 제공

- (해외 현지 법률상담회 개최) 현지 로펌 등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현지 법률 리스크 및 국제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현지 법률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파리, 홍콩 등지에서 현지 법률설명회를 총 5회 개최하였고, 일본, 호주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국가를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현지 법률설명회 개최 예정

※ 일본, 호주 현지 법률상담회에 맞춰 현지 법률 길라잡이 책자 발간 준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ISDS 사전예방 위한 관계부처 회의	2월	
	○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3월	
	○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법률 뉴스레터 발간·배포	3월	
	○ 한국 상품 증명표장 관련 관계부처 검토의견 제공	3월	
2/4분기	○ '구글', '메타' 개인정보사건 항소심 기일 진행	4~6월	
	○ 세계은행·대한상의 공동 '해외진출기업 법률세미나' 개최	5월	
	○ ICN 연차총회 참석	5월	
	○ 해외진출기업 해외 법률 세미나 상담회 (오세아니아 또는 유럽)	5~6월	
3/4분기	○ 제2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개최	8월	
	○ UNCITRAL 제3작업반 회의 참석	9월	
4/4분기	○ 제12기 O.K. 아카데미 진행	10~12월	
	○ 해외진출기업 해외 법률 세미나 상담회 (일본, 중동 또는 남미)	10~12월	
	○ OECD 경쟁위원회 참석	12월	
연중	○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상담(서면/화상 포함)	연중	
	○ ISDS 예방 교육 및 세미나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제투자분쟁 위험요소 관련 정부부처 등 의견 수렴

- KOTRA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세청, 방사청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투자사업의 동향, 국제투자분쟁 위험요소 관련 의견 청취

※ '26. 2월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국제투자분쟁 위험성이 확인되어 국방부, 기후부, KOTRA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26. 3월 KOTRA 옴부즈만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고충민원 현황 관련 의견 청취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국제투자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후,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세미나를 진행하여 체크리스트 관련 개선 의견 및 실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견수렴

○ 해외진출기업 대상 맞춤형 법률세미나 등 개최

- 국가별·분야별 등 해외진출기업 대상으로 필요한 상담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회·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관계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차회 설명회 개최 및 향후 법률지원 제공 시 반영

○ 국제법무지원 자문회의 개최

- '국제법무지원 자문회의'를 연례 단위로 개최하여 국제법무지원과가 설정한 주요 정책 과제 이행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 후 차년도 정책과제 추진 시 반영

※ 국제법무지원 자문회의 : 국제법무지원과의 금년 정책 추진 현황 보고 및 차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25. 12월 제2회 자문회의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국제투자분쟁 위험요소 관련 정부부처 간담회(수시)	상시
회의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관련 간담회	상시
세미나	○ 해외진출기업 맞춤형 법률설명회 개최 및 만족도 조사	상시
회의	○ 국제법무지원 자문회의 개최	12월

□ 기대효과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체계 구축
- 국제소송·중재 사건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원 및 업무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건 대응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화한다(V-1-일반재정)			
②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1032)	일반회계	516 (8,770)	510 (8,944)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300)		516	5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정부부처·지자체 등 법률지원(점)	신규	240	280	300	○ 최근 2년 실적이 상승국면임을 고려, 최근 2년 평균 실적 대비 15.3% 상향하여 '26년 목표치 300점 산출	○ 의견서 등 각종 서면 제출건수(각 10점) ○ 재판 등 기일 참석 건수(각 10점) ○ 국제소송 수행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전략 실무회의 개최(각 10점) ○ 국제법무 현안 및 국제소송 분쟁 등 관련 자문 제공 건수(각 10점)	공문, 의견서 등 기타 법률문서, 회의 보고서, 출장신청서 등 기타 증빙용 정량자료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점)	190	290	298	320	○ 최근 3년 실적이 상승국면임을 고려,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23.4% 상향하여 '26년 목표치 320점 산출 *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선 의견에 따라 측정산식 보완 ※ '23. 8월 국제법무지원과 신설 이후 업무가 이관 및 개편('24) 되어 최근 3년 추세치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상향 폭을 확대하여 목표의 적극성을 보완함	○ 국제협정 관련 법률 지원 건수(각 14점) ○ ISDS 예방 교육 개최 (각 12점) ○ 국제회의 관련 회의 참석 및 검토 건수(각 8점) ○ ISDS 예방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모니터링 수행 및 실무회의 개최(각 8점) ○ ISDS 예방 관련 자료 발간 및 개정(각 6점)	예방 교육 개최 보고서, 공문, 예방 자료집 또는 연구용역 결과, 회의 결과보고서, 검토 보고서, 자문내역 등 기타 증빙용 정량자료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점)	370	468	473	503	○ 최근 3년 실적이 상승국면임을 고려,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15% 상향하여 '26년 목표치 503점 산출 ※ '23. 8월 국제법무지원과 신설 이후 업무가 이관 및 개편('24) 되어 최근 3년 추세치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상향 폭을 확대하여 목표의 적극성을 보완함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건수(각 1점) ○ 해외진출기업 법률설명회 개최 건수(각 1점) ○ 해외진출기업 관련 자료 발간(각 1점) ○ 해외진출기업 온라인 법률자문 만족도 조사 (만족도 총 합/응답자 수) - 매우 만족 50점 - 만족 40점 - 보통 30점 - 불만족 20점 - 매우 불만족 10점	해외진출기업 법률 자문내역, 설명회 개최 보고서, 해외 진출기업 관련 자료집 등 기타 증빙용 정량자료

③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제도 개선(Ⅲ-2-③)

□ 추진배경(목적)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효과적·체계적 대응
-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개선에 관한 국제규범 성안 주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효과적·체계적 대응
 -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7건(론스타, 윈들러, 중국투자자, 다야니2차, 엘리엇 메이슨, 부산투자자) 등의 실무 대응을 전담하며, 사건별 증거 수집, 서면 작성, 구술심리 대응 등 절차를 철저히 수행
 - 국제투자분쟁대응단(관계부처 국장급 의결기구, 이하 “대응단”) 및 관계부처TF(관계부처 차관급 의결기구, 이하 “TF”), 실무자 전략회의 개최 등을 통해 주요사항 의결, 사건별 대응 현황 공유,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전략 수립 등 각종 주요 현안을 논의
 - 또한, 쿠팡 투자자 건과 같이 정식 ISDS 중재가 제기되기 전에 중재 의향서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면밀한 사건 검토 예정
 -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림 자료 및 홍보자료 적극 배포 예정
-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개선에 관한 국제규범 성안 주도
 - ISDS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및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정부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ISDS 제도개선 관련 국제규범 성안 작업에 적극 참여
 - 한국의 ISDS 대응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공조를 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정부 협업하여 각국의 ISDS 대응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3차 공식회의 참석	1월	
	○ 중국투자자 ISDS 취소절차 절차기일 참석·대응	2월	
	○ 엘리엇 ISDS 취소소송 환송심 선고(정부 승소) 브리핑	2월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4차 공식회의 대비 한-미 대표단 양자 사전협의	3월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4차 공식회의 참석	3월	
2/4분기	○ 아시아개발은행 주최 '제2회 ADR Policy Dialogue' 한국 ISDS 승소 사례 발표	4월	
	○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대응(서면 공방, 구술심리 등)	4~6월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비공식 화상회의	4~6월	
3/4분기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55차 공식회의 참석	10월	
4/4분기	○ 국제투자분쟁 사건 주요경과 알림·홍보자료 배포	10~12월	
연중	○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	연중	수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대응단 회의를 통해 여러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전략 수립
 - 판정 선고 등 ISDS 대응 과정에서 중요사항 발생 시, TF를 통해 ISDS 대응 방향 의결
 - 이외에도,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 및 처분청과 함께 실무자급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부처 간 이견을 선제적으로 조율하고 현황을 공유하여 대응전략 수립

구 분	내용	세부일정
대응단 회의	ISDS 중재의향서 사건 관련 분쟁대응단 회의	1월
	ISDS 중재의향서 사건 관련 분쟁대응단 회의	2월
	민봉진 ISDS 사건 관련 분쟁대응단 회의	2월
	선들러 ISDS 사건 관련 분쟁대응단 회의	2월
	엘리엇 ISDS 사건 관련 분쟁대응단 회의	2월
	ISDS 사건 관련 분쟁대응단 회의	4~12월

□ 기대효과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통해 범정부적 ISDS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국부 유출 방지
- 국제사회에서 국제투자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국제규범 성안을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화한다(V-1-일반재정)				
②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1032)	일반회계	4,717 (8,770)	4,723 (8,944)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303)		4,717	4,72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국제투자분쟁대응(점)	490	495	525	540	과거 3년간 실적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연평균 상승률 약 3%로 '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약 3%(15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회의(각 20점) ○ 전후의 등기타 회의(각 15점) ○ 심리기일 참석(각 20점) ○ ISDS 주요 서면 제출(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자문위원 자문 의견건수(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교육, 간담회, 세미나 개최(각 10점) ○ 보도자료, 알림 등 홍보(각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문 ·계획보고서 ·검토보고서 ·회의안건자료 ·일일상황 보고 ·보도자료 등
ISDS 제도개선(점)	160	165	175	180	과거 3년 간 실적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연평균 상승률 약 4%로 '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약 4%(5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관련 국제 회의 참석(각 25점) ○ 제도개선 관련 검토의견 및 의견서 제출(각 25점) ○ 제도개선 관련 정부대표단 사전회의 개최, 참석건수(각 10점) ○ 제도개선-동향관련 외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건수(각 20점) ○ 내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 및 참석건수(각 15점) ○ ISDS 제도 관련 출판(발간) 건수(각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문 ·회의 결과보고서 및 정부의견서 ·개정 규정 등

기본방향

◇ 주요내용

- 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출입국자 증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을 통해 산업현장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로 국가경쟁력 확보
- 지역별 경제 상황과 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성장 지원
- 불법체류 외국인 엄정 대응 및 단속 시 인권침해 요소 최소화 방안 마련, 체불임금 신속 해결지원 등을 통한 보호외국인의 권리 보장 강화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출입국·이민 정보화 환경 조성
- 정책현장 소개, 정책브리핑 등 오프라인 활동과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SNS 홍보 등 온라인 활동을 연계하여 정책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 추진
- '2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평가 등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업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체계적 이민정책 설계·추진
- 국가 간 인재 경쟁 심화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국적정책 추진
-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여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환경조성
-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진정한 난민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난민정책 추진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위상 강화와 한류 확산 등 외국인 유입 요인이 확대·다변화 됨에 따라 첨단기술 기반 지능형 출입국심사 도입 등 국경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 저출산 및 고령화, 산업·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이민정책 추진 필요
- 외국인력 유치와 정착을 연계하는 지역이민정책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선 필요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통해 일자리 잠식 등 국민 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보호외국인 처우개선으로 인권 및 외국인 보호제도의 신뢰성 제고
- 급증하는 출입국·이민 관련 민원 수요 대응 및 사회통합 지원,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전자 민원 시스템 고도화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체감도 높은 정보전달을 통해 이민정책의 역할인지도 제고 필요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형 체류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사회통합 강화 필요
-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학술, 신산업·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새로운 국민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국민 공감형 국적정책 수립·추진 필요
-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 및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라 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사회 통합 정책추진 필요
- 글로벌 난민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격에 부합하는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면서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난민제도 운영 필요성 대두
- 국제정세 급변 및 난민 신청 사유 다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이의신청 심의체계 구축

◇ 임무·목표 간 연관성

-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통해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과 이민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11	2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민원만족도(점)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여행하기(K-ETA) 신청 시 정밀심사 실적(건)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입국신고서 이용 만족도(점) ■ 제도개선 실적(점)
② 국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건)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점)
③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이민정책 제도개선 실적(점) ■ 관계부처 협조체계 강화(건)
④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 및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범 유형별 적발 접수(점) ■ 보호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평균보호기간(일)
⑤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이용 만족도(점)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만족도(점) ■ 유관기관 정보연계 실적(건)
⑥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 노력도(점) ■ 정책수요자 소통 향상도(점)
2. 국력에 걸맞은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①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건)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취득자의 국적증서 수여식 만족도 조사(점) ■ 국적취득자 수(명)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실적(점)
④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심사 제도개선 및 역량 강화(점) ■ 난민을 위한 처우지원 활동(점)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제도 운영 충실도(점)

(1) 주요 내용

□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구축

- AI 등 첨단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출입국심사와 이민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출입국정보화 인프라 개선을 통해 증가하는 출입국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 도모,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이민정책을 통해 인력 부족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국가·지역 발전 지원
- 외국인 불법체류는 엄정 대응하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난민심사와 국적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공존하는 사회환경 조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25	'29			
체류민원만족도 (점수)	신규	83.5	87.2	92.7	93	93.5	정성지표(만족도)의 상승 한계를 고려하고 '22년 최초 설정 지표임을 감안하여, '23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1~2% 상향된 값을 목표치로 산출 ※ '22~'26 전략계획 성과지표로 제출 시 '26년 목표치는 85점으로 조기 달성	전자민원 및 방문민원 만족도 설문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 / 참여자 수 ※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만족 5(100), 만족 4(80), 보통 3(60), 불만족 2(40), 매우 불만족 1(20))	체류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1) 주요 내용**□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시범 시행, MICE 참가자 입국 우대심사대 확대 시행, 전자여행허가(K-ETA) 편의성 개선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 제고를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

□ 국가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

- 우수인재 배우자의 취업범위 확대 등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고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제도 개선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노동력 신규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등 지역에 외국인력 도입·유치 지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에 외국인의 취업·정착 기반 조성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강화 및 보호외국인 처우개선

-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유흥·마사지업소 등 국민 안전 위협·일자리 잠식 분야 집중단속, 자진 출국 유도 및 불법 고용 방지 제도 활동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 체불임금 고충 상담 및 특별보호실 환경 개선 등을 통한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강화

□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출입국·이민행정업무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포털 개편
- 외국인 통신서비스 가입 시 신원확인 절차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통신사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시범 운영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지원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동영상(숏폼) 등 수용성이 높은 홍보 자료를 적시에 배포하여 이민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과 참여 유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시 정밀심사 실적(건)	신규	549	649	773	'24~'25년 정밀심사 실적 증가율(약 18.2%)보다 상향(19%) 설정	국가별 동향 파악(불법체류자, 입국거부자), 각종 첩보, K-ETA 분석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동허가(OK)처리된 신청건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실시 후 정밀심사 대상자로 재분류된 자의 수	시스템 추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미래지향적 출입국심사로 편리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작년 출입국자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약 9,832만 명),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유인 출입국심사 방식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에 한계
 -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확대(단기), AI 기반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 등 미래지향적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

□ 국가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

-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정책을 산업·교육정책과 연계하는 등 유관부처와 협업 노력 강화 필요 (자문단 의견)
 - ⇒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 유도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회의, 간담회 개최)하고 유관부처와 협의 체계를 구축
- 정주형 이민 확대 등으로 인해 복지 부담, 내국인 고용 침해, 문화 갈등 등 반이민 정서 확산 우려
 - ⇒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갈등관리형 비자정책 추진

□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 인구 구조 변화 및 생산 인구감소로 농·어촌 등 지역의 일손 부족 및 소멸 위기 심화
 -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기반 비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력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연계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강화 및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요구와 인력난에 따른 단속 반대 등 찬반 입장 상존
 - ⇒ 인력난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 실시, 단속 전 현장 답사, 단속 매뉴얼 개정 등 인권침해 요소 최소화

- 대통령 지시사항('25. 10. 20., 교정본부) 관련 외국인 수형자 조기 송환을 위한 가석방-송환 연계 추진
- ⇒ 가석방 신청 단계부터 여권 소지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여권 미소지자의 여행증 발급과 항공권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여 가석방 외국인을 본국으로 신속히 송환하고 장기 보호에 따른 인권침해 및 사고 예방

□ 온라인 기반 사회통합 교육체계 구축 및 대민 포털 개편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기존의 대면 업무 체계로는 온라인 민원 신청·접수 등 급증하는 비대면 행정 수요 대응에 한계
- 숙련기능인력 도입 등으로 증가된 사회통합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 참여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 비대면 전자민원 서비스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포털 (하이코리아, 사회통합정보망 등) 개편 추진

※ 하이코리아, 사회통합정보망 중심의 대민포털 재설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추진('27년 본사업 진행 예정)

□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 강화

- 허위정보·가짜뉴스로 인한 반(反) 이민정서 등 확산 우려
- ⇒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신속히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허위정보·가짜 뉴스 확산을 막고,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행정 적극 홍보

(4) 기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immigration_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https://facebook.com/immigration.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eaimmigration307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카카오채널(https://pf.kakao.com/_gxbpPT)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IV-1-①)

□ 추진배경(목적)

- AI 기반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확대,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미래지향적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 제고를 통한 방한관광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경과제 AI 기반 국경관리시스템 도입 준비
 - AI 기반 ①입국 외국인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 및 ②자동출입국심사 구축을 위한 사업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확보 추진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확대
 - 자동출입국 이용 국가를 현 18개국*에서 EU 등 주요 국가로 확대
 - *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핀란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 시범 시행
 -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해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 시범 도입
- MICE 참가자 입국우대심사대 이용 확대 시행
 - 300명 이상 국제회의 등 MICE 주요 참가자에게만 허용하던 입국우대 심사대를 동반자(최대 2인)에게도 허용
-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출입국규제 요청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규제요청 자동처리 체계 및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전자여행허가(K-ETA) 고도화(3차) 사업 수행

-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24시간 챗봇 응대 서비스 도입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크루즈 특별심사 대책 시행	1월	
	○ 전국 심사과장 회의 개최	2월	
	○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연장 여부 검토	3월	
2/4분기	○ MICE 입국우대심사대 이용 확대 시행	4월	
	○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5월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확대	6월	
	○ 선박심사 기법 발표회	6월	
3/4분기	○ APEC 기업인이동실무그룹(BMG) 회의 참석	8월	
4/4분기	○ 출입국심사 기법 발표회	11월	
	○ 출입국규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2월	
	○ 전자여행허가(K-ETA) 3차 고도화 사업 완료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출입국심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등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출입국심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등 참석	상시

□ 기대효과

- 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국익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사전 차단하여 공공안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 및 통합 실현을 위해 엄정한 출입국관리와 합리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Ⅲ-1-일반재정)				
②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1232)	일반회계	30,410 (40,259)	41,015 (51,015)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305)		30,410	41,0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 (%)	-	-	신규	11.2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자동심사 이용자 비율 측정 최근 3년 간 입국 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률*의 평균 증가율(46%)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적극 설정 * '23년 3.6%, '24년 5.5%, '25년 7.7%	입국 외국인 중 자동심사 이용자 수 /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을 통하여 추출 * '27. 1월 초 실적 산출 예정
제도개선 실적(점)	550	595	680	760	최근 3년 실적 평균 상승률(약 11%)의 10%를 추가로 상향(12%)하여 목표치 적극 설정	-법령, 지침, 고시 제·개정 사항 (건당 20점) -소속기관 제도개선 건의 채택 등 정책 개선 실적 (건당 20점)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건당 15점) -국민의견 수렴 건수(건당 15점) -국민신문고, 탄원, 청원, 국민제안 채택 실적 (건당 10점) * '25년 저문단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수 가중치 재조정	관련 법령, 지침, 보고서, 정보보고 등 관련 문서

② 국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혁신적인 비자 정책 추진(IV-1-②)

□ 추진배경(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비자·체류정책 추진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AI기술 등을 활용한 외국인 체류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안전 사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침으로 운영 중인 ‘비자·체류정책 제안제’의 근거규정을 훈령 등으로 상향하여 정책 결정의 체계성·전문성 제고
 -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근거 규정을 상향, 법제화하여 비자·체류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운영체계 확립
- 우수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 첨단분야 해외 최우수인재(Top-Tier) 유치 활성화 및 안정적 정주 지원을 위해 배우자의 취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수인재의 국내 취업·정착 기반 강화
- 지역 민생경제 체감형 비자정책 추진
 - 지방출입국관서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분야의 외국인 고용 지원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K-STAR 비자트랙 본격 시행	2월	
	○ '26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운영계획 알림	2월	
	○ 우수인재 배우자 취업 범위 확대	3월	
2/4분기	○ 지역 민생경제 현장간담회 개최	5월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5월	
	○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6월	
	○ 디지털노마드(위케이션) 자격 체류관리 지침 개정	6월	
3/4분기	○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지침 개정	8월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9월	
	○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선	9월	
4/4분기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12월	
	○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12월	
	○ 체류·사증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12월	
연중	○ 비자 허용분야 확대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요자 맞춤형 비자·체류 제도개선 추진
 - 외국인 근로자 제도·정책 전반에 대해 중앙부처, 공공기관·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 지역 민생경제 체감형 비자정책 추진
 - 지역 민생경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외국인 고용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 지속가능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협업) 추진
 -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자문단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민간수요 수렴	반기 1회
간담회	지역 민생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	연 1회
회의	외국인력정책위원 등 이민정책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상시

□ 기대효과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전략적 정착·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보호·촉진을 병행하여 경제 활력 제고
- 산업·경제계의 비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반영하는 체계적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비자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도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해외 우수인재 유치실적 (건)			신규	233	<p>「KSTAR 비자트랙」은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제도로, 비자 발급 실적은 정책의 '효과성'과 우수 인재 유치 성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정량지표임</p> <p>- (성과지표 산식) 최근 3개년간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10% 상향된 목표치에 확대·개편된 대학의 실적을 학교당 약 4명으로 산정하여 목표치 설정</p> $\frac{[(85+130+125)/3] \times 1.1 + (27 \times 4)}{1} = 232.6$ <p>※ '25. 12월 제도 참여 대학을 확대·개편 하였으나, 선정된 대학들의 추천체계 구축, 내부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을 고려, 3개년간 평균 실적의 약 100%(2배)를 상향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p> <p>* 자문위 의견 반영 지표</p>	KSTAR 비자트랙을 통해 거주자격(F2·F2-2)으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한 건수	내부 통계자료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이용자 만족도(점수)	83.2	86	87.1	89.2	<p>최근 3년간 상향된 점수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26년에 89.2점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p>	<p>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참여자 수</p> <p>※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 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불만족 40, 매우 불만족 20)</p>	<p>하이코리아* 회원가입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p> <p>*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국적 등 규정 안내, 온라인 체류민원 신청, 방문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포털</p>

③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IV-1-③)

□ 추진배경(목적)

- 지역의 인력난 해소 지원 필요
 -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유지를 위한 외국인력 확보 필요성 증대
- 외국인력의 지역 정착 연계 추진
 - 지방소멸위기 심화로 외국인력 유치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을 연계하는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운영
 - 법무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개시, 플랫폼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관리
-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 공공 영역의 계절근로 확대 운영
 - 공공형 계절근로 외에도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 확대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점검
 - 광역형 비자 제도가 특정 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 지속 여부 결정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확대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비자 쿼터를 확대 배정하고,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를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 제도 신설 추진

○ 농·어업 숙련비자 제도 마련

- 숙련된 농업인력 확보 어려움에 대응하여, 계절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장기체류 자격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비자 제도 마련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운영 개시	2월	
	○ 계절근로 전문기관 관련 고시 제정	3월	
	○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 추가 선정 및 공공형 배정 확대	3월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확대	3월	
2/4분기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점검 제도 유지 여부 평가	4~6월	
	○ 지역 활력 외국인 특례 제도 마련	6월	
	○ 농·어업 숙련비자 제도 마련	6월	
	○ 상반기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개최	6월	
	○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6월	
3/4분기	○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 발표	7월	
	○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황 점검	8~9월	
4/4분기	○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 성과평가	10~11월	
	○ 하반기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개최	12월	
	○ '26년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완료보고회 개최	12월	
연중	○ 지역기반 이민정책 관련 워크숍·간담회 개최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개최

-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 가능 업종 및 도입 규모 등 결정을 위하여 반기별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개최

○ 지방정부 협조체계 강화 (자문단 개선 의견 수렴)

-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반기별 1회 이상 간담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

- 각종 제도개선 추진 시 지방정부, 관계기관 담당자 워크숍, 교육을 추진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개최	반기 1회
간담회, 회의	○ 지역기반 이민정책 현안 논의를 위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	반기 1회
워크숍, 교육	○ 지역기반 이민정책 개선사항 관련 워크숍, 교육 실시	분기 1회

□ 기대효과

○ 농·어촌 인력난 완화 및 지역정착 기반 강화

-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고 지방정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체류 지원

○ 지역수요 기반 맞춤형 이민정책 추진

- 지역사회의 이민정책 관련 의견과 비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수렴하여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유입 및 지역 정착 추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지역기반 이민정책 제도개선 실적(점)			신규	77	'26. 1. 1.부로 '지역체류지원과' 신설에 따라, '지역체류지원과' 현재 소관 법령 수 및 '25년 제 개정 실적 고려하여 산출 -과 신설 후 첫 해이고, 신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25년 대비 10% 상향하여 설정 ※ 현 소관법령 : 고시1, 내부지침4	-법령 고시 제 개정 건수 (건당 20점) -지침, 매뉴얼 등 제 개정 건수 (건당 15점) ※제 개정 관련 중요도에 따른 가점 부여	법령, 지침, 고시, 보고서 등 관련 문서																						
					<table border="1"> <thead> <tr> <th>제 개정</th> <th>'23년</th> <th>'24년</th> <th>'25년</th> </tr> </thead> <tbody> <tr> <td>고시 등</td> <td>-</td> <td>-</td> <td>1건(20점)</td> </tr> <tr> <td>지침 등</td> <td>-</td> <td>-</td> <td>2건(30점)</td> </tr> <tr> <td>가점</td> <td>-</td> <td>-</td> <td>20점</td> </tr> <tr> <td>점수</td> <td>-</td> <td>-</td> <td>70점</td> </tr> </tbody> </table>	제 개정	'23년	'24년	'25년	고시 등	-	-	1건(20점)	지침 등	-	-	2건(30점)	가점	-	-	20점	점수	-	-	70점	<table border="1"> <tr> <td> ▶ 정책중요도 가점 (10점) - 국정과제와 연계, 대통령 등 지시사항 관련 </td> </tr> <tr> <td> ▶ 지방정부 협조 가점 (10점) - 지방정부 협조 요청에 따른 개선 사항 </td> </tr> </table>	▶ 정책중요도 가점 (10점) - 국정과제와 연계, 대통령 등 지시사항 관련	▶ 지방정부 협조 가점 (10점) - 지방정부 협조 요청에 따른 개선 사항	
제 개정	'23년	'24년	'25년																										
고시 등	-	-	1건(20점)																										
지침 등	-	-	2건(30점)																										
가점	-	-	20점																										
점수	-	-	70점																										
▶ 정책중요도 가점 (10점) - 국정과제와 연계, 대통령 등 지시사항 관련																													
▶ 지방정부 협조 가점 (10점) - 지방정부 협조 요청에 따른 개선 사항																													
공공 계절근로 비중 (%)			신규	3.78	- 농어촌 현장의 수요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 및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등 공공 영역의 계절근로 확대 필요 - 성과지표는 '25년 전체 계절근로 인원 대비 공공형 계절근로 비중 3.26% 보다 16% 상향한 3.78%를 목표로 설정(3년 평균 공공 계절근로 비중 증가율 16% 적용)	-'26년 공공 영역 계절근로 배정 인원/ '26년 계절근로 배정인원	농작업 위탁형, 공공형 계절근로 배정 관련 문서																						
					<table border="1"> <thead> <tr> <th>배정인원</th> <th>'23년</th> <th>'24년</th> <th>'25년</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40,647</td> <td>67,778</td> <td>95,596</td> </tr> <tr> <td>공공형</td> <td>990</td> <td>2,055</td> <td>3,117</td> </tr> <tr> <td>비중</td> <td>2.44%</td> <td>3.03%</td> <td>3.26%</td> </tr> </tbody> </table>	배정인원	'23년	'24년	'25년	전체	40,647	67,778	95,596	공공형	990	2,055	3,117	비중	2.44%	3.03%	3.26%								
배정인원	'23년	'24년	'25년																										
전체	40,647	67,778	95,596																										
공공형	990	2,055	3,117																										
비중	2.44%	3.03%	3.26%																										
					※비중 증가율 평균 16%																								

④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강화 및 보호외국인 처우개선(IV-1-④)

□ 추진배경(목적)

- 불법체류 외국인 30만 명대 감소에 따른 감소 추세 유지 및 국민안전을 위한 외국인 관리 강화와 함께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권익보호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강화 및 체류질서 확립

-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적발 등을 통해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하고, 국민 안전 위협 및 일자리 침해 분야 중심으로 단속 역량 집중
-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인권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단속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 최소화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해 고용주 대상 계도 활동 적극 추진

○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강화

- 보호외국인 중 중증질환자, 가족 부양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직권·신청에 따른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 구축
- 외국인 보호시설 내 특별 보호실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처우개선
- 보호외국인의 고충 상담 및 해결 노력
 - ※ 주거관련 보증금 회수 및 계약해지, 의료지원, 예·적금, 보험 해지 등 은행 관련 업무, 체불임금 처리, 본인 짐정리 및 회수, 소송 수행 및 출국 준비를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이민정책 방향 공유 및 대국민 소통 간담회	1월	
	○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3월	
	○ 테마별 출입국사범 및 브로커 기획 단속 실시	3~4월	
2/4분기	○ 동향조사 기법 발표회	4월	
	○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5월	
	○ 외국인 보호시설 지도·점검	4~6월	
	○ 단속 관련 매뉴얼 개정	4~6월	
3/4분기	○ 전국 조사과장 회의	7월	
	○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주한공관원 간담회 개최	7~9월	
4/4분기	○ 전국 사범업무 담당과장 회의	10월	
	○ 특별 자진출국 시행	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민정책 방향 공유 및 대국민 소통 간담회 실시
 - 시민사회·인권단체와 불법체류 관리 정책 등을 공유 및 의견 청취
-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한 주한공관원 간담회 추진
 -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주한 공관원과의 협업을 도모하여 자국민 커뮤니티를 활용한 제도 홍보 및 자진출국 유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개최	이민정책 방향 공유 및 대국민 소통 간담회 개최	1월
회의 개최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주한공관원 간담회 개최	하반기

□ 기대효과

- 국민 안전 위협 및 일자리 침해 분야 집중단속 시행으로 국민 불안 해소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체불임금 해결지원, 특별 보호시설 환경 개선, 고충 상담 강화 등을 통한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인권 보호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 및 통합 실현을 위해 엄정한 출입국관리와 합리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Ⅲ-1-일반재정)				
③	외국인체류관리(1233)	일반회계	21,372 (52,920)	24,011 (59,545)
	▪ 외국인보호관리(300)		21,372	24,0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출입국사범 유형별 적발 점수(점)			신규	87,136	<p>기존에는 불법체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제조업 현장 단속 위주의 양적 검거 방식이 있으나, 단속 중 사망사고 발생, 농·어촌 인력난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이에 '26년부터 국민 안전 위협·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위주의 기획단속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출입국사범 유형별 적발 점수제 도입</p> <table border="1"> <thead> <tr> <th>적발유형</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단속 분야</td> <td>1~3점</td> </tr> <tr> <td>기획조사 분야</td> <td>3~30점</td> </tr> <tr> <td>자진출국</td> <td>1점</td> </tr> </tbody> </table> <p>* 1점=1명</p> <p>점수표에 따라 환산한 '23년~'25년 실적 평균의 5%를 상향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3년</th> <th>'24년</th> <th>'25년</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77,084점</td> <td>84,956점</td> <td>86,921점</td> </tr> </tbody> </table> <p>※ '26년에는 단속인력의 20%를 안전 요원 배치 및 사전계도 활동 투입 예정으로 실제 단속 인력이 감소한 사실을 반영하여 단속 분야 실적의 20%를 감축하여 산정</p>	적발유형	점수*	단속 분야	1~3점	기획조사 분야	3~30점	자진출국	1점	구분	'23년	'24년	'25년	합계	77,084점	84,956점	86,921점	출입국사범 유형별 적발 실적(점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을 통하여 추출
적발유형	점수*																						
단속 분야	1~3점																						
기획조사 분야	3~30점																						
자진출국	1점																						
구분	'23년	'24년	'25년																				
합계	77,084점	84,956점	86,921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 실적 (건)			신규	26,878	<p><자문단 개선의견 반영></p> <p>-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과제에 부합하도록 지표 개선</p> <p>체불임금, 의료구호 등 보호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실적을 지표로 설정</p> <p>'26년 신설된 지표이나, 측정산식에 따라 과거 3년간 실적을 산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3</th> <th>'24</th> <th>'25</th> </tr> </thead> <tbody> <tr> <td>고충 상담실적</td> <td>23,705</td> <td>24,021</td> <td>29,068</td> </tr> </tbody> </table> <p>최근 3년간 실적 평균(25,598)의 5%를 상향한 값(26,878)을 목표치로 설정</p>	구분	'23	'24	'25	고충 상담실적	23,705	24,021	29,068	고충상담 건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을 통하여 추출								
구분	'23	'24	'25																				
고충 상담실적	23,705	24,021	29,068																				

⑤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IV-1-⑤)

□ 추진배경(목적)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민원 수요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하고, 출입국·이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접수 확대 필요
- 급변하는 이민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이민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안전한 국경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경제·안보·국민안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실행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출입국·이민행정 대민 포털 개편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추진

- 출입국·이민행정 대민 포털 개편 범위, 세부 설계, 방향성 정의, 전자적 방식의 출입국민원 통합관리 프로세스 설계, 구축 예산 산정 등 구체적 이행 방안 수립

※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최종산출물을 통해 '27년 본사업 예산 편성 추진

○ 통신사 대상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시범운영 추진

- 외국인 통신서비스 가입 시 신원확인 절차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및 통신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통신사 대상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시범운영 추진

※ 과기정통부 측 연계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시범운영 예정

○ 외국인등록증 양식 개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 외국인등록증의 가독성 및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록증 표기 항목 정비(등록번호·성명 항목 표기 생략, 글자 수 확대 등)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추진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추진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사 개청('26. 10. 예정)에 따른 출입국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무중단 이전·설치 및 향후 안정적인 출입국서비스 제공을 위한 Unix 장비의 클라우드 전환 추진

○ 출입국정보 시스템 이해도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출입국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 출입국기록·외국인등록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안 의식 강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및 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예산 신청	1월	
	○ 출입국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한 외교부 여권정보 연계 개선	2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연계기관 사용자 일괄정비	2월	
2/4분기	○ 경찰청 폴조회시스템 단말기 이용 실태 현장 점검	4월	
	○ 주요 연계기관 출입국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점검	5월	
	○ 출입국·이민행정 대민 포털 개편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완료보고회 개최	6월	
3/4분기	○ 성수기 심사장비 점검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7월	
	○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 구축 지원	8월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9월	
4/4분기	○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만족도 조사 실시	10월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통신사 대상 시범운영 추진	11월	
	○ 외국인등록증 양식 개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 등 개정	12월	
	○ 주요 연계기관 출입국정보연계 활용 실적 조사 실시	12월	
연중	○ 출입국·이민행정 정보시스템 보완 및 개선	연중	
	○ 출입국정보 수요기관과 적극적인 정보연계 기획 및 추진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실사용자인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개선 의견 청취
 - 소속기관 방문 민원인, 이민자 네트워크, 유학생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조사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이용기관인 금융기관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개선 의견 청취
 - 제1·제2금융권 임의의 기관을 선정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
- '26년도 추진 정보화사업 TF를 통한 의견 청취 및 협업체계 구축
 - 본부 각과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국가정황정보 통합 DB 구축,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14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등 사업 추진 및 지원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26년도 추진 정보화사업 TF를 통한 의견 청취	상시
현장방문	주요 연계기관 출입국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점검	5월
만족도 조사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만족도 조사	9월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만족도 조사	10월
회의	통합유지보수·위탁운영 월간보고회 참석	매월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월간보고회 참석	매월
	유관기관 출입국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의	상시

□ 기대효과

- 외국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포용적 이민 정책의 실현
 - AI 기반 챗봇, 전자민원 확대 등 비대면 전자민원으로의 전면 개편하여 이용자 중심의 출입국·이민행정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초석 마련
- 출입국·이민행정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기관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정책 실행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 및 통합 실현을 위해 엄정한 출입국관리와 합리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Ⅲ-1-일반재정)				
②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1232)	일반회계	30,410 (40,259)	41,015 (51,015)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305)		30,410	41,0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점)			81.6	85	국내 체류 외국인에 모바일 신분증 제공을 위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시스템 개선 반영 작년 만족도 조사 결과 81.6점을 달성하 였으나, 만족도 조사 특성에 따른 상승 한계를 고려하여 전년 실적(81.6점) 대비 약 4% 상향값인 85점을 목표로 설정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 자수 ※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 소미흡 40, 미흡 20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 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점)			신규	80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및 시스템 개선 반영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10점 척도 측정에 따른 "만족"인 80점을 목표치로 적극 설정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 수 ※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매우만족 100, 만 족 80, 보통 60, 다 소미흡 40, 미흡 20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유관기관 정보연계 실적(건)	30	39	46	48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망연계 등을 통한 유관 기관과의 정보 연계 확대, 개선 조정 등의 실적에 대한 지표로서, 연계업무의 난이도 및 기관 간 업무협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 (46건) 대비 약 5% 상향값인 48건을 목표로 설정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확대, 개선, 조정, 정비 등 실적 건수	공문, 회의자료, 발간물, 유관기관 출입국정보 활 용 실적

⑥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IV-1-⑥)

□ 추진배경(목적)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방안으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의 역할 정보 전달·인지도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대상자와 소통 강화

-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민정책의 방향·중요성을 알리고 출입국 현장투어로 정책 현장을 적극 개방하여 이민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하며,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상호 소통이 가능한 홍보 활동 추진

○ 수요자 중심의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 정책수요자의 수용성이 높은 동영상(숏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로 배포
-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연계하고, 단순 정보 전달 콘텐츠에서 정책 수요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변화를 시도하여 홍보 효과와 이민정책 체감도 제고

○ 이민정책에 대한 허위정보·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

- 누리집을 통한 설명자료 배포 외에도 SNS 채널·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반감을 해소하며 반(反) 이민정서 확산을 방지

※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선의견 반영

○ 외국인 대상 홍보 활동 지속 강화

- 외국어 홍보자료 제작 등을 통해 주요 정책 대상자인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 SNS 홍보 활동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 '정책 홍보 노력도' 지표에 'SNS 팔로워수'를 반영하여 홍보 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 확대

※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선의견 반영

※ 개별 게시물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조회수·도달률'보다 계정(채널) 전체 활동의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팔로워수'를 산식에 반영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계획 수립 및 용역 입찰	1~2월	
	○ 출입국 현장투어 계획 수립	2월	
	○ 출입국 현장투어	3월	
2/4분기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	4월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홍보	5월	
	○ 출입국 현장투어	6월	
3/4분기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	7월	
	○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홍보	8월	
	○ 출입국 현장투어	9월	
4/4분기	○ 출입국 현장투어	11월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	11월	
	○ 온라인 홍보 만족도 조사	11월	
	○ 출입국·외국인정책 달력 제작 및 배포	12월	
연중	○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	연중	
	○ 정책·행사 홍보자료 제작 및 온라인(누리집 SNS) 게재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오프라인) 정책 브리핑·간담회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과 현장투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의견 수렴
 - 정책 브리핑·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초청 행사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 현장투어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투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수렴·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실화
- (온라인) 온라인 홍보 만족도 조사, 소식지(공존) 독자 대상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점 도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주요정책 발표 시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연중
브리핑	대국민 정책설명을 위한 언론 브리핑	연중
만족도 조사	출입국 현장투어 만족도 조사 (17회)	3~11월
	온라인 홍보 만족도 조사	11월
온라인 이벤트	소식지 '공존' 독자 대상 온라인 이벤트 실시	4·7·9·12월

□ 기대효과

-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 활동으로 정책수요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대상의 수용성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정책 홍보 노력도(점)	-	-	952	1,020	'25년 신설된 지표이나, 측정산식에 따라 과거 3년간 실적을 산정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0;"> <tr> <th>구분</th> <th>'23</th> <th>'24</th> <th>'25</th> </tr> <tr> <td>점수</td> <td>720</td> <td>706</td> <td>815</td> </tr> </table>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선의견을 반영,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지표로 '팔로워수 증가분 추가 반영 * 평가의 주체가 내부에 국한되지 않도록 다각화, 평가의 객관성 제고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0;"> <tr> <th>구분</th> <th>'23</th> <th>'24</th> <th>'25</th> </tr> <tr> <td>증분</td> <td>120</td> <td>90</td> <td>137</td> </tr> <tr> <td>최종점</td> <td>840</td> <td>796</td> <td>952</td> </tr> <tr> <td>상승률</td> <td></td> <td>-5.2%</td> <td>19.6%</td> </tr> </table> * 단위 : 백명 ** 기존 실적 점수 + 팔로워수 증가분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7.2%를 반영하여 '25년 실적치(952)에서 7.2% 상향하여 1,020점을 목표치로 산출	구분	'23	'24	'25	점수	720	706	815	구분	'23	'24	'25	증분	120	90	137	최종점	840	796	952	상승률		-5.2%	19.6%	- 보도·설명자료 배포, 기고, 언론 인터뷰 등(건당 1점) - 출입국 홍보 소식지 발간(건당 10점) - 홍보 영상물 제작(건당 5점) - 기타 홍보물* (건당 5점)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등 ※다국어 홍보물 제작 시 건당 기본 점수에 50% 가점 - 정책홍보 행사(간담회, 브리핑, 정책현장 방문 등) 개최(건당 10점) - 전년대비 SNS 팔로워수 증가분(백명당 1점)	- 홍보물 배포 및 발간 목록, 홍보 책자, 사진자료, 동영상 등
구분	'23	'24	'25																												
점수	720	706	815																												
구분	'23	'24	'25																												
증분	120	90	137																												
최종점	840	796	952																												
상승률		-5.2%	19.6%																												
정책수요자 소통 향상도(점)	-	-	87.9	89.8	정책홍보 및 소통 노력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피드백을 평가하는 환류 지표 설정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포괄하는 평가를 위해 ①온라인 매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②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균 점수 산출 '23년/25년 3년 평균 상승률은 4.5%이나, 만족도 조사 특성에 따른 상승 한계를 고려하여 '25년 실적값과 4.5% 상향한 값의 중간값으로 설정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0;"> <tr> <th>구분</th> <th>'23</th> <th>'24</th> <th>'25</th> </tr> <tr> <td>점수</td> <td>80.5</td> <td>83.5</td> <td>87.9</td> </tr> <tr> <td>상승률</td> <td></td> <td>3.7%</td> <td>5.3%</td> </tr> </table>	구분	'23	'24	'25	점수	80.5	83.5	87.9	상승률		3.7%	5.3%	- 출입국 현장투어 만족도 점수와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만족도 점수의 평균 - 설문항목별로 리커트 척도 5단계로 측정 후 배점 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의 합계 측정 - 가중치 부여 현장투어 참가자 만족도(70%) 온라인 홍보 만족도(30%)	- 현장투어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및 온라인 매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23	'24	'25																												
점수	80.5	83.5	87.9																												
상승률		3.7%	5.3%																												

(1) 주요 내용**□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 '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평가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제도 도입·운영 등

□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적정책 추진

- 국가간 인재 경쟁 심화 및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국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민 확보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적정책 추진

□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추진

- 이민자의 한국 사회 이해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 교육을 확대하고, 언어·문화적 차이로 권리침해에 취약한 이민자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 확대

□ 난민심사 체계 개선 및 국력에 부합하는 난민보호 추진

- 증가하는 난민신청에 대응해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난민 처우 개선 및 재정착·학생난민 수용 등을 통해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난민정책 추진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개편, 조사관 역량 강화, 전문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정황정보 DB 구축·AI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90.7	88.6	87.1	89.0	최근 3년간('23~'25)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며, 최근 3년 평균 만족도는 88.8 수준 이에, 최근 3년 평균(88.8)을 상회하는 89.0를 '26년 목표로 설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만족도 합계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체 응답 중 '매우만족+만족'의 비율의 합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가중치기준) 교육 참여자수를 기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70%), 조기적응프로그램(20%),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10%) 각 가중치 부여	설문지,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연 1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 외국인력 확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지역사회 수용성 등 사회적 논의 가능성 및 관계기관 정책 조정·협업 필요성 증대
- ⇒ 외국인정책 위원회 및 이민정책포럼 등을 활용하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성과를 보도자료, 포럼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신뢰도 제고

□ 적극적 국적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국익 기여 가능성이 있는 핵심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유치 사례의 언론보도, 홍보 등을 통해 국적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진

□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추진

- 이민자 교육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의견 차이 발생 가능
 - ⇒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
 -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고용주 등이 교육 일정, 운영방식 등 교육여건에 대한 의견 제기 가능
 - ⇒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운영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여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
- ※ 조기적응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문조사 상시 실시

□ 난민보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필요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등 부정적 인식으로 사회 갈등 우려
- ⇒ 난민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난민 등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국가성장 동력으로 양성함으로써 난민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와 공감 확대를 위해 노력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난민 이의신청 건수의 지속적 증가 및 난민 신청 사유 다변화로 인해 난민 심사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난민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
- ※ 난민 이의신청 현황 : '22년 3,748건 → '23년 5,248건 → '24년 5,152건 → '25년 5,806건
- ⇒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관 역량 강화 등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효율을 위해 국가정황정보 DB 2단계 구축

(4) 기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immigration_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https://facebook.com/immigration.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eaimmigration307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카카오채널(https://pf.kakao.com/_gxbpPT)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IV-2-①)

□ 추진배경(목적)

-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25년 추진실적 종합평가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년~'27년)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통해 국가 이민정책 방향성 점검
-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 외국인정책(실무)(실무분과)위원회 및 이민정책(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요 현안·정책방향 논의 및 ^(가칭)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자 TF 등 정책 플랫폼 확대를 통한 의견수렴·정책홍보 강화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제도(K-CORE) 운영
 - 전문대학에서 한국어 역량과 중간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지역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저임금 위주의 기존 외국인력 도입 구조를 적정 임금에 기반한 장기 정주형 외국인력 양성 체계로 전환 유도
 -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제도(지침) 제·개정
- 외국인재 전담 유치기관 사전등록제 도입
 - 외국인재 유치 과정의 송출 비리·불법 체류 양산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민간·공공기관을 등록·관리하는 '전담기관 등록·관리체계' 도입
- 증거 기반 이민정책·행정 연구 강화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정책 연계를 위한 협업 강화 및 AI 기반 이민행정 혁신발표회 개최 등 행정 효율성·정책대응성 제고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6년 정책연구 추진 계획(안) 마련	1월	
	○ 제3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2월	
	○ '26년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2월	
	○ '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3월	
2/4분기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증 수여식	4월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개최(이민 2세대 분과 등)	5월	
	○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	6월	
3/4분기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1차)	7월	
	○ '26년도 제1차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8월	
	○ 제38차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	8월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2차)	9월	
4/4분기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3차)	10월	
	○ AI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발표회 개최	11월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4차)	12월	
연중	○ 미래정책포럼 개최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5회)
 -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 제고, 중앙부처-지자체 간 질의응답·토론, 정책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추진과제 (제도개선 등) 발굴 및 협업 기반 구축
- 외국인정책(실무)(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우수 정책 사례 공유(홍보) 등
- 이민정책포럼 개최
 - 언론·학계·지원단체 종사자 등과 이민정책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방향 논의
-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자문)(분과)위원회 개최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추진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이민자 등) 의견수렴

○ 관계기관 간담회·세미나 등 수시 참여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상시 수렴

구분	내용	세부일정
워크숍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5월~11월
회의	· 외국인정책(실무)(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연 1회 이상
포럼	· 이민정책포럼 개최	6월
자문	·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	9월

□ 기대효과

○ 국가 성장동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제도 운영을 통한 적정임금 기반의 장기 정주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지역 산업계 인력난 완화 및 경쟁력 제고

○ 전략적·체계적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년~'27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체계 고도화로 정책의 일관성·책임성 강화 및 위원회·포럼 등을 통한 범정부 상시 협업체계 구축 등

○ 증거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촉진

-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AI 기반 이민행정 혁신발표회 등을 활용한 정책 대응성·행정 효율성 제고

○ 투명하고 신뢰받는 외국인력 유입관리 기반 마련

- 외국인재 전담 유치기관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유치·중개 과정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및 송출비리·불법체류 등 부작용 예방을 통한 건전한 외국인력 수급 질서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 및 통합 실현을 위해 엄정한 출입국관리와 합리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Ⅲ-1-일반재정)				
① 국제이민협력(1231)	일반회계		190	226
▪ 이민정책개발지원(300)			(3,645)	(4,012)
			190	2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건)	59	67	82	63	<p>과거 3년 간 평균 실적값의 상승률 (12.45%)을 전년도 실적값(45건*)에 더하고, 목표 적극성 확보를 위한 가중치 (25%) 반영 후 산정 63건</p> <table border="1"> <tr> <td>연도</td> <td>'22.</td> <td>'23.</td> <td>'24.</td> <td>'25.</td> </tr> <tr> <td>실적</td> <td>53</td> <td>59</td> <td>67</td> <td>45*</td> </tr> </table> <p>* 전년도 최종 실적값(82건)에서 타 부서 (지역체류지원과 등)으로 이관된 업무실적 (법령 제개정(22건), 광역형·지역특화형 비자정책 관련 업무(15건) 제외) ※ 현원 8명(정원 5명) 축소</p> <p>- 기존 “건수 중심” 지표를 개선하여 ①협업수준, ②정책 추진기반, ③정책분석 기능별 차등 가중치 반영 복합지표로 개선 ① (협업성) 유관기관 협업수준 체계 고도화를 반영하여 장차관급 참여, 대규모 회의(30명이상), 보도자료 배포 여부를 반영(업무 난이도 높음)하여 차등 가중치 적용(2점) ※ '25년 성과관리 개선단(위원 검토) 반영 ② (체계성) 정책 추진기반 체계 수준을 반영하여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체계 운영(건), 관련 위원회 TF 개최 참여(건) 등 반영(1점) ③ (분석성)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해외 정책 동향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반영하여 해외 주요국가 정책동향 조사분석보고서 등 반영(1점)</p>	연도	'22.	'23.	'24.	'25.	실적	53	59	67	45*	<p>○ 유관기관 협업 체계·수준(건) ※ 업무난이도별 가중치 부여</p> <p>(2점) 장차관 이상 참석/30명 이상 참석/보도자료 배포한 협업 회의 건 (1점) 포럼 세미나 개최/ 타부처 위원회 의견제출/ 해외 정책동향 조사 파악 분석 등</p> <p>-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 수립(건) - 소관 위원회, 포럼 간담회 등 개최(건) - 관계부처 위원회 등 참석(건) ○ 해외정책 동향 파악 및 사례 분석보고서(건)</p>	<p>언론 보도자료, 간행물, 각종 보고문서 등</p>
연도	'22.	'23.	'24.	'25.													
실적	53	59	67	45*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IV-2-②)

□ 추진배경(목적)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국적정책 필요
 - 국가 간 인재 경쟁 심화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학술, 신산업·첨단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및 새로운 국민 확보의 중요성 부각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적정책 적극 추진
 - 국적 제도에 대한 정책수요자,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적정책 수립 및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효율적인 국적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합리적 국적 정책 추진
 - 국적업무의 전문성·통일성 확보 및 신속한 국적업무 처리를 위한 국적심사 전담기구(국적심사원) 신설 추진, 국적 신청의 대행 허용, 아동의 국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적 제도 개선 등 합리적인 국적정책 수립·추진
- 국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국적이탈 허가, 국적판정 등 심의·의결을 위한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국적정책 추진
- 국적취득자의 국민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독립유공자 후손 및 귀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재외공관에서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공정하고 전문적인 귀화 면접심사 제도 운영
 - 귀화 면접관 제도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귀화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적제도 홍보

- 재외동포를 위한 현지 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공무원 대상 교육 등 적극적인 국적제도 홍보·안내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월	
	○ 국적심사원 신설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발의	2월	
	○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3월	
2/4분기	○ 국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4월	
	○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국적실무 교육 실시	5월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합동 현장 접수	6월	
3/4분기	○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7월	
	○ 국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월	
	○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8월	
4/4분기	○ 재외공관 국적설명회 개최	10월	
	○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12월	
	○ 국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12월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외공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국적제도 안내 및 의견 수렴

- 관계기관(병무청, 동포청 등) 협업을 통해 국적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 등 정책수요자 대상 국적 관련 상담,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모색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국적판정 신청 접수 지원 및 상담 제공
- 지자체 가족관계등록관서 직원 대상 국적제도 안내 및 의견 청취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재외동포 대상 국적제도 설명회	3월
설명회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자 대상 국적실무 교육	5월
설명회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일괄접수 지원 및 상담 지원	6월
설명회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 국적실무 교육	11월
현장방문	재외동포 대상 국적제도 설명회	11월
간담회	귀화 면접심사 개선을 위한 귀화 민간면접관 간담회	12월

□ 기대효과

-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인구 구조의 변화 및 국가 간 인재 경쟁 심화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민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 및 경쟁력 확보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적 제도 구현
 -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국적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국적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적제도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 및 통합 실현을 위해 엄정한 출입국관리와 합리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Ⅲ-1-일반재정)				
③	외국인체류관리(1233)	일반회계	17,639 (52,920)	21,579 (59,545)
	▪ 외국인사회통합지원(301)		17,639	21,57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국적취득자의 국적증서 수여식 만족도 조사 (점)			신규	80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국적증서 수여식에 대한 만족도 측정 -자문단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적증서 수여식이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국적증서 수여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표로 설정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5점 척도 측정에 따른 “만족”인 80점을 목표치로 적극 설정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수 ※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불만족 40, 매우불만족 20)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한 국적취득자에 대한 수여식 만족도 조사 실시 실시 ※ 평가 항목 ①행사 진행 및 내용. ②상징성과 의미 전달. ③행사 개최 관련 설문 항목 포함									
국적취득자 수(명)			신규	15,442	국적취득자 수 -자체평가위원의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실적과 결합 없이 직관적인 정책 성과(국적취득자 수)만으로 지표 구성 ※ '25년 지표 : 국적제도 개선 및 국적취득자 실적 -최근 3년 실적을 고려하여 3년 평균값 14,848명 대비 4% 적극 상향한 15,442명을 목표로 설정	'26년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한 국적취득자 수	통계월보 기준 (성과측정 단계에서 통계월보 미발행 시 ICRM2019 통계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3년</th> <th>'24년</th> <th>'25년</th> </tr> </thead> <tbody> <tr> <td>국적취득자</td> <td>14,549</td> <td>14,615</td> <td>15,381</td> </tr> </tbody> </table>	구분	'23년	'24년	'25년	국적취득자	14,549	14,615	15,381			
구분	'23년	'24년	'25년													
국적취득자	14,549	14,615	15,381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IV-2-③)

□ 추진배경(목적)

- 국내 이민자 수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라 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착지원 필요성 확대
 - ※ 이민자는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보격차로 인하여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각종 권익침해에 취약
- 이민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이민자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회통합 교육 운영방식 확대

- (입국 전 교육) 이민자가 본국에서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설 추진
- (온라인 교육) 이민자가 국내 입국 후 시간·지역적 제약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관계기관 연계) 이주배경 학생이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에서 멘토링 특강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학점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간 연계 활성화 추진 (자문단 의견 반영)

※ 교육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대학 등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추진

○ 이민자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

- (권익침해 예방) 노동인권 침해에 취약한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시행
-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 (자문단 의견 반영)

○ 사회통합 정책추진 기반 조성

- (제도 정비) 부처별로 상이하게 사용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관련 통계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또는 중도입국자녀(법무부),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이주배경 청소년(성평등부), 외국인주민 자녀(행안부), 다문화 학생(교육부) 등

- (재원 확보) 이민자의 정착 및 자립 지원 등 중장기 사회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조성 추진
- (인식개선) '제19회 세계인의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사회통합 유공자를 포상하고, 미담 사례집 발간 등 사회통합 우수사례 홍보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1월	
	○ 학교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2월	
	○ 권익증진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계획 수립	2월	
2/4분기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선발	4월	
	○ 학교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5월	
	○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유공자 포상식) 개최	5월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용어 정비를 위한 범부처 협의	5월	
	○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실시	6월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위촉	6월	
3/4분기	○ 온라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개시	7월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특강 실시	9월	
	○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9월	
4/4분기	○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10월	
	○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10월	
연중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통합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 ※ 이민자 대상 교육확대 등 사회통합 정책은 관계부처·이민자·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견 발생 가능성 존재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1월
간담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간담회	3월
회의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10월
현장방문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 수행상황 점검	9월
현장방문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 수행상황 점검	12월
만족도 조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상시

□ 기대효과

- 입국 전 교육, 온라인 교육 운영으로 이민자의 한국사회 이해도를 높여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이민자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이민자 권익침해 사전 예방
- 사회통합 정책 기반 정비 및 대국민 이민자 인식개선으로 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토대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 및 통합 실현을 위해 엄정한 출입국관리와 합리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Ⅲ-1-일반재정)			
③ 외국인체류관리(1233)	일반회계	31,548 (52,920)	35,534 (59,545)
▪ 외국인사회통합지원(301)		17,639	21,579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304)		13,909	13,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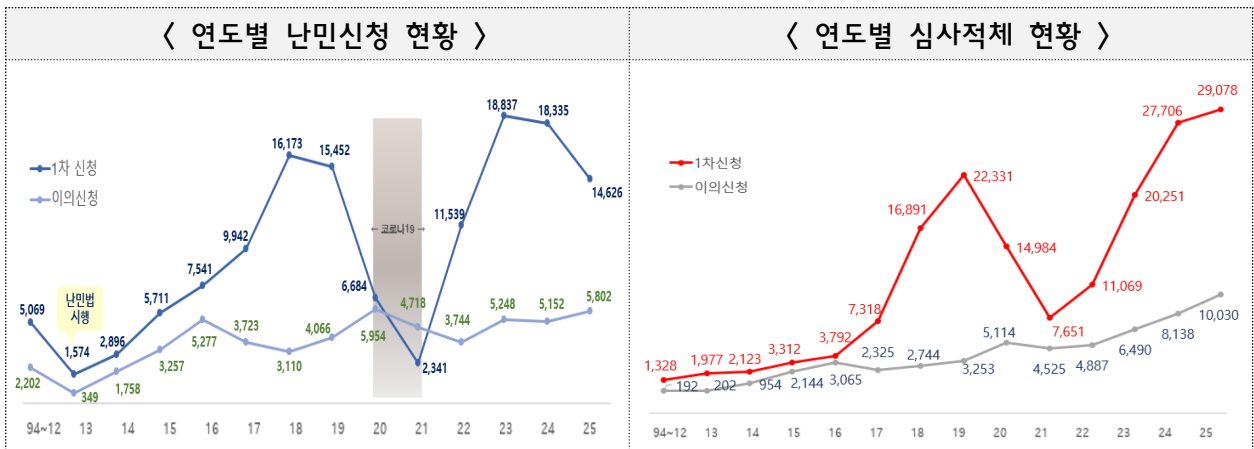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 소양 충족도(%)(공통)	53.6	54.3	55.7	5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실적(55.7)에 최근 실적 증가율(1.35%)을 반영하여 '26년 목표를 56.1로 설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23년</th> <th>'24년</th> <th>'25년</th> </tr> </thead> <tbody> <tr> <td>5단계 수료자 (명)</td> <td>13,254</td> <td>13,770</td> <td>16,552</td> </tr> <tr> <td>이수자 (명)</td> <td>7,109</td> <td>7,482</td> <td>9,224</td> </tr> <tr> <td>이수율 (전년대비 증감율)</td> <td>53.6 (4.9%)</td> <td>54.3 (1.3%)</td> <td>55.7 (1.4%)</td> </tr> </tbody> </table>	구분	'23년	'24년	'25년	5단계 수료자 (명)	13,254	13,770	16,552	이수자 (명)	7,109	7,482	9,224	이수율 (전년대비 증감율)	53.6 (4.9%)	54.3 (1.3%)	55.7 (1.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통계(공통)
구분	'23년	'24년	'25년																				
5단계 수료자 (명)	13,254	13,770	16,552																				
이수자 (명)	7,109	7,482	9,224																				
이수율 (전년대비 증감율)	53.6 (4.9%)	54.3 (1.3%)	55.7 (1.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실적(점)	738	795	1,095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자료 발간,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사회통합협의회 개최 등 실질적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지원 실적을 점수화함 최근 3년(23년~25년) 실적은 증가 추세 다만, '26년부터 기존 통합과 업무였던 동포업무가 타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표 대상 범위가 일부 조정된 점을 고려할 필요 이에 최근 실적 수준과 업무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년 목표를 1,000점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000점 - 제도개선안 마련 (각 10점) - 유관기관 간담회, 회의 등 의견수렴 (각 5점) - 사회통합협의회 개최(각 3점) -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유튜브 SNS 등 홍보실적 (각 3점) -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자료 발간 (각 3점) 	결과보고서 등																

④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IV-2-④)

□ 추진배경(목적)

- 유럽·중동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로 쏠 세계적 난민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인권 규범 준수 및 국가 간 연대에 기반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강조
 - 국제적 추세와 더불어 '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은 약 14만 건, 난민심사 적체는 약 3만 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보완 및 개선 필요
- ※ ('25. 12월 기준) 난민인정 신청 건수 14,626건, 누적 난민신청 136,720건 중 62,594건의 심사결정을 통해 난민인정 1,679건, 인도적체류허가 2,727건으로 난민보호 총 4,406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 마련·추진

- 난민심사보고서 표준화 등 난민심사 방식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난민심사 적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권익 보호 및 원칙에 부합하는 난민심사 체계 구축
- 심사대기 장기화를 방지하여 난민제도 남용 사례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을 신속하게 보호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 운영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운영, 난민전담공무원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연중), 난민포럼 개최 등을 통한 난민제도의 신뢰성 제고

- 재정착·보충적유입경로협의(CRCP, Consultations on Resettlement and Complementary Pathways),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등 국제회의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한국형 난민정책 모델 홍보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학생난민 프로그램' 정규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교육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및 학업·정착 지원체계 구축
- 대학, 민간 기업 및 장학재단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난민에게 필요한 장학금,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지원 모색

○ 국내 거주 난민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난민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난민 등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하여 난민정책의 실효성 확보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활성화,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한 국내 정착·자립 지원 및 사회통합 유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학생난민 장학생 선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월	
	○ 난민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난민통계 대국민 공개	2월	
	○ '난민 등 생활 실태 패널조사' 연구용역 추진	3월	
2/4분기	○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4월	
	○ 제6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추진	5월	
	○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 실시	5월	
	○ 재정착·보충적유입경로협의(CRCP) 참석	6월	
3/4분기	○ 난민포럼 개최	7월	
	○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7월	
	○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8월	
4/4분기	○ 거점기관 난민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0월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평가 실시	10월	
	○ 난민전담공무원 특정직위 평가	12월	
연중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 재정착 난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시민단체, 지자체,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지원방안을 논의

○ 재정착난민 및 학생난민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가들의 재정착난민 제도 및 학생난민 프로그램 현황 등을 확인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발전 방향 모색

○ 난민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 등 개최

- 난민 지원단체, 법률 전문가, 학계 등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난민 처우, 난민 심사 등 난민제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일선 출입국관서에서 난민신청 접수, 난민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사항, 업무 효율화 방안, 심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5월
회의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7월
간담회	난민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7월
워크숍	난민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0월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체계 구축, 난민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공감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난민정책 추진 가능
- 난민위기 심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권 선진국가 이미지 제고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 및 통합 실현을 위해 엄정한 출입국관리와 합리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Ⅲ-1-일반재정)				
③ 외국인체류관리(1233)	일반회계		17,639 (52,920)	21,579 (59,545)
▪ 외국인사회통합지원(301)			17,639	21,57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난민심사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점수)	95	115	140	155	-과거 3년간 실적 및 추세를 고려하면 연평균 상승률이 약 21%이나, 국제정세 변화, 국내 여론을 신중히 고려하여 '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약 10% 상향하여 목표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지표를 2항목으로 세분화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항목</th> <th>목표치</th> </tr> </thead> <tbody> <tr> <td>1 난민심사제도개선</td> <td>105</td> </tr> <tr> <td>2 난민심사역량강화</td> <td>50</td> </tr> </tbody> </table>	항목	목표치	1 난민심사제도개선	105	2 난민심사역량강화	50	■ 제도개선 - 법령 개정(30점) - 행정규칙 개정(20점) - 개선 및 개정(15점) ■ 역량강화 - 인증제 사업(10점) - 교육 및 평가(5점) - 연구 및 조사, 자료발간(5점) - 의견수렴(10점) - 국제회의등참여(10점) ※활동별 실적 집계	보고서 및 정보 보고 등 관련 문서	
항목	목표치													
1 난민심사제도개선	105													
2 난민심사역량강화	50													
난민을 위한 처우지원 활동(점수)	-	90	116	-최근 3년간 생계비 집행률*을 고려하여 5개 구간으로 변경 설정하였으며, 평균값(81%)이 속한 구간(80점)을 목표값으로 설정 * '23년 80%, '24년 91%, '25년 71% ※ '25년 성과지표 개선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생계비 지원인원 단순 균등 분할 방식에서 실제 집행률을 고려한 구간 설정으로 측정산식 변경 - '25년 성과지표 개선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생계비 적기 지급 횟수를 보조 지표로 신규 설정하였으며, 중간값(6점)을 목표값으로 설정 -생계비 지원실적과 별도로 난민을 위한 처우지원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설정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항목</th> <th>목표치</th> </tr> </thead> <tbody> <tr> <td>1 생계비 집행률</td> <td>80</td> </tr> <tr> <td>↳ 적기 지급 횟수</td> <td>6</td> </tr> <tr> <td>2 정착 지원역량 강화</td> <td>30</td> </tr> </tbody> </table>	항목	목표치	1 생계비 집행률	80	↳ 적기 지급 횟수	6	2 정착 지원역량 강화	30	- 최근 3년간 생계비 집행률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화(100점 만점) - 생계비는 매월 지급되므로 총 12번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화(10점 만점) - 정착 지원역량 강화 활동(건별 10점) ※활동별 실적 집계	보고서 및 정보 보고 등 관련 문서
항목	목표치													
1 생계비 집행률	80													
↳ 적기 지급 횟수	6													
2 정착 지원역량 강화	30													

㉔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IV-2-㉔)

□ 추진배경(목적)

○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 이의신청이 지속적 증가하고 난민 신청 사유가 다양화되고 있는 정책환경에서 내실화 있는 이의신청 심의 절차 운영 필요
- 국제정세 급변 및 난민신청자 출신국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의 전문성 강화 및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효율성 제고 필요

※ 난민신청자 출신국: '12년 약 40개국 → '25년 약 140개국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연 13회) 및 분과위원회 (연 36회) 등 연 49회 개최 예정

※ 최근 3년간 난민위원회 개최 횟수 : '23년 6회 → '24년 5회 → '25년 9회

○ 위원회 자문위원단 정비

- 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정황, 종교, 특정사회집단, 국제법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자문위원단 개편

※ 자문위원단 연혁: '20년 1기 34명 위촉 → '23년 2기 44명 위촉

○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 역량 확보를 위해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조사관 및 국가정황조사관 전문교육 지속 실시
- 자체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특이 신청 사례 분석, 국가정황정보 조사기법, 데이터기반 심사 방법 등 연구

○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및 ‘국가정황보고서’ 발간

- 통일성 있는 심사 기준 제시 및 국가정황정보의 시의성 있는 활용을 위해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및 ‘주제별 국가정황보고서’ 지속 발간

※ 발간 시 위원회 자문위원단 감수 등 전문가 의견 반영 및 워크숍 개최

○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관리 체계 고도화

- '25년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한 국가정황정보 DB와 연계할 수 있는 AI 기반 국가정황정보 분석자료 제공 등의 DB 고도화 사업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난민위원회 위원 간담회 개최	1월	
	○ 난민 연구 모임 개최	2월	
	○ 이의신청인 구두의견 진술 청취	3월	
2/4분기	○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4월	
	○ 난민 이의신청 업무 매뉴얼 개정	5월	
	○ 난민심사담당자 대상 국가정황정보 교육 실시	6월	
3/4분기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개편	7월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8월	
	○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9월	
4/4분기	○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발간	11월	
	○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2월	
	○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2차년도)	12월	
	○ 올해의 난민조사관 선발	12월	
연중	○ 난민위원회 개최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난민 위원 간담회 개최

-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절차 개선 방안 및 국가정황정보 DB 고도화 사업에 대한 난민 위원의 이해 제고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난민 관련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발간 시 학계, 민간단체 소속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및 의견 수렴·피드백 반영

○ 난민 심사 담당자 의견 수렴

- ‘주제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 시 언어 문제, 출처 선정 등으로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신청 사유 및 국가에 대한 수요 청취

○ 사실조사에 참여한 이의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추가 면접 등 사실조사에 참여한 이의신청인 대상 심의 절차의 안내 및 진술의 기회 보장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자문

- 이의신청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및 각종 자료집 발간 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자문 및 피드백 반영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난민위원 간담회 실시	반기별
워크숍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발간 관련 워크숍 개최	11월
설문조사	난민 심사 담당자 대상 자료집 발간 주제 수요 조사	분기별
설문조사	사실조사 참여 이의신청인 대상 만족도 조사	연중
자문	보고서 작성 및 자료집 발간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자문	연중

□ 기대효과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를 통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난민제도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익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 난민행정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5	'26
사회 안전 및 통합 실현을 위해 엄정한 출입국관리와 합리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Ⅲ-1-일반재정)				
③ 외국인체류관리(1233)	일반회계	17,639 (52,920)	21,579 (59,545)	
▪ 외국인사회통합지원(301)		17,639	21,57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제도 운영 충실도(점)			신규	44.2	<p>자체평가위원의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이의신청 심의 제도 운영의 핵심 요소인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단일 지표로 변경. 각 요소를 대표할 수 있는 실적 지표로 의견청취율, 국가정황 정보 반영율, 장기 적체 처리율 선정</p> <p>① (공정성) 의견청취율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25년 2.5%)으로, 절차적 공정성 강화 필요성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2.5%p) - '26년 목표치 : 5%</p> <p>② (전문성) 국가정황정보 반영률 - 최신 국가정황 반영 필요성 증가 및 현 수준('25년 5.4%)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2%p) - '26년 목표치 : 7.4%</p> <p>③ (신속성) 장기 적체 처리율 - 연 5,000건 이상 신규 접수 및 심사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적체 증가 억제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25년 30.8%에서 +1.0%p) - '26년 목표치 : 31.8%</p>	<p>① 의견청취율 = (의견청취 건수/전체 처리건수)*100</p> <p>② 국가정황정보 반영률=(국가정황정보 의뢰회신 건수/전체 처리건수)*100</p> <p>③ 장기 적체 처리율=(장기 적체(24개월 이상) 처리건수/전체 처리건수)*100</p> <p>개선도=①+②+③</p> <p>※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특정 항목의 과도한 초과달성에 따른 종합지수 왜곡 방지 및 균형있는 성과달성을 위해 각 항목 실적은 목표값의 최대 105%까지만 인정</p>	<p>난민통계, ICRM통계 보고서 등</p> <p>'27. 1월 초 실적 산출 예정</p>



IV

환류 등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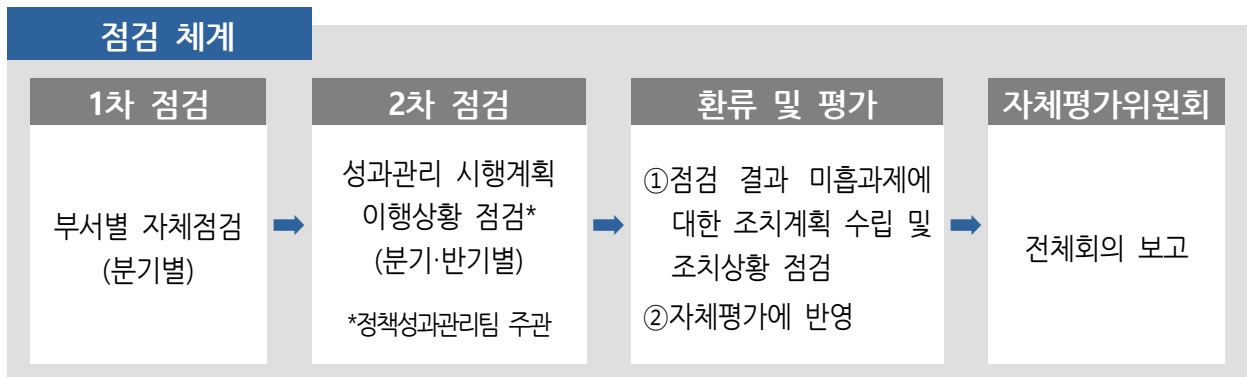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2.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3.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I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법무부 성과관리 점검체계」 구축·운영

-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및 추진실적의 상시적 관리·점검체계를 구축
 - ※ BSC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소관 부서의 관리지표로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
- '26년 법무부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별 추진정도, 성과 달성정도 및 미흡과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점검 개요

- 1차 점검: 부서별 자체점검
 - (점검 대상)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48개)의 이행상황
 - (점검 내용) 연초 수립한 과제별 시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 및 성과 지표의 목표 달성도 등
 - (점검 주기, 방법) 분기별,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부서별 자체점검 후 실적 입력

○ 2차 점검: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 (점검 대상)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48개)의 추진실적
- (점검 내용)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상황,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각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
- (점검 주기, 방법) 분기별, 반기별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책성과관리팀 주관 실적 점검·확인, 자체평가위원회에 점검 결과 보고

○ 환류 및 평가

- (지도점검) 성과지표 실적 관리를 포함한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전반에 대해 기관별 점검
- (미흡과제 관리) 이행상황 점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계획 이행여부 점검·관리
- (자체평가에 반영) 자체평가 시 '추진일정의 충실성'(7점),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30점)' 지표로 평가·관리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 운영 근거

- 「정부업무평가법」 제1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법무부 훈령 제1363호, 2021. 6. 28.)

○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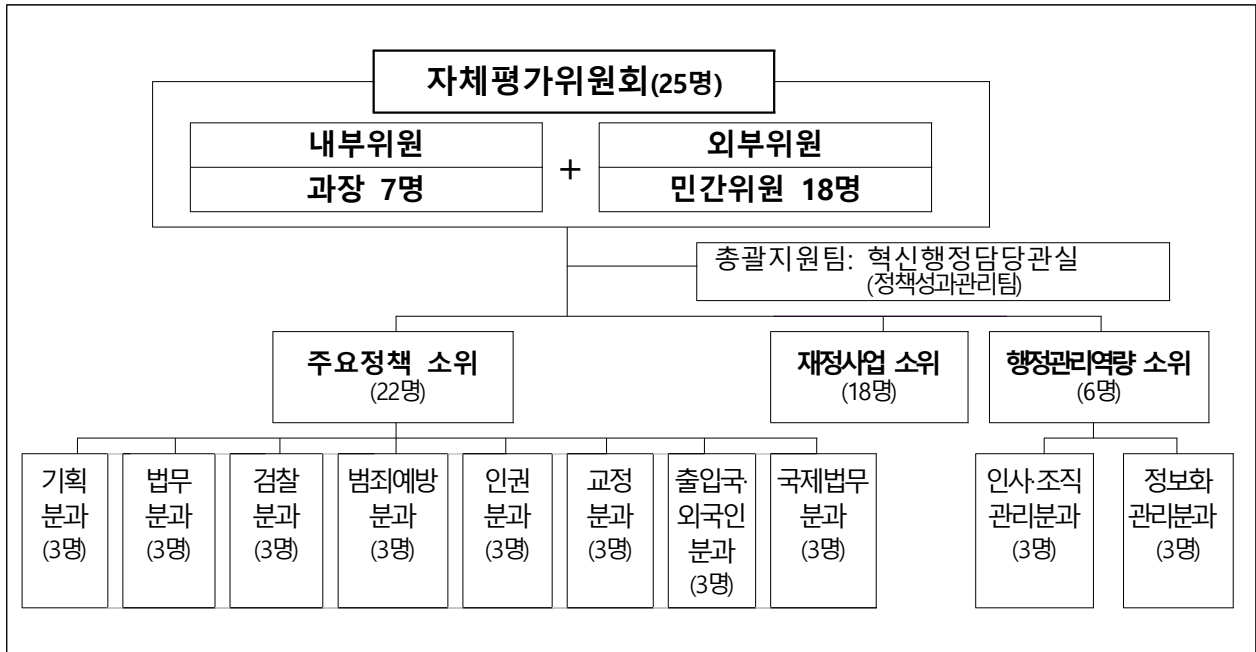
-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 실시, 평가 제도 개선 및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소관 분야별 안건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검토·심의

○ 의사 결정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안건에 따라 서면/영상회의 등 가능)

<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체계도 >



※ 민간위원은 일부 부문 및 분과를 겸임

2.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 목 적

- 자체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예산·조직·인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류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분야별 활용방안

○ 정책 개선

-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주요 정책 평가 결과 5~7등급에 속한 과제의 담당 부서장은 자체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후 다음 연도 성과관리 시행 계획에 반영
- 미흡 과제에 대해서는 미흡원인에 대해 대외 환경, 인력, 조직 구조 등 종합적 차원의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조치계획 수립

○ 예산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선정
-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를 기획처 '열린재정' 사이트에 공개

○ 조직

-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7등급)를 점수로 환산하여 BSC 조직평가에 반영

○ 인사

- 주요정책 매우우수(1등급) 과제 담당자에 대해 인사 가점(승진후보자 명부 가점 0.25점) 부여
- 승진심사를 위한 종합서열명부 작성 시 주요 정책 자체 평가 결과가 반영된 BSC 개인평가 점수 반영(10%)
- 직무성과계약서의 목표·단위과제 설정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 목표 또는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그 평가 결과를 승진심사 등에 반영
-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주요 정책 자체 평가 결과가 반영된 BSC 개인평가 점수 반영(10%)

○ 포상

- 매우우수(1등급) 과제 담당자에게 장관표창, 포상휴가(5일) 등 부여
- 매우우수·우수(1, 2등급), 전년대비 3등급 이상 개선 과제 담당 부서에 포상금 지급

○ 성과급 및 성과연봉

- 매우우수(1등급) 과제 담당자는 성과급(성과연봉) 1등급 상향 지급
- 성과급(성과연봉) 심사 시 자체 평가 결과가 반영된 BSC 개인평가 점수를 반영(30%)

3.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성과관리 단계

- 성과관리시스템은 BSC(균형성과평가제도)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IT기반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고객·정책(업무)·운영/행정개선·학습성장 등 '4개' 관점에서 과제 및 지표의 실적을 관리
- 지표의 성격에 따라 분기·반기·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성과평가 부문 : 조직 및 개인

○ 조직 성과평가

- 평가항목은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와 '조직 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비율은 '성과지표 평가' 90%, '성과기여도·업무난이도' 10%로 함
-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란 지표의 목표달성도를 뜻하며,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점수 산정
 - ※ 자체 평가 결과의 경우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에 반영되어 조직 평가점수로 산정
- '성과기여도·업무난이도 평가'는 평가군별 평가자의 정성평가를 뜻하며, 조직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
- 기관 및 부서 단위로 각각 평가가 진행되고, 부서의 조직 평가점수 산정 시, 상위 조직의 조직 평가점수가 40% 반영

○ 개인 성과평가

- 조직 평가점수는 개인 평가점수의 기준이 되어
- 과/팀장급 이상 부서장은 부서의 조직 평가점수를 개인 평가점수로 하며
- 부서원의 경우, 부서장이 조직 평가점수의 ± 3 점 범위 내에서 성과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 평가결과의 환류

- BSC 개인 평가점수를 승진 명부 작성(10%), 성과급 등급 결정(30%), 교육훈련자 선발(10%) 시 반영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4	0 (0%)	0 (0%)	2 (50%)	2 (50%)	3 (%)
성과목표	8	10	0 (0%)	1 (10%)	3 (30%)	6 (60%)	5 (50%)
관리과제	48	86	0 (%)	2 (2.3%)	71 (82.6%)	13 (15.1%)	79 (91.9%)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보호관찰 재범률(%)	(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재범자 수 / 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 100	6.1%	정량	결과	
2.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법무부 수용 건수 ÷ 인권위 권고 건수(일부 수용의 경우 0.5건으로 집계)	90	정량	산출	
3.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전자공증시스템 이용실적(점)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전자공증 완료건수×0.1	302	정량	산출	
4.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체류민원 만족도(점)	전자민원 및 방문민원 만족도 설문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 / 참여자 수	93.5	정성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1.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점)	한국행정연구원의 연도별 사회통합실태조사 상 검찰 신뢰도(4점 만점) × 25	60.1	정성	결과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집중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당해연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인원 중 재범자 수 / 당해연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인원) × 100	10.1	정량	결과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 인권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권가치를 실현한다	인권교육 만족도(점)	인권감수성교육 종료 후 조사한 개인별 교육 만족도 점수의 합 / 교육자 총 수	91	정성	결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실적(건)	[(상담건수×1)+(경제·의료·주거지원건수×4)+(신변보호·범죄피해자현장정리·법정동행건수×5)] / 1,000	164	정량	산출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일일평균 교정시설 수용률(%)	(연간 1일 평균 수용인원 / 수용정원) × 100	117	정량	산출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자 수 / 총 응답자 수) × 100	80	정성	결과	
III.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실적(점)	- 송무지도점검 각 1점 - 송무교육 1점 - 소송총괄관 회의 각 10점 - 세미나 및 업무협의 5점 - 주요 사례집 발간 각 10점	126	정량	과정	
2. 국제법무 대응 시스템 강화로 국익을 수호한다	법률 ODA 프로그램 품질평가(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86.5	정성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V.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전자여행허가 (K-ETA) 신청 시 정밀심사 실적(건)	국가별 동향 파악(불법체류자, 입국거부자), 각종 정첩보, K-ETA 분석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등을 활용하여 자동허가(OK)처리된 신청 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후 정밀심사 대상자로 재분류된 자의 수	773	정량	산출	
2. 국격에 걸맞은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p>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만족도 합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체 응답 중 '매우만족 + 만족'의 비율의 합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가중치기준) 교육참여자수를 기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70%), 조기적응프로그램(20%),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10%) 각 가중치 부여 	89	정성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1.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①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교란 범죄 기소 실적(불구속기소 1건당 0.06점, 구속기소의 경우 가중하여 1건당 0.12점) - 자본시장교란 범죄 추정 보전 실적(1건당 0.06점, 추정보전 금액 천억 원당 0.12점) - 공정거래위반 범죄 기소 실적(기소 1건당 0.06점, 고발요청권 행사 건의 경우 가중하여 0.12점) -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및 각 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실적 1명당 0.06점 - 유관기관 협업 사례(회의 개최, 규정 및 지침 개정, 합동수사 등) 1회당 1점 	97.7	정량	산출	
② 중대산업제해 엄정 대응 및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	산업제해범죄 엄단 활동 실질화 실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서 제출시 각 2점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포함 시 3점, 양형기준 마련시 5점 ○ 중요노동사범 기소인원 ×0.5점, 구속인원×5점 부여 ○ 홍보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공영방송(TV, 신문(중앙일보) 보도(각 2점) - 지방신문, Radio 및 중편방송 보도(각 1점) - 유튜브, 포털사이트 보도(각 0.5점) ○ 유관기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횟수당 각 2점 - 참여원의 수(중요요 3개 이상 2점 및 3개 미만 1점 가중치 부여) 	282.5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공정선거를 해치는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선거범죄 예방 활동 실질화 실적(점)		○ 관련 홍보실적은 건수에 가중치 2점 (보도자료 배포, 언론 인터뷰, 홈페이지 팝업 설치 홍보 이메일 발송 등 건수×2점)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건수에 가중치 1.5점(개최건수×1.5점) ○선거수사 관련 전문 교육은 실시 건수에 가중치 2점 (실시건수×2점) ○선거사범 기소시 양형 기준적용률은 1%에 가중치 0.5점 ○ 선거 관련 검사회의 (전국)는 실시 건수에 가중치 5점 (실시건수×5점)	294	정량	산출					
			○ A와 B를 합산한 수치 - 한국요청 실적(A) 이행건수/요청건수×100 - 외국요청 접수 실적(B) 이행건수/접수건수×100 ○ 가중치 항목 - 요청일 기준 이행일이 1년 이내인 경우(2점) - 국제회의 직접 개최(1점) - 국제회의 참석(0.5점)					84.9	정량	산출	
			○ 추진 항목(점수) -유관기관 등 협의(각 10점) -검토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의결(각 10점) -법령 제개정안 검토·마 련(각 30점) -법령 제개정 입안보고· 입법예고·제출공포·시행 (각 30점) -학술대회, 회의·세미나 등 참가(각 5점) -보도자료 배포(각 10점) ○ 가중치 항목 -장차관급 회의(1점) -실·국장급 회의(0.5점) -국제회의 직접 개최(1점) -국제회의 미개최(0.5점)								
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및 제도 정비(점)	범죄수익 환수율	전국 청에서 몰수추징보전 창구한 범죄수익에 대한 범원의 보전 결정 건수	3,719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⑥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별 추진 항목마다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제도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 산정 ○ 추진항목(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화여론조사세미나 등 의견 수렴(각 15점) -연구용역 및 해외 사례 분석 연구(각 10점) -유관기관 등 협의(각 5점) -검토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의결(각 10점) -법령 재개 정안 검토마련 (각20점) -법령 재개정 입안보고 입법예고·제출 공포·시행 (각 30점) -학술대회, 세미나 참가 (각 5점) -보도자료 배포 (각 10점) 	270	정량	산출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	(연중 전자감독대상자 특 정범죄 재범건수 / 특정범죄 전자감독 실시건수) X 100	1.14	정량	산출	하향 지표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등 처우 프로그램 횟수(회)	연중 전자감독 대상자 (특정범죄) 심리치료 등 처우프로그램 집행 횟수 / 특정범죄 전자감독 실시 건수	4.7	정량	산출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 공감대 형성	정책홍보 활성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설명자료, 기고, 인터뷰 등 배포(건당 1점) ○ 범죄예방정책국 홍보 웹진 발간(건당 10점) ○ 홍보 영상물 제작 (건당 5점) ○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 제작(건당 3점) ○ 정책홍보행사 기획 등 (건당 10점) 	443	정량	산출	
	온라인 홍보실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구독자 수 (명당 1점) ○ 홍보영상(유튜브등) '좋아요' 건수(건당 1점) ○ 홍보물 온라인 포스팅 (건당 1점) 	4,243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비행예방교육 평가점수(점)	교육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 실시 (평가점수합계 /평가참여 인원)	94.29	정량	산출	
		비행예방 전문교육 과정 운영 횟수(회)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 센터 비행예방 전문교육 과정 운영 실적 평가	264	정량	산출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 교육목표 달성도(점)	(자격증 취득개수 / 3,891개) × 0.3+ (검정고시 합격인원 / 응시인원) × 0.2+ (진학편입학인원 / 졸업장취득+검정고시 합격인원) × 0.2+ (인성교육 수료인원 / 30,321명) × 0.1+ (봉사활동 참여 인원 / 360명) × 0.1+ (가족관계회복 지원* 실적 / 804건) × 0.1 *가정관 운영 실적+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실적	1.22	정량	산출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정신재활 치료 프로그램 수료자 기능 개선율(%)	(당해년도 개선인원 / 당해년도 수료인원) × 100 *정신재활치료에 선발된 피치료감호자 중 기간 내 프로그램을 수료한 인원	83.3	정량	산출	
⑥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추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당해연도 고위험 대상자 재범자수 / 당해연도 고위 험대상자 실시인원) × 100 ※ 고위험 대상자 :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유괴, 마약, 보복, 스토킹 등 8개 사범 및 가중료가 출소, 치료감호기간만료 후 보호관찰, 형기종료 보호 관찰, 치료명령	5.0	정량	산출	하향 지표
		마약사범·치료명령 대상자 1인당 집중면담 및 연계상담 실시 횟수(건)	마약사범·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 집중면담 및 연계상담 실시 횟수 / 연도말 마약사범·치료명령 보호관찰 현재인	4.7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사회복귀율(%)	사회복지 인원*/사회복귀 지원 종료인원**X100 * 자립 인원+ 주거 마련 인원 + 자활 인원 - 자립 : 숙식제공 종료자 중 취업, 300만 원 이상 저축, 보호자 인도 - 주거 마련 : 주거지원 종료자 중 전월세 및 자가매입, 계약전환 - 자활: 직업훈련 참여자 중 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 일자리 프로그램 수료자 중 취업 ** 숙식제공 종료 인원, 주거지원 종료 인원, 직업훈련 종료 인원, 일자리프로그램 수료 인원	83.08	정량	산출		
							⑧ 대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질서·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 인권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권가치를 실현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옹호 활동(점)	활동실적×가중치 - 협의회) 횟수 x 5 - (간담회·부처의견조회) 횟수 x 4 - (인권모니터링) 횟수 x 4 - 인권정책의견제시) =(부내정책의견제시) 횟수 x 1 +(법률안의견제시) 횟수 x 1.7 +(국제인권규범 의견제시) 횟수 x 3 - 국제인권관련 회의 참석 횟수 x 3 - (카드뉴스, 발간물 등 발간) 건 x 3 ※ 우리과 추진 법안 가점 -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건 x 5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건 x 10 - 국회 본회의 통과 건 x 20	442	정량	산출	
--------------------------	---------------------------------	---	-----	----	----	--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실태조사 활동 실적(점)	(정기실태조사 기관수×7)+(주제별 집중실태 조사기관수×21)+ (개선조치 건수× 4)+(설문조사인원×0.2) +(면담인원×1) +(보고서작성×2) +(주제별·집중실태조사 보고서작성×10)	3,304	정량	산출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실적(건)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건수	3,085	정량	산출	
③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지원 만족도 (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실제 정책 체감도를 측정(이전과 동일하게 종사자 만족도는 조사 대상 에서 제외(과거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	91.4	정성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 지원 실적(건)	법률구조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소상공자영업자,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자, 장애인, 플랫폼 종사자 등) 법률지원 건수의 총합, 법률구조 플랫폼 등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 협력 건수의 총합	19,000	정량	산출	
		스마일센터 지원 실적(건)	스마일센터심리지원·사회· 법률 임시주거 등 지원실적의 합계	90,000	정량	산출	
④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인원(명)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인원 측정	83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피해자 법률조력 및 진술조력 지원 건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등 지원대상 범죄에 대한 법률조력 지원건수 산출	43,500	정량	산출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신규 수용공간 확충 실적(명)	○ 수용정원 순증인원 = (금년도 수용정원 - 전년도 수용정원)	400	정량	결과																										
	교정시설 조성사업 관련 갈등 해소 노력 실적(점)	○ 협업 관련 점수 합산 - 기관별 갈등 민원 해소 (60점)×건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th>내 용</th><th>점수</th></tr> </thead> <tbody> <tr><td>사업중지</td><td>0</td></tr> <tr><td>협업체구성</td><td>15</td></tr> <tr><td>합의안도출</td><td>30</td></tr> <tr><td>합의서체결</td><td>45</td></tr> <tr><td>사업정상화</td><td>60</td></tr> </tbody> </table> - 관계기관 협의 (5점)×건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th>내 용</th><th>점수</th></tr> </thead> <tbody> <tr><td>협의요청</td><td>1</td></tr> <tr><td>협의실시</td><td>3</td></tr> <tr><td>협의결정도출</td><td>5</td></tr> </tbody> </table> - 민원 관련 협의 현장 방문(10점)×건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th>내 용</th><th>점수</th></tr> </thead> <tbody> <tr><td>현장방문실시</td><td>5</td></tr> <tr><td>현장문제 파악완료</td><td>10</td></tr> </tbody> </table>	내 용	점수	사업중지	0	협업체구성	15	합의안도출	30	합의서체결	45	사업정상화	60	내 용	점수	협의요청	1	협의실시	3	협의결정도출	5	내 용	점수	현장방문실시	5	현장문제 파악완료	10	474	정량	산출
내 용	점수																														
사업중지	0																														
협업체구성	15																														
합의안도출	30																														
합의서체결	45																														
사업정상화	60																														
내 용	점수																														
협의요청	1																														
협의실시	3																														
협의결정도출	5																														
내 용	점수																														
현장방문실시	5																														
현장문제 파악완료	10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방문설명 (10점)×건수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방문일정협의를</td> <td>3</td> </tr> <tr> <td>방문설명</td> <td>7</td> </tr> <tr> <td>협조사항원료</td> <td>1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기관 현장점검(5점)×건수 <table border="1"> <thead> <tr> <th>내 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점검 실시</td> <td>3</td> </tr> <tr> <td>점검결과 보고</td> <td>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및 간담회 (15점)×건수 <table border="1"> <thead> <tr> <th>내 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개최계획수립</td> <td>3</td> </tr> <tr> <td>설명회. 간담회 개최</td> <td>7</td> </tr> <tr> <td>결과보고</td> <td>10</td> </tr> <tr> <td>후속조치</td> <td>15</td> </tr> <tr> <td>사업정상화</td> <td>60</td> </tr> </tbody> </table>	내용	점수	방문일정협의를	3	방문설명	7	협조사항원료	10	내 용	점수	현장점검 실시	3	점검결과 보고	5	내 용	점수	개최계획수립	3	설명회. 간담회 개최	7	결과보고	10	후속조치	15	사업정상화	60				
내용	점수																																
방문일정협의를	3																																
방문설명	7																																
협조사항원료	10																																
내 용	점수																																
현장점검 실시	3																																
점검결과 보고	5																																
내 용	점수																																
개최계획수립	3																																
설명회. 간담회 개최	7																																
결과보고	10																																
후속조치	15																																
사업정상화	60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정책홍보 노력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설명자료 배포(건당 1점) - 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현황 (건당 5점) - 국민 참여 정책홍보 행사(건당 5점) - 기획 취재 및 보도 (건당 10점) - 드라마, 다큐, 예능 등 기획(건당 10점) 	1,636	정량	산출																												
	SNS 활성화 실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구독자 수*2 - 유튜브 댓글 건수*1 - 유튜브 좋아요 건수 *1 -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2 - 인스타그램 댓글 건수*1 - 인스타그램 좋아요 건수*1 	44,595	정량	산출																												
③ 교정 접견 서비스 활성화	사회적 약자 장소변경접견 이용 건수(건)	당해연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장소변경접견 이용건 수	153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스마트접견 횟수(건)	당해연도 스마트 접견 이용 건수	805,846	정량	산출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4 또는 5등급 판정을 받고 3년 전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한 인원 비율	33	정량	결과	하향 지표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다면적 평가 시행 실적(건)	'26년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다면적 평가 시행 실적	2,134	정량	산출	
		조건부 가석방 허가 실적(명)	'26년 조건부 가석방 허가 인원	146	정량	산출	
		직업훈련 수형자 만족도(점)	(만족이상 답변인원 / 총 응답자 수) x 100	86	정성	결과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직업훈련 수형자 자격증 취득률(%)	(자격증 취득 수 / 직업훈련 수형자 인원) x 100	59.6	정량	산출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응시 인원(명)	○ Ax(1+0.1-B) - A: 기준값(최근 3개년 평균 검정고시 응시인원) - B: 수용변동률 (최근 3개년)	109	정량	산출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사회적처우 실적(점)	○ 사회적처우 * (실시 인원 또는 실시 횟수) - 귀휴(명) * 3점 - 가족만남의 집(명) * 2점 - 가족만남의 시간(명) * 1점 - 가족사랑캠프(횟수) * 10점 - 사회봉사(명) * 1.5점 ※ 가족사랑캠프는 실시횟수, 그 외 모두 실시 인원으로 점수 부여	16,368	정량	산출	
			○ 가점 가족사랑캠프 1박2일 실시 에 따른 가점 부여 - 1박2일 + 10점(회당) - 농촌일손 돕기, 수해복구, 설해 복구 시 지역농협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연계해 사회봉사를 실시한 경우, 가점 부여 1회 + 3점 ○ 귀휴 기간에 따른 가점 부여 -7일-9일 + 1점 -10일-14일 + 1.5점 -15일 이상 + 2점 ※ ' 26년 귀휴 계획 인원 대비 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획득한 귀휴 관련 BSC 점수 중 1/2 감점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건강검진 실시율(%)	(당해연도 건강검진 실시 인원 / 당해연도 일 평균 수용인원) x100	75.8	정량	산출		
	만성질환자 정기적 측정률(%)	(고혈압·당뇨 환자 중 매월 주기로 혈압, 혈당 측정 인원 / 당해연도 고혈압·당뇨 환자 총원) x100	50.0	정량	산출		
⑧ 재범 방지를 위한 수용자 맞춤형 심리치료 체계 강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문화 실적(점)	- 워크숍 등 각종 회의 및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횟수×5점) - 프로그램 시범운영(건수×10점) - 전문인력 양성(당해연도 전문인력/전년도 전문인력 인원×100)	482	정량	산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집행 실적(점)	- 기관별 월평균 참여 인원 (인원×5점) - 기관별 연평균 실시 횟수(횟수×10점)	156	정량	산출		
⑨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체계 강화	마약사범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 구축(점)	- 마약사범재활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교정시설 지정(기관×10점) - 유관기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참석 (횟수×5점) - 중독재활 관련 정책 홍보실적(횟수×1점)	52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 중독관련 전문가 양성 인원(당해연도 전문인력/전년도 전문인력 인원×100)				
		마약류사범 중독 재활 프로그램 집행실적(점)	(이수 인원) X(과정별 점수) 합계 - 기본 1점 - 집중 2점 - 심화 3점 - 회복이음 4점	2,469	정량	산출	
III. 선진적인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미래번영 및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민법」 전면 개정 등 추진	「민법」 등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점)	○ 활동실적×가중치 -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1회x10점) - 가족법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1회x10점) -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회회의(1회x5점) -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회의(1회x5점) - 공청회(1건x30점) - 공동 학술대회 (1건x20점) - 입법예고(30점) - 연구용역(30점) - 전문가 의견 수렴 (1건x5점) - 유관기관 협의 (1건x5점) - 여론조사 (1건x10점) - 법제처 심사 (1건x10점) - 국회제출(30점) - 국회 설명(1건x30점) - 언론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1건x15점)	630	정량	과정	
	②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공증 제도개선 및 신뢰도 제고(점)	○ 공증 관련 법령 등 개정 - 법률안국회통과 (제 개정 조문 1개당 20점) - 하위법령 공포(제 개정 조문 1개당 10점) - 각종 지침 제 개정 (조문 1개당 10점)	4,392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제도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안건 수×10점 - 공증실무협의회 회의 건수×10점 - 제도개선의견수렴 건수×10점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지정·고시 (고시1개 법인당 1점) ○ 공증제도 관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법령 유권해석 건수×10점 - 공증연구용역 건수×30점 - 공증인·보조자, 재외공관 공증담당자 교육 건수×10점 ○ 전자공증시스템 개선·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프데스크 질의응답 건수×0.1점 - 전자공증이용건수×0.5점 - 모바일앱다운로드 건수 ×0.05점 - 시스템 기능개선 건수×20점 - 지정공증인 교육 (지정공증인 1명당 20점) - 지정공증인 고시 (1명당 20점) ○공증 홍보 건수×20점 				
		공증 신뢰도 제고 실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인 정계·공증 신뢰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감사 외 특별감사 실시 건수×10점 - 공증인정계위원회심의 건수×20점 - 공증인 정계 관련 행정소송 심급별 승소 건수×20점 	403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인 징계 관련 행정심판 기각각하 건수×20점 ○ 공증 사무 적정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증사무 이의신청 사건 처리건수 1회×10점 - 계도공문 실시건수×10점 -재외공관 공증사무 협의 및 지도 점검 횟수×10점 				
	③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국고손실 환수실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제기 및 지급명령신청 건수(건당 20점) ○ 주요 소송행위 승인 건수(건당 15점) ○ 삼급별 승소 금액 (천만원 당 1점), (최종심의 경우 환수 완료 금액) ○ 국고손실 환수소송 홍보(건당 20점) ○ 사례 전파(건당 5점) 	6,093	정량	결과	
	④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행정소송 대응 실적(점)	<p>□ 승소율(70점)+중요사건 금액 방어율(30점) : 10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소율(A) : 70점 $x = \text{당해연도 승소율} - \text{직전 2년 승소율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 \geq 0$인 경우 : $A = 70 + 0.125 \times x^2$ ▷ $x < 0$인 경우 : $A = 70 - 0.125 \times x^2$ - 중요사건 금액 방어율(B) : 30점 $y = \text{당해연도 중요사건 금액 방어율} - \text{직전 2년 중요사건 금액 방어율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 \geq 0$인 경우 : $B = 30 + 0.125 \times y^2$ ▷ $y < 0$인 경우 : $B = 30 - 0.125 \times y^2$ <p>※ 금액 방어율(B) 산출식 $\text{금액방어율} = \frac{\text{당해연도 중요사건 금액방어율}}{\text{당해연도 중요사건 금액방어율}}$</p>	100.5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A~I를 합산 - 학술 등 회의 점수(A) ▷ 학술대회(1회 10점) ▷ 연구회의(1회 5점) - 법령 개정 점수(B) ▷ 법률 개정(1건 10점) ▷ 대통령령 개정(1건 5점) ▷ 부령 개정(1건 3점) ※ 발표 등 활동 내용은 회의 등 점수 준용 - 자료집 점수(C) (1건 10점, 200쪽 이상 20점, 등재지 30점, 논문 공모전 수상자 학술지 게재 1건 5점, 논문 공모전 점수 1건 2점)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점수(D) ▷ 위원회 등 연구반 구성(1건 10점) ▷ 위원회 활동(1회 5점) - 연구용역 점수(E)(1건 10점) - 연구 성과 기여도(F) ▷ 유관기관 정책 협력 (1건 5점) ▷ 정책 관련 검토 의견 제시 (1건 5점) ▷ 정책 반영(1건 10점) ▷ 연구자료 활용(1건 5점) ▷ 연구자료 정책 반영 (1건 10점) ▷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도 연구 반영(1건 10점) - 법률 지문 활동 기여도(G) ▷ 정부 발의 법률안 검토 (1건 5점) ▷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1건 10점) ▷ 검토 법률안 국회 통과 (1건 15점) ▷ 검토 법령 대통령령 개정 (1건 10점) ▷ 검토 법령 부령 개정 (1건 5점) - 홍보 활동(H)(1회 15점) - 유관 기관 협력(O) (1회 5점)	929	정량	산출	
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북한법령 연구 및 통일대비 법적쟁점 연구실적(점)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통일과법률 아카데미 등 교육운영 실적(점)	○A~F를 합산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강 인원(A) (단, 수료 인원의 경우 1명 당 2로 계산) -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 만족이상 90%(100점) ▷ 만족이상 80%(90점) ▷ 만족이상 70%(80점) ▷ 만족이상 70%미만(60점) - 홍보 점수(C) (매체별 1건 15점) - 기타 통일법무 교육(D) (1회 10점) - 유관 기관 협력(E) (1회 5점) - 통일법제 전문성, 자료 관리 및 남북관계 상황 분석(F) ▷ 통일법제 전문인력 확보 (1건 5점) ▷ 남북법제 등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1건 5점) ▷ 논문 공모전 수상작 학술지 게재 1건 5점 논문 공모전 접수 1건 2점 ▷ 북한전문가 간담회 등 (1건 10점)	586	정량	산출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등 실적(점)	○A~F를 합산 - 법률교육 점수(A)(1회 7점) -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 만족이상 90%(30점) ▷ 만족이상 80%(25점) ▷ 만족이상 70%(20점) ▷ 만족이상 70% 미만(15점) - 법률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등개최, 교재 제작(O) (1건 20점) - 법률교육 피드백 점수(D) (1건 2점) - 홍보 활동(E) ▷ 언론 보도(1건 15점) ▷ 기타 매체 홍보(1건 10점) ▷ 오프라인 홍보(1건 5점) - 유관 기관 협력(F) ▷ 법률교육 관련 업무협의 (1건 5점) ▷ 유관기관 회의(1건 5점)	356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적(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를 합산 - 온라인·모바일 등 북한이탈주민 상담 건수(A) - 소송구조 연계 건수(B) - 홍보 활동 건수(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보도 ▷ 기타 매체 홍보 ▷ 오프라인 홍보 - 유관 기관 협력 건수(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기관 협력 지원 ▷ 유관 기관 간담회 	546	정량	산출	
	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사법 개정	상사 법령·제도 개선 실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실적×가중치 1) 개정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개최 (1회x20점) - 공청회·토론회 등 행사 개최 (1건x20점) - 전문가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1건x20점) ▶자문(1건x10점) - 유관기관 협의(1건x20점) 2) 법률안 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보고 (1건x15점) - 입법예고 (1건x10점) - 국회 제출 (1건x15점) - 국회 설명 (1건x10점)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보고 (1건x15점) - 입법예고 (1건x10점) - 차관회의 (1건x10점) - 국무회의 (1건x10점) 4)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 (1건x20점) - 대국민 홍보 (1건x20점) 	620	정량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⑦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변호사시험 시행 및 법조인 선발 양성 제도 개선 실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실적합산 - 시험문제은행 구축 (건수×20점) - CBT 시험 대응 · CBT 시스템 점검실적 (건수×10점) · CBT 시험관리 인력 교육 실적 (건수×10점) - 장애인 편의제공 (인원수×10점) - 시험 관련 사고·민원 검토처리 (건수×10점) - 시험 문제 이의제기 신청률 8% 이하 달성 ·(점수) = 25점 + (8-신청률) × 1점 ※ 신청률(%) = 이의제기 문항수/ 총 문항수×100 -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개정 (건수×50점) - 제도개선 실적 · 변호사시험 CBT 관련 전산화 확대 (건수×35점) · 기타 (건수×30점) - 제도 연구용역 등(건수×30점) - 법조인 선발·양성 관련 공청화회의 등 참석 및 개최 (건수×20점) - 보도자료 등 정책홍보 (건수×15점) 	888	정량	산출	
		변호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률 2% 이하 달성(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정답 인정률 2% 이하 달성 - (점수) = 100점 + (2-인정률) × 16점 ※(복수정답인정률) = 복수정답 인정 문항수 / 총 문항수 × 100% 	132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국제법무 대응 시스템 강화로 국익을 수호한다							
	①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점)	<p><국제규범 및 국제협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안 참여(각 3점) - 안건 검토 등 사전회의(x1) - 국제회의 등 참석(x2) - 국제세미나 개최(x3) ○ 국내도입가입 추진(각 5점) - 국제규범·협약 연구 및 입안 사전준비 등(x1) - 입법안 초안 마련 및 부내협의, 협약 가입 준비 등(x2) - 입법안 완성 및 관계기관 협의·각종 평가·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협약 서명(x3) - 국무회의 등 국회제출, 협약 비준 지원(x4) <p><국제교류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대응(각 5점) ○ 예방 대응(각 10점) ○ 협력 강화 등 결과 (각 10점(가산)) <p><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반환 지원 - 접수 및 지원(각 3점) - 아동반환 절차(각 5점) - 우호적 해결(각 7점) ○ 타 중앙당국, 관계기관 협의 등(각 5점) ○ 제도개선 추진(각 5점) <p><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자문사 승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등(각 5점) ○ 법률시장 개방 관련 대응 및 협의 등(각 10점)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지 등 자료발간(각 10점) ○ 보도자료 등 홍보(각 5점) 	569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법률 ODA(점)	<p><법률 O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정비 지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협력기관 회의 간담회 등 참석(각 5점) - 자료발간, 보도자료 등 홍보(각 5점) - ODA 교육 이수(각 10점) - 개도국 법제 관련 연구 및 세미나 개최(각 20점) - 개도국 실무자 등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각 20점) * 직전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시 개선의견 또는 만족불만족 사유 반영 건수(각 5점(가산)) ○ 법제정비 단계(누적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연구, TF 구성 등 초기 준비(10점) - 비교법 연구, 법률안 초안 도출 등 준비(10점) - 공청회 실시, 주요 의견 반영한 법률안 수정본 도출(10점) - 정부 내부 검토 완료, 국회제출 준비 또는 국회 제출(10점) - 법률 제정 완료 및 공포(국회 통과 직전단계 포함)(10점) 	186	정량	산출	
	②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처·기업 등 국제법률지원 체계 구축	정부부처·지자체 등 법률지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서 등 각종 서면 제출건수(각 10점) - 재판 등 기일 참석 건수(각 10점) - 국제소송 수행·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전략실무회의 개최(각 10점) - 국제법무 현안 및 국제소송 분쟁 등 관련 자문 제공 건수(각 10점) 	3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제도개선	국제투자분쟁 (ISDS) 예방(점)	국제투자분쟁 (ISDS) 예방(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정 관련 법률 지원 건수(각 14점) - ISDS 예방 교육 개최 (각 12점) - 국제회의 관련 회의 참석 및 검토 건수(각 8점) - ISDS 예방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모니터링 수행 및 실무회의 개최(각 8점) - ISDS 예방 관련 자료 발간 및 개정(각 6점) 	320	정량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건수(각 1점) - 해외진출기업 법률설명회 개최 건수(각 1점) - 해외진출기업 관련 자료발간(각 1점)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만족도 조사 (만족도 점수=만족도 총합/응답자 수) ▷ 매우 만족 50 ▷ 만족 40 ▷ 보통 30 ▷ 불만족 20 ▷ 매우 불만족 10 	503	정량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회의(각 20점) - 전략회의 등 기타 회의(각 15점) - 심리기일 참석(각 20점) - ISDS 주요 서면 제출(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자문위원 자문 의견건수(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교육, 간담회, 세미나 개최(각 10점) - 보도자료, 알림 등 홍보(각 15점) 	54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SDS 제도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관련 국제 회의 참석(각 25점) - 제도개선 관련 검토의견 및 의견서 제출(각 25점) - 제도개선 관련 정부대표단 사전회의 개최, 참석건수(각 10점) - 제도개선동향관련 외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건수(각 20점) - 내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 및 참석건수(각 15점) - ISDS 제도 관련 출판 (발간) 건수(각 15점) 	180	정량	산출	

IV.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	입국 외국인 중 자동심사 이용자 수 /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11.2	정량	산출	
	제도개선 실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지침, 고시 재개정 사항 (건당 20점) - 소속기관 제도개선 건의 채택 등 정책개선 실적 (건당 20점) -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건당 15점) - 국민의견 수렴 건수 (건당 15점) - 국민신문고, 탄원, 청원, 국민제안 채택 실적 (건당 10점) 	760	정량	산출	
② 국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혁신적인 비자 정책 추진	해외 우수인재 유치실적(건)	K-STAR 비자트랙을 통해 거주자격(F-2-7S)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건수	233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 kr) 이용자 만족도(점)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참여자 수 ※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불만족 40, 매우불만족 20)	89.2	정성	결과	
③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지역기반 이민정책 제도개선 실적(점)		-법령 고시 제·개정 건수 (건 당 20점) -지침, 매뉴얼 등제 개정 건수 (건당 15점) ※제·개정 관련 중요도에 따른 가점 부여 ▶정책중요도 가점 (10점) - 국정과제와 연계, 대통령 등 지시사항 관련 ▶지방정부 협조 가점 (10점) - 지방정부 협조 요청에 따른 개선 사항	77	정량	산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채 택 등 국민 의견 수렴 건 수 (건당 20점) -소속기관 제도개선 건의 채택 실적 (건당 20점)				
			공공 계절근로 비중(%)				
④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강화 및 보호외국인 처우개선	출입국사범 유형별 적발 점수(점)	출입국사범 유형별 적발 실적	87,136	정량	산출		
	보호외국인 고충상담 실적(건)	고충상담 건수	26,878	정량	산출		
⑤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점)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수 ※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	85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⑥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점)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수 ※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	80	정성	결과	
		유관기관 정보연계 실적(건)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확대, 개선, 조정 장비 등 실적 건수	48	정량	산출	
	정책 홍보 노력도(점)	- 보도설명자료 배포, 기고, 언론 인터뷰 등(건당 1점) - 출입국 홍보 소식지 발간 (건당 10점) - 홍보 영상물 제작 (건당 5점) - 기타 홍보물* (건당 5점) *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등 ※ 다국어 홍보물 제작 시 건당 기본점수에 50% 가점 - 정책홍보 행사(간담회, 브로콜 정책현장 방문 등) 개최 (건당 10점) - 전년대비 SNS 팔로워 증가분 (백명당 1점)	1,020	정량	산출		
		정책수요자 소통 향상도(점)	- 출입국 현장투어 만족도 점수와 온라인 매체 홍보 만 족도 점수의 평균 - 설문항목별로 리커트 척도 5단계로 측정 후 배점 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의 합계 측정 - 가중치 부여 현장투어 참가자 만족도 (70%) 온라인 홍보 만족도(30%)	89.8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국격에 걸맞은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①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관청·단체·수준(건) ※ 업무난이도별 기준치 부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점) 장차관 이상 참석/30명 이상 참석/ 보도자료 배포한 협업 회의 건 (1점) 포럼·세미나 개최/ 타부처 위원 회 의견제출/ 해외 정책동향조사 파악 분석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건) - 소관 위원회 포럼 간담회 등 개최(건) - 관계부처 위원회 등 참석(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정책 동향 파악 및 사례 분석보고서(건) 	63	정량	산출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국적취득자의 국적증서 수여식 만족도 조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수 ※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불만족 40, 매우불만족 20) 	80	정성	결과	
		국적취득자 수(점)	'26년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한 국적취득자 수	15,442	정량	결과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 소양 충족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56.1	정량	산출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실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안 마련 (각 10점) - 유관기관 간담회, 회의 등 의견수렴 (각 5점) - 사회통합협의회 개최 (각 3점) -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유튜브 SNS 등 홍보실적 (각 3점) - 이민자 사회통합관련 자료 발간 (각 3점) 	1,0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④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난민심사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점)	○ 제도개선 - 법령 개정(30점) - 행정규칙 개정(20점) - 개선 및 개정(15점) ○ 역량강화 - 인증제 사업(10점) - 교육 및 평가(5점) - 연구 및 조사, 자료발간(5점) - 국제회의 등 참석(10점)	155	정량	산출	
		난민을 위한 처우지원 활동(점)	- 최근 3년간 생계비 집행률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화(100점 만점) - 생계비는 매일 지급되므로, 총 12번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화(10점 만점) - 정착, 자립역량 강화활동 (건별 10점) ※활동별 실적 집계	116	정량	산출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제도 운영 충실도(점)	①의견청취율=(의견청취 건수/전체 처리건수) *100 ②국가정황정보 반영률= (국가정황정보 의뢰회신 건수/전체 처리건수) *100 ③장기 적체 처리율(장기 적체 (24개월 이상) 처리건수 / 전체 처리건수)*100 개선도=①+②+③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특정항목위과한 초과 달성에 따른 종합지수 왜곡 방지 및 균형있는 성과달성을 위해 각 항목 실적은 목표값의 최대 105% 까지만 인정	44.2	정량	산출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1.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① 민생범죄·금융범죄 근절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제도 장려(국정 74-3) 사단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금융범죄 근절(업무 III-1-1)
②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 및 산업현장 범질서 확립		
③ 공정선거를 해치는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④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		사단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금융범죄 근절(업무 III-1-1)
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제도 장려(국정 74-3)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범죄 수익환수 체계 구축(업무 III-1-2)
⑥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		국민 참여와 인권 중심의 사법 제도 개선 및 사법개혁 추진 기구 설치(국정 6-1)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형사법 체계 정비(업무 III-6-1)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잉 형벌체계 개선(업무 III-6-2)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실질화(업무 III-8-2)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국정 74-1)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국정 74-2) 보호관찰 확대로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업무 III-3-1) 교제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업무 III-7-1)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 이해도 제고		
③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 강화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국정 74-1) 보호관찰 확대로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업무 III-3-1)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국정 74-1)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내실화로 소년범죄 예방(업무 III-3-2)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⑥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국정 74-1)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국정 74-4) 공급은 차단하고 중독은 치료하는 빈틈 없는 정책 추진(업무 III-2-2) 이상동기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및 정신질환자 재범 방지(업무 III-3-3)
⑦ 범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국정 74-1)
⑧ 대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범질서·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I.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 인권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권가치를 실현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②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③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시스템 확립	AI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국정 64)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국정 74-2) 온전한 회복을 돕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 추진(업무Ⅲ-7-2) AI를 활용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운영(업무Ⅲ-11-1)
	④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 보장 강화 (국정 6-3)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국정 74-2)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실질화 (업무 Ⅲ-8-2)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사업 추진	위기 상황에 처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집중 해결(업무 IV-1-2)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③ 교정 집건 서비스 활성화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 전환(업무 Ⅲ-9-1)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위기 상황에 처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집중 해결(업무 IV-1-3)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이상동기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및 정신 질환자 재범 방지(업무 Ⅲ-3-3)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 전환(업무 Ⅲ-9-1)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⑧ 재범 방지를 위한 수용자 맞춤형 심리치료 체계 강화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 전환(업무 Ⅲ-9-1)
	⑨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체계 강화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국정 74-4) 공급은 차단하고 중독은 치료하는 빈틈 없는 정책 추진(업무 Ⅲ-2-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Ⅲ. 선진적인 법무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한다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미래번영 및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민법」 전면 개정 등 추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을 위한 인력구조 및 제도 개선(국정 6-2) 현실과 법의 격차를 좁히는 「민법」 개정(업무 III-5-2)
	②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③ 부패·비리,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④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사법」 개정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국정 47-1)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및 후속 조치(업무 III-5-1)
	⑦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2. 국제법무 대응시스템 강화로 국익을 수호한다		
	①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 도입 및 법률 ODA	국제법무 역량 강화 및 국제분쟁 컨트롤타워 위상 적립(업무 III-12-2)
	②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처·기업 등 국제법률지원 체계 구축	전략적 국제소송 중재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대응(업무 III-12-1) 국제법무 역량 강화 및 국제분쟁 컨트롤타워 위상 적립(업무 III-12-2)
	③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제도개선	전략적 국제소송 중재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대응(업무 III-12-1)
Ⅳ.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한다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AI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국정 6-4) AI 기반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업무 III-11-3)
	② 국가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	AI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국정 6-4)
	③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지역·생활 밀착형 외국인 입국·체류 정책(업무 III-4-1)
	④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 및 보호업무 체계 개편	
	⑤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2. 국격에 걸맞은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①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지역·생활 밀착형 외국인 입국·체류 정책 (업무 III-4-1) 사회통합을 이끄는 출입국·이민 정책 수립 기반 마련(업무 III-4-2)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사회통합을 이끄는 출입국·이민 정책 수립 기반 마련(업무 III-4-2)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사회통합을 이끄는 출입국·이민 정책 수립 기반 마련(업무 III-4-2)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업무 III-9-2)
	④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균형 잡힌 난민제도 설계(업무 IV-2-1, IV-2-2)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